2020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목차

발간사

정책위의장
이 종 배

제1부
국정감사 종합평가

Ⅰ. 총평 008
1. 개요
2. 평가

Ⅱ. 문재인 정부 국정대참사 주요내용 010

Ⅲ. 주요 후속조치사항 014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국회운영위원회 019
▶ 법제사법위원회 027
▶ 정무위원회 035
▶ 기획재정위원회 043
▶ 교육위원회 05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65
▶ 외교통일위원회 073
▶ 국방위원회 081
▶ 행정안전위원회 08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9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5
▶ 보건복지위원회 123
▶ 환경노동위원회 131
▶ 국토교통위원회 135
▶ 여성가족위원회 145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 국회운영위원회 151
▶ 법제사법위원회 163
▶ 정무위원회 171
▶ 기획재정위원회 181
▶ 교육위원회 19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99
▶ 외교통일위원회 207
▶ 국방위원회 215
▶ 행정안전위원회 2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3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51
▶ 보건복지위원회 263
▶ 환경노동위원회 271
▶ 국토교통위원회 277
▶ 여성가족위원회 289

발간사

제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전례 없는 방탄국감'이었습니다. 의석수 2/3에 육박하는 초슈퍼여당은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한다'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국정감사무력화'에만 매달렸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증인 채택 거부와 국감 편파 진행, 또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및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탄국감'에 맞서 정부의 무능을 파헤치고, 실정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력형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엄마찬스 등 공정을 상실한 법무부 장관의 행태도 질타했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마저 전세난민으로 전락시킬 정도로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폐기를 촉구하고, 감사원의 조사결과 정권의 조작이 밝혀진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 등 탈원전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코드인사 전수조사를 통해 낙하산 인사의 부당성도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감 직전 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대참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방만하고 오만한 국정운영과 무능한 국정능력을 지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백서에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무능과 방탄국감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당의 미흡한 부분도 함께 기록하여, 내년도 국정감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검찰 고발, 예산 삭감과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보인 '방탄국감'이 재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역대 최악의 국정 감사 환경에서도 이 정권의 무능, 위선, 실정을 밝혀내고, 수준 높은 정책 질의로 국정감사를 이끌어준 당 소속 모든 의원님들과 보좌진, 당 정책위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위원회는 각종 현안을 '상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국민의 힘이 되는 정책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 종 배

2020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제1부
국정감사
종합평가

Ⅰ. 총평 ····· 008
1. 개요 ····· 008
2. 평가 ····· 008

Ⅱ. 문재인 정부 국정대참사 주요내용 ····· 010

Ⅲ. 주요 후속조치사항 ····· 014

국민의힘

Ⅰ. 총 평

1. 개 요

- 국정감사 기간 : 2020. 10. 7~ 10. 26
- 대상기관 : 643개 기관
  - 국가기관 259개, 광역자치단체 30개, 공공기관 등 307개, 지방행정기관 등 본회의 승인기관 47개

2. 평 가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대참사』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실정 및 실체규명을 위한 국감활동 전개

- 2020년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책임회피성 발언, 여당의 소극적인 증인채택 및 겨우 합의된 증인·참고인의 불출석 등으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청와대는 국회운영위 국정감사 전날 저녁 갑작스레 불참을 통보하더니 1주일 미룬 국감에도 불참의사를 일방적으로 통첩함. 여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했으며, 국감장에 증인으로 스스로 나오겠다는 인사들의 증인 채택도 불발되었음.
- 정부여당의 정략적인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명한 문제의식과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집중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음.
  -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 관련 현장 방문,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관련 현장 방문 등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당내 특위/TF를 구성하였음.
- 우리 당 의원들 간 팀플레이를 통한 체계적 질의를 통해 문 정부 실정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상임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평가보다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었고, 일부 사건의 경우, 의혹이 다수 제기되었음에도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했음. 또한, 일부 이슈 파이팅이 부족한 경우가 있던 것도 사실임.
-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에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속조치를 게을리 하지 않겠음.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아쉬움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민심을 살피고, 진심을 다하며, 충심으로 임하는 강한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림.

II. 문재인 정부 국정대참사 주요내용

- **국민의힘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대참사를 규정하고, 각 분야별 실정을 낱낱이 파헤쳤음.**

10대 국정대참사	
① 민생·경제 참사	⑥ 권력형 비리의혹
② 부동산 참사	⑦ 탈원전 정책 참사
③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⑧ 외교안보 참사
④ 공정·정의 실종	⑨ 국민분열 조장
⑤ 이념편향 코드인사	⑩ 내로남불 말바꾸기

-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각 분야별 세부실정은 다음과 같음.**

01 민생·경제참사

- 시행령을 통한 무리한 증세, 중소기업의 미래 종잣돈까지 징벌적 과세하며 시장 혼란 야기
-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주먹구구식 과세로 국민 혈세 낭비 우려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허장성세 정책시리즈의 실효성 의문
- 대한민국 전통 제조업 산업단지공단의 생산·수출·안전·일자리·산단관리 등 총체적 부실
-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과 숫자만 부풀려 놓은 '꼼수 전시행정'으로 실효성 의문
- 실체없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인한 국민 혈세 손실 우려
- 장기재정전망의 기본원칙마저 무너뜨리며 재정 악화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는 무책임한 정권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 위한 통계 조작·왜곡은 대국민 사기극
-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나 정책 효과는 떨어지는 지역사랑상품권
-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케어 등 기금 운용 실태
- 긴급 편성된 추경의 실집행률 저조, 코로나19 극복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편성
-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적용기준으로 농민 부담 증가 및 수용성 저해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에도 모든 업무를 운영본부에만 맡겨둔 채 무관심으로 일관

02 부동산참사

- 임대차시장을 초토화시킨 임대차 3법의 혼란
-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는 결국 서민증세, 서울의 3억~6억 집에 재산세 폭탄 등 중산층 부담 폭증
- 한국공간환경학회 출신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특정 이념을 투영하는 부동산 카르텔 실체
- 실제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통계

03 위기관리 무능력, 무원칙, 무책임

- 코로나19 관련 이중적 방역지침, 방역 역행 행태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방만한 운영 등 부실한 감독체제
-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월북 짜맞추기 조사
- 상온노출, 백색입자에 이어 접종후 사망사건 발생까지 독감백신 포비아
- 강성노조의 초법적 월권에 휘둘리는 공공기관
- 수위조절 등 댐관리 실패로 인한 수해 발생

04 공정·정의 실종

- 고위공직자 성 비위 사건 관련 유·불리에 따른 당·청의 선택적 침묵
- 성급한 정책 추진과 청와대의 불공정 개입이 빚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 관세사 수험생의 노력마저 짓밟은 검은 카르텔
- 법무부장관 지휘권 남용 및 검찰 인사 학살
-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특혜 관련 부실수사·은폐 의혹
- 권익위의 이해충돌에 대한 무원칙한 입장 변화, 권력 눈치보고 제 구실 못하는 공익신고제
- 현대판 음서제, 민주화운동전형으로 대학 입학
- 진보교육감들의 실정 및 각종 비리·특혜 의혹
- 풀뿌리 주민자치와 민주적 참여 취지는 사라진 채, 지역 사회 장악을 위한 특정 세력 거점으로 활용된 이름뿐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에 일조한 선관위의 자의적 법 해석
- 스포츠윤리센터, 프로스포츠인턴십 등 체육계 채용 특혜 의혹
- 문재인 대통령 사저용 토지매입 위법 및 특혜 의혹

05 이념편향 코드인사

- 공공기관의 비전문 낙하산 인사 문제
- 사법부 편향 인사에 따른 사법 신뢰 실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25 70주년 특별전의 편향·왜곡

06 권력형 비리 의혹

-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권력형비리게이트 의혹
- 이스타항공의 권력형 비리 특혜 의혹
- 노바운더리 특혜수주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문화농단' 실체적 의혹
- 근거법 없는 '학교체육진흥회'라는 사단법인의 각종 위법적 특혜 수혜

07 탈원전 정책 참사

-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및 은폐 국기문란 사건
- 산지 태양광 및 해상 풍력발전소 등 농어민 생존 위협
- 신재생에너지 과속 정책으로 국민과 미래세대에 환경 및 경제부담 가중
- 한전 및 발전 5개사 경영악화 문제
- 태양광 사업자 등 특정 사업자를 위한 국민세금 낭비
- 탈원전 정책 실패 비용을 전기요금, 전력사업기반기금 등으로 국민 전가

08 외교안보 참사

- 종전선언에 매몰되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부실 대응
- 한미동맹의 가치를 가볍게 보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훼손 발언
-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 등 북한인권 외면
- 재외동포청 설립 관련 후속조치 전무하여 동포사회 우롱
- 외교관 성비위 문제 등 추태에 미온적 대처
- 전작권 전환 관련, 킬체인 등 3축 체계도 아직 구축되지 못한 현실

09 국민분열 조장

- 개천절 집회에는 '재인산성' 과잉대응, 그러나 민노총 집회는 봐주기 등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 훼손
- TBS 교통방송 등 국민 세금으로 정치 편향적 프로그램 제작
- 권익위의 편향적인 광고비 집행, 국책연구기관의 정권편향적 연구과제 선정 문제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정치권 개입 문제

10 내로남불 말바꾸기 사례

- 법무부장관, 통계청장 등 국정감사 답변 위증

Ⅲ. 주요 후속조치사항

1.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관련 특검 추진 등 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상규명

2. 감사원 감사 청구, 문제 인사 고소·고발 조치

〈감사원 감사 청구〉

- 독감백신 입찰과정 담합 의혹 등 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수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
- 한국공간환경학회 카르텔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통계청의 통계 왜곡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사회적기업의 공제사업 카르텔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노바운더리 정부 기관 사업 수주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 학교체육진흥회 관련 위법·불법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스포츠윤리센터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고소·고발〉

-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자 국토교통부장관 해임 촉구
- 법무부장관의 국정감사 위증 관련, 직권 남용에 대해 지속 문제제기 및 고발
- 통계청장 국정감사 위증 관련 고발

〈기 타〉

- 청와대-산업부-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 외압 의혹 관련 NH투자증권 및 농어촌공사, 마사회 법적 책임 조치 점검
- 인국공 사태 진상규명
- 이스타항공 사태 진상규명
-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한수원 사장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상황 점검
- 한미동맹 훼손 발언 관련 주미 대사 즉각 소환 및 징계 조치 요구
- 선거관리위원회 법규 해석 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내부 감찰 및 관련자 징계 요구
- 기상청 지진장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 문제 진상규명

3. 관련 법 제·개정

-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관련 세법
- 재산세 완화를 위한 기준 상향 조정, 세율 인하 :「지방세법」
-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을 현행 10억원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 :「소득세법」
-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입법화 :「재정건전화법」,「국가재정법」
- 건강보험 기금화,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 국정감사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거짓 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국회법」,「국정감사및조사법」,「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 주민자치회의 관치화, 정치화, 선거용 사조직화 방지 :「지방자치법」
- AI 알고리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기준 설립 :「정보통신망법」
- 방통위의 허가 권한 남용 방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
- 산지태양광 등 사면안전성 검사 의무화 :「국토계획법」
-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정부지원 및 농가부담 감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협력재단 설립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
- 재외동포청 설치 :「정부조직법」

2020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국회운영위원회 ····· 019
▶ 법제사법위원회 ····· 027
▶ 정무위원회 ····· 035
▶ 기획재정위원회 ····· 043
▶ 교육위원회 ····· 05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065
▶ 외교통일위원회 ····· 073
▶ 국방위원회 ····· 081
▶ 행정안전위원회 ····· 08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09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15
▶ 보건복지위원회 ····· 123
▶ 환경노동위원회 ····· 131
▶ 국토교통위원회 ····· 135
▶ 여성가족위원회 ····· 145

국민의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2020
국정감사
백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국민 생명 저버리고 북한 눈치만 보는 무능·무책임 지적

-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청와대의 첩보 파악 능력과 신속한 구제 조치 미흡, 대통령 행적 투명한 공개 불이행 등 지적
- 국민이 살해된 상황에도 종전선언 강조한 유엔총회 화상연설 강행 등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청와대 행태 지적
- 희생자의 월북을 단정하는 발표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 지적 및 우리 국민 인권 보호에 무책임한 인권위 질타

박원순 前 서울시장 사건 등 인권위의 성실한 조사 촉구

- '무공천 원칙' 뒤집기 등 유·불리에 따른 대통령과 청와대의 선택적 침묵 지적
- 박원순 前 서울시장 사건 관련, 인권위의 직권조사 요청 후 3개월이 넘도록 조사 결과 없음을 질타,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낼 것이라는 답변 받음.
- 인권위의 정의연 사무점검 관련, 주무 감독 부처인 인권위의 책임론 제기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의혹 지적 및 책임론 제기

- 관련 제보 등을 제시하며 검찰수사에서 진상규명해야 함을 지적. 인사 검증 실패 및 직원 관리 부실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 제기
- 잇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 촉구

'소통정치' 및 '여·야 협치' 슬로건의 허구 확인

- '대통령 일정 전면공개' 공약을 파기한 '불통' 대통령과 야당의 자료요구 및 질의에 비협조적이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행태 지적
- 말뿐인 '여·야 협치' 행태 지적

국회운영위원회

/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

국민 생명 저버리고 북한 눈치만 보는 무능·무책임 지적

–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

주요 내용 및 성과

국민 생명 보호에 소극적이고 무능한 청와대 행태 지적

- 청와대 첩보 파악과 대통령 보고 관련, 시간 • 방법 및 신속한 구제 조치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추궁하여 사건의 안이한 대처와 첩보 분석의 무능함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제하지 못한 의혹 제기
  - '대통령 일정 전면공개' 공약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47시간에 대한 대통령 행적 투명한 공개 불이행에 대해 문제 제기
  - 통지문 받았던 핫라인을 구조요청에 사용하지 못한 점 등 우리 국민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

국민 피살 상황에도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청와대 행태 지적

- 10.28,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라며 총격의 주체인 북한을 생략한 모호한 표현 지적
- 우리 국민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된 상황에 '종전선언' 강조한 유엔총회 화상연설 강행한 문제 지적
  -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종전선언만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음을 지적
- 사건 후, 국군의 날 대통령 기념사에서 북한 만행 관련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점 지적

월북 단정적 발표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 인권 침해 지적

- 안보실장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규명하지 못한 내용은 피격 과정, 시신훼손 여부, 월북 여부 등. 해경에서 조사하는 과정임.
- 희생자의 아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한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대통령의 서신과 희생자가 월북했다는 정부 발표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 지적

우리 국민 인권 보호에 무책임한 인권위 질타

- 원초적 인권인 생명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침묵은 책임 방기임을 지적
  - 인권위, 9.28,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으로 "북한에 유감표시한 것으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다고 생각하며 향후 할 것은 관련 부서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권위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답변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에 사건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구 및 북한 눈치보기 행태 중단 촉구 계속
- 인권위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권 보호할 것을 촉구

국회운영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박원순 前 서울시장 사건 등 인권위의 성실한 조사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유·불리에 따른 대통령과 청와대의 선택적 침묵과 도덕성 흠결 지적**
  - ‘무공천 원칙’ 뒤집기 등 불리할 때마다 입장 바꾸기 행태 지적
    - 문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민주당 혁신안(중대한 잘못으로 직위 상실한 경우 해당 재보궐선거에 무공천)을 뒤집고 성범죄 의혹으로 재보궐선거를 야기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공천을 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침묵하는 것은 혁신안 폐기를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표 혁신을 지운 것이라는 지적
  - 후보자를 내는 상황 자체가 박원순·오거돈 前 시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임을 지적
- **박원순 前 서울시장 사건 관련,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7월 28일에 요청받고 3개월 이상 지나도록 조사 결과 없음을 질타,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낼 것이라는 답변 받음**
  - 인권위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하니 진상규명 철저하게 해야함을 촉구
  - 조사 결과가 늦어지는 동안 피해는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 조직적 은폐 세력들은 2차 가해자임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진실 밝혀줄 것을 촉구
- **인권위의 정의연 사무점검 관련, 주무 감독 부처인 인권위의 책임론 제기**
  - 인권위의 감독 부실 지적과 시정 요구
- **그 외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자체 역할 충실 촉구**
  -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지, ‘정권의 보루’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
    - 광화문집회 차벽 설치 등 통제 위주의 집회 대응 및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촉구
    - △법무부장관이 기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인권이 침해된 사건 △교정시설의 의료관 직무유기로 인한 사망사건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형집행정지 악용 의혹 및 관련 공익제보자 인사 불이익 의혹 △인헌고 교사의 정치편향적 교육 논란 등에 대해 성실 조사 요구 및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 촉구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박원순 前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연내 결과 발표 촉구 및 타 사건에 대한 성실 조사 지속 촉구**

국회운영위원회

/ 권력형 비리의혹 /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의혹 지적 및 책임론 제기

주요 내용 및 성과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 옵티머스 사건 관련 제보 등을 제시하며 관련 의혹이 검찰수사에서 소상히 밝혀져야하며, 청와대 내부 직원들이 의혹에 관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야 함을 지적
- 인사 검증 실패 및 임명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 제기
  - 민정수석실 직원 등 의혹이 제기된 인사 건에 대해 사전 검증과 관리 부실 지적
- 청와대의 수사 비협조 관련 언론보도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
- 대통령 해외 순방시 전용기 탑승자 확인 등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도 공식 수행원이 아닌 사람의 동석 여부 확인 중요함을 지적
- 국회 사무총장 연루 의혹 보도 관련 진의여부 질의

잇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정상화 촉구

- 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고 위헌 시비가 계속되는데, 지금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할 것 촉구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청와대 인사 검증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구와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 촉구 계속

국회운영위원회

/ 국민분열 조장 /

‘소통정치’ 및 ‘여·야 협치’ 슬로건의 허구 확인

주요 내용 및 성과

‘불통’ 대통령 • 청와대

-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의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청와대 방콕 대통령’, ‘혼밥 대통령’, ‘일방적인 소통’의 면모를 지적
- 장기간 법무부와 검찰의 불협화음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해소 노력 없음을 지적
- 야당의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이고 질의에 무응답하거나 비공개 규정 탓으로 돌리며 불성실한 태도 질타

말뿐인 ‘여·야 협치’

- 협치에 관한 계획 질의에 대해 정무수석실은 진전이 안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명할 뿐, 정상화 되지도 않고 명칭만 반복해서 거론되는 ‘여·야상설협의체’ 복원만 언급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대통령의 일정 투명한 공개와 청와대 자료요구 협조 성실 촉구

-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 개정을 통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우리당 관련 법안 旣 발의 다수)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법제사법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권 남용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지휘권 발동, 검찰인사를 남발하며 검찰 길들이기에 몰두함
- 특히 문재인 정권 관련한 비리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수사중인 검사들을 좌천시켜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음
- 또한 검찰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정황이 드러남
  ☞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안을 사전에 받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이 사안에 대해 추 장관은 답변을 사실상 거부함
-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검의 지검장을 두 번이나 교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자초함
  ☞ 추 장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객관적 사실, 관련자 증언 등을 제시하며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고, 논란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제안함

사법부 편향 인상에 따른 '사법 신뢰 실추'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위 '우국민(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이라 불리는 특정성향의 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함
  ☞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우리당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실인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음
- 편향된 인사로 인해 이미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잦은 판결 참사로 사상 최악의 사법 불신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지경임
  ☞ 대법원의 판결 참사에 대한 사과 촉구와 형평성 있는 인사 촉구함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아쉬운' 감사 결과 발표

-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함
  ☞ 감사원장은 '이렇게 심한 저항 처음 봤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부분 등 언급함
- 민주당에서 감사원의 강압 감사 의혹 등을 지적하자 감사원장은 회의록 및 관련자료에 대해 법사위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면 모두 공개하겠다고 답변
  ☞ 우리당은 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관련 회의록 및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

청와대가 1주택자로 홍보한 이강섭 법제처장의 '수십억 부동산'

-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고위공직자 임명시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1주택자'를 천명
- 청와대는 법제처장 임명 당시에도 '1주택자'라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18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산 개포동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 하지 않은 점 ▲각종 상가 등 보유 부동산 자산이 50억원에 달하는 점 ▲장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점 등이 지적됨

법제사법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남용 및 검찰 인사 학살

주요 내용 및 성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권력 남용

- 헌정 사상 딱 한 번 발동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추 장관은 임기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미 2번 발동
  - 지휘권 발동은 2번지만 관련 사건은 모두 6건임
- 권력형비리를 은폐하고 현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 보복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추궁
  - 특히,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적
    - ☞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라임 관련 지휘권 발동이 근거없음을 지적하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고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권한은 지휘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 다툼이 필요하지만 국민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함.

검찰 인사 학살 관련

- 추 장관의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인사에서 검찰청법에 따라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지적
  - 법무부와 대검의 진실 공방 등에 대해 국민적 의혹 해소 노력
    - ☞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 취임식날 추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검찰인사안을 달라고 했는데, 통상 검찰인사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라 인사안을 주시면 보고 답을 하겠다고 함. 이에 추 장관이 인사안은 청와대에 있으니 받아보라고 했으나 청와대는 인사안이 없다고 답변, 다음날 보니 인사가 다 짜여져 있었다'고 답변함.
    - ☞ 윤 총장은 1월 인사에 대해 '노골적 인사'라고 표현함.
    - ☞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답변을 거부함.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추미애 법무부장관 직권남용에 대해 지속 문제제기 및 고발

법제사법위원회

/ 권력형 비리의혹 /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 의혹

주요 내용 및 성과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 지적

- 6월에 정관계 고위 인사가 포함된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고서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 지적
-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친정권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보임해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뭉개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역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닌지 질타
  -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으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제대로 수사할 것을 제안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문제

- 추 장관 취임 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 됨
  - 증권범죄합수단은 증권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폐지 당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음
    - ☞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당시 이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답변함
  - 결국 정권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증권범죄합수단'을 무리하게 폐지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특검 추진

추미애 법무부장관 위증 고발 추진

- 추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10.12)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관련 '건의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함
- 종합감사(10.26)에서는 '기억에 없다'고 말을 바꿈

법제사법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 관련 부실수사·은폐의혹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 무혐의 처리 관련

- 대검에서 보강수사 지시 했음에도 추가 보강수사가 없었던 점 지적
- 통화내역 부재, 휴가기간 불일치, 근거자료 전무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점 지적
-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사건을 성급하게 결론을 낸 것은 결국 사건을 은폐하고 법무부 장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등 지적
- 추 장관이 27번 거짓말한 것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김관정 동부지검장 자격 논란

- 동부지검에 부임하기 직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의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논란된 부분 지적하며 재수사 필요성 피력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항고 旣 신청

- 향후 지속적으로 검찰의 제대로된 수사 촉구 예정

법제사법위원회

/ 이념편향 코드인사 /

사법부 편향 인사에 따른 '사법 신뢰 실추' 관련

주요 내용 및 성과

코드인사가 불러온 대법원의 판결 참사 지적

- 기본적인 법리도 제대로 판단 못한 노정희 대법관의 무능
  - 부사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대장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벌금 200만원 선고함. 이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은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를 이유로 파기 환송해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냄.
  - 하지만 군사법원은 군형법 특례(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를 이유로 기존의 벌금 200만원 선고함. 이에 대대장 A씨가 재상고하자 박정화 대법관은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거짓을 판시하며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함.
-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무는 '월권' 판결을 한 대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 이는 2015년 헌재가 전교조 해직자의 노조가입 제한이 합법이라는 결정과 배치됨.
  - 더욱이 이 판결은 시행령에 대한 판단으로 노동조합법 2조를 무력화 시킴. 대법원이 헌재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초법적이고 월권적인 판결을 한 것임.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부 재판관은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판시함.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대법원의 사과 촉구

- 대법원의 '무능', '월권' 판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 촉구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정무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권력형 사모펀드 비리게이트 의혹 진상규명 등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게이트 낱낱이 파헤치기

-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부실조사, 지연조사 등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책임 및 금감원 유착의혹 등을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해 집중 부각시킴.
  - 옵티머스의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의 관리 부실 책임회피를 위한 소극적인 태도에 증거자료 제시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합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지적
-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와 관련,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금융비리게이트의 발생에 합수단 폐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자본시장범죄 수사기구 설치 등의 보완책 요구
- 다만, 핵심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에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겨우 합의된 이 모 전 청와대행정관의 불출석,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성 안이한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국감 중반, 당 라임·옵티머스 비리게이트 특위 구성, 대검찰청 항의 방문 및 특검법 수용 요구 기자회견 실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특혜의혹 관련 이해충돌 여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조

- 과거 조국 장관 당시와 달리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수사에 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소극적이고 편향적인 권익위의 태도 지적
- 권익위가 당직사병의 공익신고자 보호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을 지적하고, 당직사병이 검찰에 진술한 시점부터 소급해 보호대상이 됨을 강조

네이버쇼핑의 검색알고리즘 조작 관련

- 공정위의 네이버쇼핑 검색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부과와 관련, 쇼핑 외 뉴스 등 다른 분야에서의 조작 가능성 문제 제기
- 국감기간 중 네이버를 직접 방문, 검색알고리즘 조작 가능성 관련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운영 지적

-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 이후 광복회의 방만한 운영 및 광복회장 측근의 독립유공자 후손 입적 시도 관련 의혹 제기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건배사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편향성 지적 및 예탁결제원 자회사 KS드림의 방만한 운영 지적

정무위원회

/ 권력형 비리의혹 /

권력형 사모펀드 비리의혹 관련 철저한 조사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책임 및 금감원 유착 의혹 등을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해 지적

-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부실조사, 지연조사가 지금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유발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를 대규모 판매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의 사장, 고문 등을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
- 마사회, 한전, 농어촌공사 등이 직원복지기금을 옵티머스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
-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계산사무대행사라고 책임을 축소시키는데 대해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합당한 책임 지적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의 부당성 지적

- 권력형 사모펀드 비리게이트의 발생에 합수단 폐지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자본시장범죄 수사기구 설치 등의 보완책 요구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정무위의 우려의견과 관련기능 수행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고 답변했으나,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은 관련 사실을 부인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특검법 처리 필요

- 당 라임 옵티머스 비리게이트 특위, 대검찰청 항의방문(10.16) 및 특검법 필요성 기자회견 개최(10.20)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국감 지적사항 및 추가 의혹에 대한 자료요구 및 후속조치 내용 점검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과 법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핵심증인의 불출석,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추가사실 확인에 많은 어려움

정무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권력 눈치보고 제구실 못하는 공익신고제 및 제도개선 필요성

주요 내용 및 성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특혜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 변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권익위가 조국 전장관과 추미애 장관 건에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답변(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 직무관련성 없다)을 하고 있음을 지적
-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한 장관으로서의 지위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권익위의 무원칙한 입장 변화가 결국은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지적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인 당직사병의 보호조치에 매우 소극적임을 지적

- 당직사병이 9월14일 보호조치를 신청했음에도 권익위는 국감 당시까지도 소극적인 태도 유지
- 검찰의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본인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사이에 신고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공익신고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음을 지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와 제88조에 따라 검찰에 진술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보호 대상이 됨을 강조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일관된 기준 마련 촉구

- 필요시 법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마련 검토

정무위원회

/ 국민분열 조장 /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 보훈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김원웅 광복회장의 방만한 광복회 운영 관련 지적

- 광복회장 취임 이후의 방만한 운영으로 보훈처 재정현황 점검을 받고, 편향적 언행으로 광복회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국가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면제 및 유예연기, 순애기금 관리권 이양까지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
- 법인이 아닌 광복회 임원들이 개인자격으로 한강편의점을 헐값에 수의계약 받은 사실을 지적
- 광복회장 측근의 독립유공자 양자 입적 시도 관련, 광복회장 및 임원진의 협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증거를 제시하며 지적

권익위원회의 편향적인 광고비 집행에 대한 시정 요구

- 권익위의 라디오 광고비 집행현황이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방송광고진흥공사 조사에서 최하위를 받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
- 권익위는 향후 가성비 외 공정성, 중립성 등을 잘 감안하겠다는 입장 제시

국책연구기관의 정권편향적 연구과제 선정 문제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정치권 개입 문제 지적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설문의 편향성 지적(자유민주적 평화통일 등에 대한 설문은 제외, 남북한 전쟁가능성, 주변국 호감도 등을 조사)
- 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연구보고서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 연구자를 위축시키고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임을 질타, 경인사회 이사장으로부터 연구 자율성 우선 보장 원칙을 도출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편향성 지적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및 여권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위원회 심의 자체가 편향적이 될 우려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광복회 등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

- 광복회의 방만한 운영은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시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정무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실체 없는 뉴딜펀드로 인한 국민 혈세 손실 우려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정책형 뉴딜펀드의 문제점 지적

- 정책형 뉴딜펀드 발표 과정에서 원금보장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한 후, 자본시장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원금보장이 안된다고 입장을 변경함으로써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렸음을 지적
- 금투협이 금융지주회사에 뉴딜펀드 출시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금융위의 압력에 의한 것은 아닌지 지적
- 뉴딜펀드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산은의 손실이 예상되며 민간 금융기관의 무리한 영업손실이 우려됨을 지적
- 뉴딜펀드가 사모재간접펀드로 운용될 예정인데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같은 환매중단 우려 등을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신중한 예산 심의 및 펀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 6,000억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 뉴딜펀드가 시장에서 실제로 적절한 투자처에 투자되는지, 환매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무위원회

/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및 낙하산 인사 문제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지적

- 예탁결제원 자회사인 KS드림의 방만한 운영 지적
  - 직원 평균 연봉은 3,600만원, 특별한 역할이 없는 친정권 낙하산 인사 대표 연봉은 1억8천만원에 달함
- 국민은 마스크 5부제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상당수의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적립금으로 수백만원어치의 마스크를 사재기
-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 수행시 가족에게 연구비 지급, 보고서 표절 등 연구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성희롱 문제까지 지속 발생하는 등 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됨을 질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후속대책 부재 지적

-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여러 곳이 국조실 채용분야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피해자 구제책, 불공정 채용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부족

금융감독기관의 부실한 감독체제 관련

- 사모펀드 비리게이트와 관련, 금감원 직원 등이 정보유출,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되거나 조사받는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 문제 지적
- 금융지주회장의 황제경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수방관적 태도가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연결되었음을 지적
  - 금융기관이 로비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금감원 출신을 영입하고 있음을 지적

기업은행 직원의 셀프가족대출 활용 부동산 투기문제, 국책은행들의 가족여신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문제점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국책은행 및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요구

금감원 조직 신뢰성 확보를 위한 퇴직임직원 관련 개선방안 요구

금융지주회장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요구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엉터리 경제정책, 망가지는 시장, 늘어나는 국민 부담

민생·경제 현안 중심의 정책 국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엉터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준칙의 허구성 비판
- 국내 주력산업의 쇠퇴, 미래 먹거리 사업의 빈곤,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등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
-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경우 신규 혁신사업은 보이지 않고 기존 사업의 재탕삼탕에 불과해 선도 혁신사업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허술한 190만개 일자리 산출방식 지적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통계 조작과 왜곡 해석에 엄중 경고
-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망가지고 서민 주거난만 가중됐다고 비판
- 공공기관의 비대화, 과도한 복지 등 방만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확대, 폐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 정책 제안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에 일침

- 금융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증세에만 혈안. 대주주라는 올가미를 씌워 개인투자자들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시장 혼란만 초래
- 자의적인 사내 초과유보소득 과세로 징벌적 세금폭탄 맞게 된 중소기업
-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통계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세대란 겪고 있는 국민
-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부동산감독기구.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시장을 감시하겠다는 오만한 정권

아쉬운 점과 향후 개선과제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난 4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한 평가는 실종되고 정치적 이슈만 부각
- 여당 위원장의 편파진행, 짧은 질문시간으로 인한 메시지 전달 한계, 지역 민원 질의, 이슈 파이팅 부족, 공격적인 정부부처의 태도와 자료 비협조 행태 등은 다음 국감 시엔 개선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듣도 보도 못한 '엉터리 재정준칙' 현 정부는 펑펑, 모든 책임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기

주요 내용 및 성과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면죄부를 준 가짜 재정준칙

- 역대 정부에선 국가부채비율 40% 마지노선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에서 관리. MB 정부에서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안정적 관리에 힘썼음.
-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6.0%(2017년)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58.3% 달할 것으로 예측.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60% 설정은 '셀프 면죄부'에 불과
- 따로 관리해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비율을 곱셈으로 연결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산식으로 재정당국이 관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음.
- 현 정부의 방만한 지출은 합리화하면서 차기 정부부터는 아무리 애써도 못 지킬 준칙을 만드는 것은 면피 행위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정부 전망과 재정준칙 적용 시 : (국가채무 비율/60%) X (통합재정수지 비율/-3%) ≤ 1.0

	2020	2030	2040	2050	2060
국가채무비율	43.5%	77.9%	97.6%	96.9%	81.1%
통합재정수지	-1.7%	-2.6%	-2.5%	-3.2%	-4.0%
한도 계산 결과	**0.41**	**1.13**	**1.36**	**1.72**	**1.80**

- 위기 대응을 위해 쓸 데 쓰더라도 다시 회복해야 할 때 회복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정하는 것. 재정준칙 도입 후 가시적 성과를 냈던 독일도 코로나 국면에서 잠시 넣어두었지만 2022년에는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예정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입법화 총력

-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정건전화법안(2건)과 국가재정법(2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장기재정전망의 기본원칙마저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

주요 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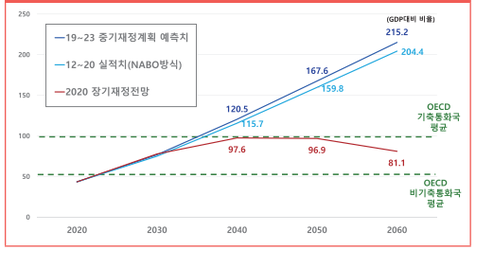
엉터리 전망으로 재정 악화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는 무책임한 정권

- 장기재정전망 실시 목적은 향후 재정위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기재부는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묶어놓고 재량지출을 기형적으로 줄여 허황된 장밋빛 전망을 발표. 실상은 지금 정부는 펑펑 쓰고, 다음 정부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식물정부처럼 있으라는 뜻
- 기재부는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춰 국가채무비율을 과소 예측하는 방식으로 과거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조작, 왜곡 해석
- 재량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본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국가부채비율은 40년 후 204.4%에 달하고, 작년 중기재정계획 예측치를 사용할 경우엔 215.2%로 급등. 현재 OECD 비기축통화국 평균의 4배를 상회하는 수준
- 부채비율이 204.4%가 나오는 것을 정부가 원하는 결과치를 넣어 인위적으로 찌그러뜨려 81.1%로 만든 부실한 전망을 바탕으로, 굉장히 느슨한 엉터리 재정준칙까지 만들어와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고 국민을 기만

(2020 장기재정전망) 경상 GDP,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

	20~30년	30~40년	40~50년	50~60년
경상GDP	3.8%	2.9%	2.4%	2.2%
재량지출	**2.8%**	**0.2%**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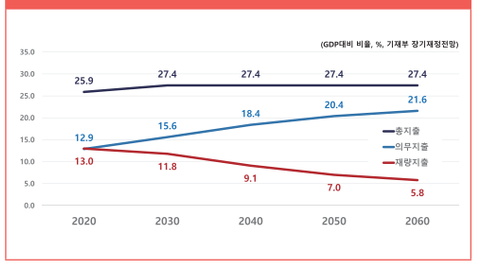
재량지출 증가율만 현실화했을 경우 국가채무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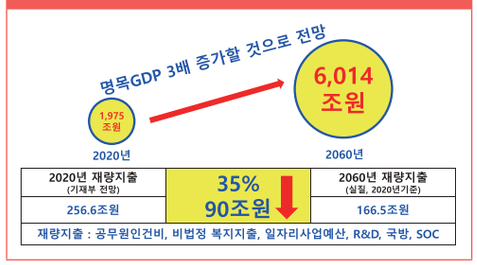
정부의 재정전망을 역으로 환산 시 내년도 예산 삭감액은 120조원!

- 기재부가 예측한 대로 명목GDP가 3배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기재부가 사용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역산하면 2020년 기준 재량지출은 166.5조원이 됨.
  - 정부 논리대로 하면 올해 재량지출 256.6조원에서 35%인 90조원을 감액해야 하고, 내년도 재량지출액 289조원에선 120조원을 삭감해야 함.
  - 재량지출 주 항목인 공무원 인건비, 비법정 복지지출, 일자리사업 예산, R&D, 국방, SOC 등에서 지금 당장 120조원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
- 재량지출이 지금처럼 계속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거 실적치나 GDP 대비 비율로 조정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쓸 수 있음에도 기재부가 이렇게 한 것은 심각한 상황을 숨기고, 한국형 뉴딜 등 현 정권의 모호한 재정지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비현실적인 재량지출 줄이기로 장미빛 전망 꾸며내기



재량지출 전망치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되풀이되는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왜곡·조작에 대한 방지책 마련

- 현실적인 전망치를 다시 밝히고, 재정관리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기획재정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증세, 국민 저항만 초래

주요 내용 및 성과

시행령을 통한 무리한 증세로 조세저항과 시장 혼란 야기

- 매년 연말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가 반복되는데 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내려오는 올해 시장 냉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
  - 올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1조, 29조원을 매도했음에도 개인이 들어와 60조원을 투자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쳤음
  -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앞 규탄대회와 세종청사 집회, 수십 건의 국민청원을 통해 대주주 요건 폐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
  - 정부는 종목당 3억원 이상이 9만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세대별 합산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과세대상은 추정도 못하는 실정
- 애당초 시행령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증세하는 것 자체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게 증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

중소기업의 미래 종잣돈까지 징벌적 과세하는 기재부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60% 이상의 중소기업이 반발. 부도덕한 일부 기업의 일탈·탈세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 정부가 초과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해 연구개발, 설비투자, 고용, 불확실성 대비 등을 위한 사내유보자금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매겨 기업의 경영 판단을 왜곡시키려는 것은 정부의 오만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상의 소득에 과세하는 아주 논쟁적인 법안. 정부는 소득세를 회피하는 법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객관적 수치부터 내놓아야 할 것임.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관련 법 개정 추진

-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을 현행 유지(10억원)하고 세대별 합산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구체적 근거 없는 징벌적 과세, 반시장적 증세 관행에 대해 총력 저지

기획재정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과세로 국민 혈세 낭비 우려

주요 내용 및 성과

빗썸 과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주먹구구식 과세

-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있음에도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작년 12월 가상화폐거래소에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
  - 작년 기재부는 국회 질의에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음
  - 올해 세법개정안에 개인 및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을 담아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과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
  - 기재부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득 파악이 안 돼서 과세하지 못한 것이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근거해 과세했다고 주장하지만, 소득 파악이 되더라도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못하는 게 '조세법률주의'
-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징수 의무(소득세법 제119조)가 있어 과세했으며, 기재부에 2018년 4차례의 법령해석을 질의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고, 결국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했다고 주장
  -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법제화한 후 과세하는데 국내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음.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있지도 않아 과세 근거가 없다고 지적. 결국 국세청이 무리한 확장해석을 통해 과세한 것이라고 비판
- 가상화폐거래소와의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환급가산금만 70억원(기재부령상 환급이자율 1.8%)으로 과세당국의 방임과 징수기관의 무리수로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과세당국의 법적 재검토 필요

- 기재부와 국세청에 위법한 과세처분 직권 취소 촉구

기획재정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 위한 통계 조작·왜곡

주요 내용 및 성과

가계동향 표본 변경은 대국민 사기극

-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바꿔 소득분배 통계를 마사지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
  -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본집단에서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줄이고, 중·고소득층은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 표본을 마사지한 결과 소득양극화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과거 조사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조사방식으로 계산하면 1분기 5분위배율은 6.04배에 달했으나, 새 방식으로 계산해 발표된 수치는 5.37로 낮아졌음

가계동향, 뭘 숨기기 위해 표본 변경? : 대국민 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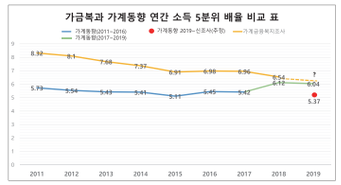
< 2차 개편 전후 소득분포비교: 전국 1인 이상 >

구분	전체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19 ¼ (기존 방식)	100.0	32.89	26.23	19.92	16.1	4.86
2019 ¼ (변경 방식)	100.0	25.84	30.26	21.39	16.55	5.96
비교 (변경방식-기존방식)	100.0	-7.05p	4.03p	1.47p	0.45p	1.1p

출처: 유경준의원실 직접 계산

1인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비교하면, 저소득층 비중은 무려 7.1%나 감소!

가계동향 표본 변경 : 무지에서 대국민사기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소득 5분위 배율 반대 추세!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 고·저소득층 소득포착 한계로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1차 개편(소득불평등도 과소집계 문제해결)한 결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경질. 현 청장 취임 후 130억원의 2차 개편에서 저소득층 비중은 7.1%나 감소
- ▲통계청장 부임 후 표본개편은 의도적 조작 ▲가계동향 연간 원자료를 일반에 미제공하는 것은 국민 기만 ▲새로운 방식의 2019년 가계수지동향 연간 원자료가 작성 불가능하다는 것은 허위 답변에 해당

비정규직 통계 왜곡과 새빨간 거짓말

- 작년 10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명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자 통계생산기관인 통계청과 청와대, 기재부, 고용부가 일제히 나서 조사방식의 오류가 있었고 시계열이 단절되었다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

- 지난해 증가한 비정규직 대다수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의 상실과 청년·노인 대상 재정 지원 단기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등으로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놓고 구체적 근거도 없이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
- 그간의 정부 해명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작년 비정규직 증가는 최소 66만명

• 또한, 지난 17년간 지속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규모나 추이도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밝힘.
• 통계청장이 통계 생산에 집중해야지 관련 근거도 없이 통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

소득주도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부활시킨 분기별 가구소득 조사

• 가구소득의 최소 순환주기는 1년으로 가구소득을 분기별로 파악해 소득분배지표를 내는 것은 부적절. 대다수 선진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연간 통계
• 기재부는 분기별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홍보하지만, 분기별 데이터를 가지고 소득분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로 연간 공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
• 통계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청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前 직원의 이메일 제보 공개

> "제발 중단하세요. 별 의미도 없는 데다 자기 진영에 유리한 통계가 나오면 인용하고 상대쪽은 불신하고 통계청은 유구무언 할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 이런 허접한 문제로 국가 통계와 통계청을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하시려나요? 통계청과 묵묵히 일하는 그 구성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
> "분기별 소득분배 통계 유지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부임하신 그분이 떠나셔야 개편과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 정부는 통계청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한다."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위원회 차원의 고발 및 감사 청구

• 통계청장의 허위 답변은 국감 위증죄에 해당하므로 고발조치 필요
• 통계청의 통계 왜곡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기획재정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과대 포장된 한국판 뉴딜사업, 실효성은 의문

주요 내용 및 성과

예산과 숫자만 부풀려 놓은 '꼼수 전시행정'으로 혈세만 낭비

• 내년도 한국판 뉴딜사업의 예산은 21.3조원으로 책정.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3.5조원에 불과. 671개 세부사업 중 188개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속사업. 실상을 들여다보면 너무 초라하고 포장지만 바꾼 것에 불과
- 기존의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대부분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실무자들은 이 사업이 뉴딜사업에 포함된 지도 모름
- 483개 계속사업도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거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초단기 알바 사업과 현금 퍼주기 사업 등이 대부분

산출 근거도 부실한 190만개의 신규 일자리

• 한국형 뉴딜은 자기복제·전작표절·자기모순의 문제점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비판. 정책 실효성보다는 머릿수부터 내세우는 고질적인 일자리 분식으로 미래 산업과 고용의 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일자리 숫자만 늘리다 보니 2년짜리 재정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
• 고용창출도 단순히 투입된 예산을 1년 평균임금으로 나눈 것에 불과. 한마디로 1년짜리 일자리로 암묵적인 거짓말 같다고 비판. 고용유발계수 역시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190만개 일자리 창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
- 정부가 2022년부터는 예산 등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자리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문. 단기 또는 지속 일자리인지 알 수 없고 연도별 신규 일자리와 누적 일자리조차 자료를 구분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민간기업의 투자계획과 고용 창출을 왜 정부가 점검하는지도 의문. 민간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전반적인 사업 재설계 및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필요

• 과거 정부의 정책과 현금 살포성 사업들을 모두 뉴딜로 포장해 16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을 쓰겠다는 것은 혈세 낭비로 삭감

기획재정위원회

/ 부동산 참사 /

전세대란 자초해놓고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주요 내용 및 성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동산 시장

- 전세 구하러 줄서고 제비뽑는 현실, 전세 품귀에 부르는 게 값,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 심화, 서울서 쫓겨나는 전세난민, 이사비로 3천만원 달라는 세입자, 집 보려면 5만원 내라는 집주인 등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속출
-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시행 결과 거래량 축소, 신고가 속출, 전세공급 감소, 전세가격 급등, 전·월세 전환 가속으로 서민주거 부담은 늘고 주거복지는 악화하고 있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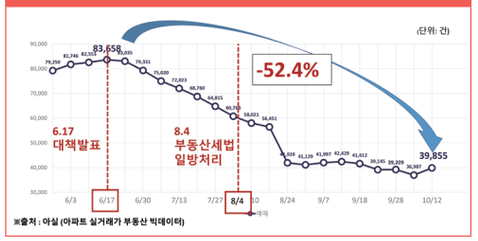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경제수장

-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만 내놔 정책 신뢰도가 추락
- 경제부총리도 전세난민 신세로 전락. 전셋집을 내드리겠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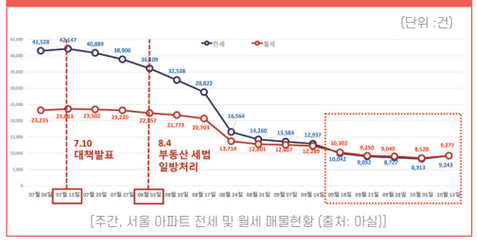
시장을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변변한 대책도 못 내놓는 무능한 정부

- 전세가 상승률이 5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산되며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음. 전세는 전형적인 중산·서민층 문제로 투기적 수요가 없고, 단기적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실정

[참고자료] 매물잠김현상 심화-서울 아파트 매매물량 추이



전세대란, 월세물량이 전세물량을 앞지름



[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 및 월세 매물현황 (출처: 아실)]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세법 등 재개정 필요

- 주택 실소유자 대상 보유세 부담 완화, 양도세 및 취득세 한시적 감면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정기국회 내 통과 노력

기획재정위원회

/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및 낙하산 인사 문제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성급한 정책 추진과 청와대의 불공정 개입이 빚은 인국공 사태

- 비정규직 제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3일 만에 졸속으로 추진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역차별만 초래. 올해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35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2017년부터 3년간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자회사 고용)가 있었음에도 단 5일 만에 공사와 정부의 단독결정 하에 직고용으로 뒤집힌 것은 성과 올리기에 급급했던 청와대의 무리한 개입 때문
- 정권의 원칙 없는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기관 인력은 급격히 증가했고, 신규채용 인원은 급감. 올해 신규 정원 증원 협의 시 인국공은 1명 증가
-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부처인데 인국공 직고용 추진도 청와대가 기재부를 패싱하고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며 기재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책임추궁
- 정규직 전환은 고차방정식과 같아 고난도의 작업. 현 정권은 명분에만 치우쳐 인기영합적으로,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공공기관의 비대화, 비효율성,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로또 정규직이라는 더 큰 불공평과 불공정만 야기

관세사 수험생의 노력마저 짓밟은 검은 카르텔

- 관세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세사 시험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시험 출제 위원과 특정 학원의 유착관계로 시험문제 사전 유출 등의 불법행위가 벌어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시험에 대한 공신력도 추락
- 교육청은 이미 폐업해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손 놓고 있고 해당 학원은 간판만 바꿔 단 채 여전히 성업 중. 관세청이 9곳의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시험대행기관-학원과의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개선책 마련 촉구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교육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제21대 국회 첫 국감으로 집권 4년차인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고

- With 코로나19 시대에 도서 지역, 특수학급 학생 등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원격) 수업 방안을 모색함.
- 특히, 12월 3일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 시스템을 주문함.
- 또한, 북한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검토 요청함.

학생들의 행복권·교육권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4년 새 64% 증가, 전문상담교사(Wee센터) 62% 확충에도 학교폭력 예방효과 미흡
- 서울대의 이름뿐인 지역균형선발, 신입생의 지역 다양성을 확보하는 취지에 부합 필요
-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3조 5,000억원이면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정·정의

- 조국 서울대 교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 해제 후 9개월간 급여 받음
- 고려대 교수 시절 장하성 주중 대사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 현대판 음서제, 최근 5년간 민주화운동전형으로 100명 이상이 대학에 입학
- 교육감의 교원 선발 자율권 확대, 불공정 논란
- 특정노조의 승진 창구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 교육부 간부, 민간기관서 금품수수 의혹
-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5년간 24억원 적발

코드·이념 교육

- 개성공단, 사법개혁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념교육
- 교육감들의 편향된 대북관과 선택적 추모
-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인민'표현을 내년부터 '국민'으로 수정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 우리편 챙기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비 50%가 객원교수 1인(코로나19가 퍼진 대구를 향해 "대구 시민들은 자기 도시가 왜 일본과 비슷한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인사) 인건비로 지급되고, 카지노 출입 징계 연구관이 노동신문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맡는 등 부적절 행태
- 국립대병원 제외한 교육부 산하기관 80%가 캠코더 인사
- 국립대병원 14곳 중 8곳(57%) 상임감사가 캠코더 인사

세금 낭비,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청년일자리 정책이 원칙없는 현금지급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
- 법률 근거없는 공공의대의 남원 설립 기정사실화로 약 100억 원대 토지보상 등 혈세 낭비
- 인천대, 비상근 이사장에게 억대 편의 제공, 동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는 해당 없음.
- 1천 2백여억원 혈세 들인 K-에듀파인 지난 8개월간 4만2천여건, 일 170여회 장애 발생
- 교직원공제회, 최근 2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57억 투자
- 이사장이 공석인 교직원공제회, 휴가일에 업무차량 이용하고 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등 근무기강 해이
- 교육부장관 세종시 관사를 파견 연구사가 사용하고 업무관계자들을 관사로 불러들이는 부적절한 압력 행사 의혹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 한국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바로잡기
- 6.25 전쟁은 항미원조전쟁이라는 공자학원의 역사 왜곡
- 문재인 정권의 홍보물이 된 듯한 교과서

교육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민주화운동전형 논란

주요 내용 및 성과

최근 8년간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로 합격한 인원이 최소 119여명

-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5년간 연세대 30명, 전남대 21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등 6개 대학에서 98명
  - 연세대의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가정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한 사회공헌·배려 전형에 2012학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최저학력기준까지 삭제하고 학생을 서류와 면접으로 입학시킨 것으로 확인
- 2013~2020년 이화여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지원해 합격한 인원이 총 21명
- 지원 요건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본인이나 자녀임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활동'으로 광범위해 전교조 해직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음

-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에게 기회균형·사회기여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주면 국가 보훈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은 그만큼 합격의 문이 좁아지는건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합격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깜깜이 전형', '불공정한 제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이 마무리되면 민주화운동전형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교육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진보교육감 실정 및 각종 비리·특혜 의혹

주요 내용 및 성과

서울교육청

- 직원 4명인 컴퓨터기기 회사가 마스크 60억 납품, 특혜 의혹
- '모의선거 교육' 시민단체의 적절성 여부
- 맞춤전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 특별채용
- 호프집, 이자카야서 원격수업 개선 회의 및 교육업무협의회 등 개최
- 아빠찬스,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이 본인의 딸을 비상근직으로 채용
-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교육과정에서 '사법개혁','남북화해시대 전망과 평화교육'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교육
-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 반쪽짜리 평가인 기초학력진단평가

부산교육청

-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이 특별채용으로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특혜 채용

광주교육청

-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의 비리 및 처조카 인사 개입 의혹

경기교육청

- '꿈의 학교' 사업 선정에 교육감 측근인사(윤모씨) 개입으로 심사결과 뒤바뀐 의혹
- 측근인사(윤모씨)가 '셀프 심의'로 꿈의 학교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충북교육청

- 교육감 측근이 일선 학교에 브로커를 알선해 조달 시장에서 특정업체를 계약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

전북교육청

- 방역에는 무용지물인 고가의 산업용 열화상카메라 특정업체 특혜 의혹

경남교육청

- 교육청 간행물 사업이 교육감 저서와 공보물을 만든 업체에 집중되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위원회 차원의 위증죄 고발 및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 등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

교육위원회

/ 이념 편향·코드 인사 /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 우리편 챙기기

주요 내용 및 성과

교육부 산하기관 26곳 중 전체 13곳(52%)이 캠코더 의혹 인사

- 13곳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인천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 현재 공석중인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차성수 전 이사장은 교육 및 금융계와 거의 연관이 없는 정치인 출신으로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함.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 자리는 31곳 중 17곳(2곳 공석) 55%가 캠코더 의혹 인사

- 17곳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14곳(상임감사 2곳 공석) 중 8곳(57%)이 캠코더 의혹 인사가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함.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정기적으로(내년 국감)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현황 발표

교육위원회

/ 외교·안보 참사 /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주요 내용 및 성과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 범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 필요

- 중국은 현재 북경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사용 예정
  -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 상·하권에는 총 12건의 한국사 관련 왜곡, 한반도를 중국영토인 것처럼 묘사한 지도, 조선을 중국의 번속국(藩屬國, 힘 센 나라에 빌붙어 사는 나라)으로 기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등
  -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 교과서가 UN군의 압록강 진격을 '침입'으로 서술한 것에 대해 "한·중간의 학문적 토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최근에는 총 3,500여 억원을 들여서 6·25전쟁을 '북침'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중임.
- 6.25 전쟁은 항미원조전쟁이라는 공자학원의 역사 왜곡

독도 수호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주문

- 해외 곳곳의 일본대사관 홈페이지(198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홍보하고 일본은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점거'라고 주장하는데 독도 연구소 예산까지 대폭 축소됨.
  ※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특히 올해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41호)을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발표한 지 120주년 되는 해여서 의미가 더 큼.

문재인 정부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

- 이념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 일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인민' 표현을 내년부터는 '국민'으로 수정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올바른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문제 발굴·제기 예정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2020
국정감사
백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및 성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미끼역할한 것을 밝혀냄.**
  - KCA가 당초 670억원을 투자했다는 국회보고와 달리 누적투자금이 1,060억원이란 것을 밝혀내 '옵티머스 의혹' 추가제기와 기금 부실관리의 실태 제기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여실히 확인
  -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부-한수원-원안위 등 관계 부처들이 졸속으로 진행한 어이없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이였음.
- **〈검언유착 조작보도〉의 실체적 진실 규명**
  - 지난 7월 〈KBS검언유착 조작보도〉의 '보도정보시스템'을 폭로하여 해당 보도가 보도상의 실수가 아닌 의도성을 가진 '조작보도' 가능성을 제기
- **방송 보도 및 심의의 편향성과 불공정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 근거 제시**
  - 방송사 및 방송 유관기관 단체들이 상급노조로 특정 정치지향적인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한 실상과 편파방송의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
  -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정확한 수치적 근거로 제시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저널리즘토크쇼J〉, MBC 〈스트레이트〉 등
-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은 여당의 원천 방해로 규명못함.**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대형포털사의 불공정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편파적인 뉴스 배열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여당의 조직적 방해로 규명하지 못했음. 이에 대해서는 당내 포털공정특위와 상임위 차원 공청회로 규명 예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포털 여론조작 문제

주요 내용 및 성과

- **네이버 '뉴스검색 알고리즘' 셀프 검증은 무효! 산학연 합동으로 공개 검증 받아야 함.**
  - 네이버, 쇼핑몰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7억을 받음에 따라 학계에서 조차 네이버의 뉴스 검색 AI알고리즘 조작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공론화 되고 있는 실정임.
- **네이버 '뉴스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 국감에서 네이버 실질적 오너인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민주당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로 결국 증인채택에 실패함.**
  - 이해진 GIO가 지난 2017년, 2018년 국감 증인출석해 약속한 사안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에, 소위 '바지사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책임한 답변을 듣자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의원과 국감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는 것임.
  -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본회의 중에서 카카오의 뉴스배열에 불만을 갖고 "카카오 들어오라하셍" 카톡문자로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압박' 논란을 일으켰음.
  - 민주당은 네이버 이해진 GIO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감시작 전부터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수 의석 공룡여당의 힘으로 증인채택을 무산시켜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의 혹을 은폐시켰음.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산학연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뉴스검색 AI알고리즘을 공개 검증 요구**
- **과기부에 포털 AI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
- **AI알고리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기준 설립 및 편향성 방지법 발의 예정(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편파방송

주요 내용 및 성과

- **KBS 검언유착 오보 해명은 거짓말! 권력실세에 의한 청부 보도 의혹 증폭**
  - KBS는 지난 7월 18일 9시 뉴스 '검언유착 오보' 사유에 대한 KBS 해명과 달리 〈KBS 보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초 기사 작성 후 보도되기까지 5시간 이상 여유가 있었으며 10번 이상 기사를 수정했고, 취재원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기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 **'검언유착' 허위사실 보도한 기자에게 '수신료' 들여 변호사 지원하는 KBS**
- **단일프로그램 최다 방심위 법정제재(6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TBS 좌파 선동가 김어준, 편파방송 대가로 하루 200만원(라디오 150만원, 방송TV 50만원씩) 받는 것으로 확인**
- **방송 콘텐츠·데이터 분석을 통한 심각한 좌편향 증명, 공정성 상실 지적**
  - MBC 스트레이트, KBS 저널리즘 토크쇼J, KBS라디오 김경래의 시사최강
  - 옵티머스 방송별 방송현황 분석결과, KBS, MBC, YTN, 연합뉴스는 0건 보도
  - 지난 2년간 국정감사기간 동안 KBS, MBC 메인 뉴스의 전수조사 결과, 여당 80%, 야당 20%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
- **방통위에 정부 주도의 편향적인 팩트체크센터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코바코, TBS·JTBC·한겨레 등 친정권 매체에 정부광고 몰아주기를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KBS는 권언유착 관련 취재원을 즉각 공개**
- **방송통신위원회, TBS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 **팩트체크센터 운영 예산 전액 삭감**
- **방심위 제재를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시 실효적 심사기준으로 확대 촉구 반영**
- **'언론사별 정부광고 집행현황' 분석해 정부 광고집행의 정치편향성 견제**
- **재허가·재승인을 통한 방통위의 허가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권력형 비리의혹 /

옵티머스 사모펀드 비리 의혹

주요 내용 및 성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거액의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국민들이 '부실펀드'에 현혹되도록 유인한 미끼역할한 것을 밝혀냄.**
  - 과기부와 전파진흥원의 부실투자, 투자금액 고의 은폐 의혹 제기
  - 공공기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곳은 전파진흥원이 유일할 정도로 부실관리됨.
  -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2017년 6월 ~ 2018년 3월동안 13회에 걸쳐 총 1,060억 투자해, 670억이 부실기업 인수 자금으로 들어감
  - 방송발전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전파진흥원의 고위직이 부당 로비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결정하면서 방발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적
- **본부장 등 관련자 3명 경징계처리 및 부실감사 지적**
  -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670억원을 투자한 것도 모자라 옵티머스 투자로 징계받은 간부에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 사례 밝혀냄
  -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투자하고도 책임은 커녕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전파진흥원의 도덕성 결여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권력형 비리게이트 국회 특검을 통해 사모펀드의 배후 규명**
- **과기부 2차 감사 실시 촉구, 감사 결과 모니터링 및 후속 대책 마련**
- **본부장 등 관련자 3명 경징계처리 및 부실감사에 대한 사후조치 촉구**
- **방송발전기금 운용·관리 현황과 산하기관 투자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주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탈원전 정책 참사 /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주요 내용 및 성과

- **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하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 한수원, 산업부, 회계법인 직원들이 3회 이상 모여서 경제성 평가 하락 (3,427억→224억)을 모의하고 실제 조작한 사실을 밝혀냄.
  - 감사원 결과 전에 원안위가 영구정지 승인한 것은 국민기만행위임.
- **탈원전 위주 비대칭적 행정처리 지적(신속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허가 Vs. 2단계 맥스터,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건설 늑장 허가)**
-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대해 참고인(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로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법적인 근거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지된 상태"라며 "월성 1호기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짤 때 건설 의향을 표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답변 이끌어 냄.**
- **한수원, 탈원전으로 재무악화되었어도 정권입맛에 맞추면 경영평가 A등급 받는 경영평가의 허구성 : 정권 입맛에 맞으면 '고평가'**
  - 고평가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추가된 '사회적 가치'항목에서 고득점
  - 재무관련 배점 축소(2015년)14점→(2019년) 5점, 한수원 득점(100점 환산)은 87.5점 →71.8점으로 오히려 감소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한수원 사장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정책적 조치들을 추진**
- **향후 한수원의 경영성과 모니터링 및 한수원의 안전성 추가 감사 필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실효성 없는 한국판 뉴딜사업

주요 내용 및 성과

-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공간정보 필수 사업이 16.6조(10%)에 달하는데, 관련 전문가 참여 전무 지적**
  - 위치정보가 없는 공간정보는 무의미한 만큼 디지털뉴딜위원회에 공간정보 전문가 포함 시키고, 부처간 협업 요구
  -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할 것 주문
-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및 DB산업 육성 등 부실사업에 디지털 뉴딜 추진**
- **4차산업 전문인력 부족한 실정인데도 단기 알바 양산 지적**
- **탈원전, 소부장 R&D 예비타당성 조사에 경제적 타당성 반영 미흡**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뉴딜'정책이 ▲사업검토미흡 ▲사업규모 변경 ▲5G 구축 대책미비 ▲일자리질 문제 ▲성과에 집착 등 5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마련 촉구**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한국판 뉴딜에 공간·위치정보 필요사업 전수조사 실시 촉구**
-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및 과기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요구**
- **과기부 예타에 경제성 비중 상향(과기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 **알바식 일자리 정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추후 진행과정에서 예산 투입의 성과를 점검할 것**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외교통일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 부실 및 무능 실태

- 종전선언에 매달리느라 서해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외교부 장관의 답변을 통해서도 부실대응이라는 것이 입증됨.
-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폄하 발언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함께하는 한미동맹을 아랑곳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줌.
- 대북 지원은 적극적이면서 북한 인권은 마냥 외면하고 동포사회에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후속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 확인됨.

우리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여당

- 북한군에 총살당한 서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구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참히 살해된 억울함과 UN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호소하고자 국회에서의 증언을 희망하였으나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친형이 '월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증인채택을 거부하여 무산됨.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자성의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은근히 월북 시도로 몰아가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2차 가해를 입히면서 상처만 더욱 깊게함.

정부의 막무가내식 자료 제출 거부

- 우리당은 위안부 합의 당시 피해자분들께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지 확인하고자 '윤미향 면담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심지어 보안각서를 쓰고 열람하겠다는 제안마저 수용하지 않았음.
- 문재인 정부가 윤미향 면담 회의록을 근거로 과거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부실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판단의 타당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비밀로 분류하고 제출을 거부하는 건 스스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건 아닌지 의심케 함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안보 참사 /

종전선언에 매몰되어 서해 공무원 총격살해 부실 대응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하고 언론에서 관련 뉴스를 집중해서 보도하도록 서해 공무원 총격 피살 사실을 의도적으로 늦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
  - 9.22 밤 9시 40분경 서해 공무원 피살
  - 9.22 밤 11시~12시 군당국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
  - 9.23 새벽 1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 개최
  - 9.23 새벽 1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사전녹화 연설 시작
  - 9.23 오전 8시 30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
  - 9.23 오후 1시 30분 국방부에서 피살에 관한 언급 없이 서해 공무원 실종 및 수색 관련 첫 언론 보도문 발표
-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는 '先비핵화조치 後종전선언'이라는 우선순위를 정립했으나 이번엔 종전선언이 비핵화 입구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북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주장
- 한편, 외교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면서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공개
  - 청와대가 9월 23~24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을 외교부 직원들도 언론을 보고 알았으며 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그 부분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그런 중요한 회의를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
-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본인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항의했다고 밝힌 건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총살사건을 다루는 대응이 부실했다는 걸 입증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안보 참사 /

삐거덕거리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준 주미대사 발언

주요 내용 및 성과

-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가","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련의 발언으로 70년간 이어온 양국의 가치동맹을 이익타산의 산물로 폄하
  -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는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이 자랑스럽다"라고 논평해 우회적으로 반박
-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워킹그룹 무력화 시도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등 여러 차례 문제 발언을 서슴지 않아 대미외교의 최전선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결속시켜야 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오히려 국익을 손상
- 한미동맹의 가치를 가볍게 보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은 단순히 말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기본적 사고를 대표
  -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계산에 따른 선택적 수단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함께해 온 글로벌 가치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과 종전선언에 정권의 사활을 거느라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폄하한 것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외교부가 동맹국 주재 대사로서 망발을 서슴지 않는 이수혁 주미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징계하도록 요구**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안보 참사 /

북한인권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주요 내용 및 성과

-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기구로 설립 절차를 위하여 이사회를 먼저 구성해야 하는데 12명의 이사 추천과 관련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인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절반씩 추천해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남북대화에서 인권문제를 의제화해 북한 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촉구하겠다면서 '북한인권재단 조기출범'을 명시하였음
  - 그럼에도 정작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노력은 전무
-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마냥 지연되는 것과 관련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일부가 국회 사무처에 공문을 보냈으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통일부에서 아예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고 있어 통일부 장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비난 제기
- 통일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의 설립을 취소하고 대북 현물지원에는 적극적이면서 오로지 북한인권을 위한 재단설립에는 소극적
- 한편, 주UN대표부 조현 대사는 한국이 UN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빠진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제안국은 아니더라도 찬성은 계속하고 있다며 "컨센서스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결여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줌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하여 국회에 이사회 구성에 관한 추천 절차를 즉각 진행하도록 촉구**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안보 참사 /

동포사회 우롱하는 문재인 정권

주요 내용 및 성과

-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 퍼져있는 재외동포와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
-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재외동포 핵심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세웠으나 집권 후 후속조치는 전무한 실정
-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심의 임기 3년동안 추진해봐야 안되는 문제"라고 답변해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이 부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안보 참사 /

외교관 추태 천태만상

주요 내용 및 성과

- 고려대 교수 재임 시절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교육부 감사결과와 관련 장하성 주중 대사는 6차례 총 279만원을 썼다면서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40여만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고 밝히고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공개 사과
-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는 2017년 말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당시 대사관측이 가해 외교관의 부하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경고 조치로만 끝낸 것은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인정
-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서 지난 8월 한국인 직원이 현지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나 외교부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채 9월 자진 사직
  - 당시 피해자는 제3자를 통해 대사관 성 고충 담당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주나이지리아 대사에게도 보고됐으나 가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외교부 본부에도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
  -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부총영사급 직원이 6월 말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사건. 해당 직원은 7월말 국내로 소환되어 국정원으로 복귀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외교관 성비위 관련 재외 공관 차원의 대응 지침을 마련토록 촉구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2020
국정감사
백서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불공정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은 분명 인재였습니다.

- 여당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반대로 단독 「국민 국감」을 실시하였습니다.
- 해수부 어업관리선에서의 숙박과 단독 해군 제2함대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 당시 청와대, 군, 해경 등 어느 누구도 골든타임 6시간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설마가 부른 참사였습니다.
- 이제 UN 인권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근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이어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 보여준 재래식 무기마저 현대화를 갖추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른바 킬체인 등 3축체계가 아직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당은 현 대통령 임기내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미간 기 합의된 3가지 조건을 갖춘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군 휴가의 공정성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서○○의 군 복무 중 휴가관련 5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군은 '지휘관의 재량권'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하였습니다.

국방위원회

/ 외교안보 참사 /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은 분명 인재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성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밝히고자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코자 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국민의힘 간사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 이후, 국민의힘 단독 「국민 국감」에 출석한 전문가들을 통해 실족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어업관리선에서의 숙박 그리고 해군 제2함대에 대한 단독 현장점검을 계속하였습니다.
  - 당시 청와대, 군, 해경 등 어느 누구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설마가 부른 참사였습니다.
  - 북 해역 발견 후 피격 및 시신 소각까지 골든타임 6시간에 동원할 수 있는 3가지 채널(남북정상 간 친서 채널, 유엔사 전통문, 국제상선 통신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북한에 대한 군의 부당통신이 매일 2회 실시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 이유 불문하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UN 인권위원회 조사에 국방부 등 정부가 잘 협조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 UN 조사 시 국방부는 첩보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위원회

/ 외교안보 참사 /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근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성과

전작권은 한미간에 기 합의한 3가지 조건 충족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에 맞서는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IOC(기본운용능력), FOC(완전운용능력), FMC(완전임무수행능력)
- 여당은 현 대통령 임기내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른바 킬체인 등 3축 체계도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계속해서 한미 연합검증평가 시행이 잘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첨단전력에 의한 3축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국방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군 휴가의 공정성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성과

서○○의 군 복무 중 휴가관련 5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1·2차 병가 19일은 규정을 위반한 재량권·직권남용에 의한 특혜
- 연간 10일 초과 병가 대상이 아닌데 9일이나 연장
- 1·2차 병가 휴가명령 누락은 착오인가? 고의인가?
- 보좌관 전화 문의만으로도 병가 9일 연장?
- 2017.6.25. 서○○은 명백한 탈영 상황
  - 군은 '지휘관의 재량권'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하였습니다.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국방부가 병가규정을 다시 바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서○○이 누린 이른바 「군인의 기본권」은 모든 병사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2020
국정감사
백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누적된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

- 각종 권력형 비리를 규명하고, 기관의 정치중립 위반과 정권 눈치보기,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을 점검
- 지자체의 지역 조직과 여론 장악 시도, 주민 혈세낭비 사례도 철저히 파헤치고자 노력

무책임·무질서·헌법 파괴 행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

- 청와대 말 한마디에 이원화에서 일원화 모델로 회귀한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 일관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집회 금지 차벽의 위헌 소지를 지적,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요구
-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대해서는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임을 강력히 질타
- 산하 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인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대안 마련을 요구

정부·여당, 정책은 낙제점, 국정방해는 합격점

- 성실히 임해야 할 기관의 자료제출과 답변은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음.
-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허위 자료도 다수 발견
- 핵심 증인 대부분은 여당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고, 출석한 증인은 서로 다른 답변, 사실을 호도하는 답변으로 위증 논란을 낳기도 함.
- 무력한 맹탕 국감을 자초한 정부·여당의 행태를 국민께서 반드시 준엄하게 평가하실 것
- 국정감사 이후에도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행정안전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예산은 늘어나는데 효과는 줄어드는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내용 및 성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갈수록 정책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

- 한 지자체에서만 발행하면 주변 도시의 소비를 끌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행하기 시작하면 원래 목표 달성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
- 243개 지자체 중 94%가 발행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현재는 오히려 효과가 상쇄될 우려
- 큰 지자체가 작은 지자체의 경제적 혜택을 흡수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문제 소지
- 현재 보증보험 가입 통한 지급보증액은 5%에 불과, 안전장치가 없어 1조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실도 확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국가 전체로 발행이 확장됐을 경우에 대해 전체적인 판단을 다시 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정 규모를 재논의해 결정할 필요

- 정부안과 같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액에 동의할 수 없으며,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안 결정 추진

행정안전위원회

/ 국민분열 조장 /

코로나는 광화문에만 있다?
나가도 너무 나간 '재인산성' 과잉대응

주요 내용 및 성과

경찰의 지난 개천절 집회 과잉대응에 대해 강력 비판

- 개천절 광화문 차벽 설치에 경찰버스 537대, 187개 중대가 투입된 점을 지적
- 이를 '재인산성', '코로나 파시즘'으로 정의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며 공권력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점 강조
- 최소성·일관성의 원칙 훼손, 비례·과잉금지 원칙 위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과거 헌재 판결을 상기하며 비판
-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금지하면서 놀이공원 등 연휴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황을 방치하니 이중잣대, 정치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임을 지적
- 민노총 집회 봐주기와도 비교하며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 강력 질타

경찰청장으로부터 대상·장소 구분없이 동일한 잣대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추후 집회나 시위 시 경찰 등 공권력의 대응이 적절하고 정치 중립적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

행정안전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주민'도 '자치'도 없다, 이름뿐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요 내용 및 성과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사업 주관이 상당수가 특정 성향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구성된 지원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

- 주민자치 강사도 특정 시민운동가들로 구성하며 반대진영 인사는 아예 배제
- 풀뿌리 주민자치와 민주적 참여라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지역사회 장악을 위한 특정 세력의 거점으로 활용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도 자치도 없는 관치로 전락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前 시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주민 자치조직을 장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남

- 특정 시민단체에 선발 과정을 위탁, 해당 단체는 사업 계획 및 집행, 예산 편성까지 장악
- 아름다운 가게 출신 인사를 주민자치사업단과 자치지원관으로 임명, 또 코드만 맞으면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돌려막기식으로 마구잡이 배치

근거도 없는 재정지원 위해 자치회 1곳에 평균 5,649만원 지원

- 주민자치회 운영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상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는 없음. 그럼에도 자치회 1개소에 지자체가 평균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주민자치회의 관치화, 정치화, 선거용 사조직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도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 착수

행정안전위원회

/ 국민분열 조장 /

국민 세금으로 편가르기 앞장, 정치 편향성 문제 심각

주요 내용 및 성과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TBS 교통방송의 심각한 좌편향 문제 지적

-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당별 출연자 수 분석 결과, 민주당 소속 238회, 국민의힘 소속 78회 출연, 정치성향별로는 진보 인사 341회, 보수 인사 75회로 극명한 편파성이 드러남
- 지난 3년 동안 TBS의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위반 28건 가운데 18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조사한 라디오 매체 이용행태 결과에서는 유익함·신뢰·중립성 등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
- 심지어 당이 요구한 진행자 김어준의 출연료는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님에도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

행정안전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치적 편향성도 강력 질타

- 고3 학생 대상 퀴즈대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문제 다수 포함된 사실 지적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1961년 쿠데타 주도로 권력을 장악한 뒤 18년 동안 장기집권을 이어갔던 인물로,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바꿔가며 권력을 독점한 이로 묘사하는 등 부정적인 수식어 동원해 악의적으로 표현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진행자 김어준 출연료를 끝까지 제출받아 분석하고, TBS 교통방송이 설립 취지에 맞게 교통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제작하도록 지속적인 문제 제기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철저한 감시·감독을 주문

행정안전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사전투표, 보완과 개선 필요

주요 내용 및 성과

현행 사전투표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거의 일반원칙에 위배, 막판 주요변수를 유권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 가능성, 사전투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면 무효표가 되어 국민의 참정권 침해도 우려
- 선거일 18세가 되는 유권자에게 사전투표가 허용되어 보통선거의 원칙 위배 소지, 사전투표 비용 또한 국민의 세금부담
- 전체 투표율 역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결국은 본투표가 사전투표로 이동한 것으로 봐야하며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지적

투표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제시

- 선거일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보장
- 선거일과 공휴일을 분리하고, 본투표일을 이틀 실시
- 현실적이고 올바른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투표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특히 보완이 필요한 관외사전투표 제도의 여러 우려점을 지적하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사전투표 제도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투표율 제고를 이끌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행정안전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당선, 초유의 사태 일조한 선관위의 자의적 법 해석

주요 내용 및 성과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과정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음을 집중 지적**
  - 경찰청이 조건부 의원 면직을 결정한 지난 5월 29일까지는 명백한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신청, 출마해 당선된 자체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사항임을 확인
- **선관위가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해,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으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임을 강력히 질타**
  - 해당 법 조항은 피선거권을 갖고 싶어하는 공무원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아 제한을 받는 경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가입까지 허용해 주는 조문이 아님을 명확히 지적
- **선례도 없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선관위원장 결재가 아닌 해석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 역시 위임전결 규정에 위배됨을 제기**
  - 관련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사례가 없다)과 출석증인(사례가 있다)의 답변이 서로 다른 것은 위증일 수 있음을 강하게 질타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법규 해석 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내부 감찰 및 관련자 징계 요구**
- **답변 위증 의혹에 대해 선관위의 최종 입장 확인 후 고발 등 조치 추진**
- **관련 규정을 편법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행정안전위원회

/ 부동산 참사 /

文 정부 보유세는 결국 '서민증세'… 서울 3억~6억 집에 재산세 폭탄

주요 내용 및 성과

-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자료 분석 결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중산층 부담이 폭증한 점 확인**
  - 노원구의 경우,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가 구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8.9%에서 올해 55%로 폭등
  - 도봉구도 6.3%에서 40.6%로, 강북구 역시 8.4%에서 42.9%로 크게 증가
  -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의 과세 부담이 더욱 높아지는 '서민 증세'를 초래했음을 강하게 지적
-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재산세가 예상보다 6천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올해에만 예상보다 더 걷힌 재산세는 2천억원에 달하며, 25개 모든 구에서 초과 과세, 많게는 한 자치구에서 400억원이 더 걷히기도 함.
  - 초과된 금액으로만 재산세를 감면해도 구별로 10~40%까지 인하 가능하다고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되살려,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 서초구의 사례처럼, 각 자치구와 의회가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재산세 감면 추진을 지속적으로 제기
  - 재산세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기준 상향 조정, 세율 인하)

행정안전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필요

주요 내용 및 성과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의 누적적립금은 1년치 공단 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지적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4만명 증원시, 공무원연금 부담은 무려 92조 증가 추산
- 현행 제도 유지시 2020년 18.2조였던 지출액은 10년 후인 2030년에는 26.3조, 2090년에는 56.6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연금개혁 시급 논의 필요성 강조

- 통상 5년 단위로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개혁이 4차례 단행됐지만, 노무현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점 지적
- 결국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구조이며, 우리 미래세대에 감당조차 힘든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는 만큼 연금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공무원연금 구조 개편에 대한 조속한 정부안 마련을 지속 촉구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증원 규모 재설계 논의 문제도 제기

행정안전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업무추진비 펑펑, 국민혈세는 탈탈, 방만한 운용 실태 드러나

주요 내용 및 성과

중앙선관위 업무추진비, 시간과 장소, 한도에 관계없이 방만하게 사용돼

-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의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 분석 결과, 50만원 이상 사용 건 가운데 28건은 식사 대상자도 기재하지 않았고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쓴 경우도 38건으로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을 확인
-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에 사용된 규모는 전체 사용액의 77%, 밤 10시면 문을 닫는 식당에서 새벽 1시 넘어서 결제된 사례도 발견
- 선관위 간부들이 심야, 휴일과 장소, 금액 가리지 않고 '쌈짓돈'처럼 카드를 쓴 것이라 질타

자유총연맹 역시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드러나

- 예산의 배가 넘는 6,200여만원을 연차수당으로 지출한 사실 확인
- 문재인 캠프 출신인 전 사무총장이 총재보다도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한 점 지적 (올해 7월까지 사무총장 1,278만원, 총재는 165만원 사용)
- 우리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연차수당 지급 시점과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기까지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 강력 비판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방만하게 운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거대 여당의 반대로 정부 견제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2020년도 국정감사

거대 여당의 강한 반대로 결국 무산된 국감 핵심 증인 채택, 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저버린 2020년도 국정감사!

-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핵심 증인 채택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됨.
- 끝도 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채 진행된 국감
-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법·불법·불공정 실태에 대해 강력 비판, 실질적 개선과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 요구

- 핵심 증인 채택 불발, 정부의 요구 자료 미제출 및 불성실한 후속 조치 보고에도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법 실태 지적, 불법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개선·후속 조치 마련 촉구
- 국정감사 중점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원·문체부 감사 요구(*미합의)

〈감사원 감사 요구사항〉

-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행사 '노바운더리' 특혜 선정 의혹
- '스포츠윤리센터' 임직원 특혜 채용 의혹
- '학교체육진흥회'의 위법·불법 운영 및 정부의 특혜성 지원 의혹
-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가담자 징계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 영화진흥위원회의 특정인 몰아주기, 과다 수의계약 등 운영 관리 부적정 사항
- 문화재청·문화유산국민신탁 미허가 수익사업 운영의 불법성 여부
- 낙하산 인사를 위한 민속박물관 인사규정 개정 과정

〈문체부 감사 요구사항〉

-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철인3종협회의 경징계 관련 사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권력형 비리 의혹 /

문재인 정부 '문화농단'의 실체적 의혹 제기
– '노바운더리 특혜수주 의혹' 감사원 감사 통해 밝혀야

주요 내용 및 성과

문체부 및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의 '노바운더리' 특혜 관련 실체적 의혹 제기

-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 관련 특혜 의혹
  - 노르웨이 해외순방 문화공연 관련 당시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었던 탁현민 비서관에게 대행사 선정을 요청했고, 탁 비서관을 통해 측근 회사인 '노바운더리'로 대행사 선정된 상태에서 해외문화홍보원에 행사비용 통보된 의혹 제기
  - 해외문화홍보원에 의하면 탁현민 비서관에게 관련 행사 업체 선정 문의했을 때 이미 노바운더리로 정해진 상태였고, 이는 행사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적 없다는 청와대 해명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지적
  - 태국 순방 문화행사는 관계자의 답변을 통해 비교견적서 받았지만, 노바운더리로 결정된 상황에서 규정에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세부 의혹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 한국관광공사 관련 특혜 의혹
  - 한국관광공사의 청와대 사랑채 조형물 설치 컨설팅 업체로 '노바운더리'가 지정되어 있다가 지난 7월 '노바운더리 특혜수주 및 일감몰아주기' 보도 이후 무산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 한국관광공사에게 '노바운더리'를 추천한 업체는 'K-스타일 허브'라는 업체로 향후 콘텐츠진흥원과 노바운더리 계약 과정에서도 연계된 업체임을 지적
-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특혜 의혹
  - '노바운더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탁사업 재하청 2건 수주한 세부 과정을 심도 있게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노바운더리'의 정부 기관 사업 수주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국민의힘'이 요구한 '노바운더리' 관련 증인 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끝내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 강력 요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권력형 비리 의혹 /

문재인 정부의 '체육계 농단'
– '학교체육진흥회'의 위법 실태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체육진흥원과는 무관한 '학교체육진흥회'라는 사단법인의 각종 위법적 특혜 수혜 과정을 지적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공모나 입찰 절차 없이 '학교체육진흥회'에 지원된 6억원의 보조금 집행의 위법성 지적
  - '학교체육진흥회'의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2018·2019년도 예산 지원 사실에 대해 강력 문제 제기
  - '학교체육진흥회'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점, 문체부와 교육부에 제출한 동일한 사업 결과보고서, 사업계획 승인 전 예산 교부 과정에 대해 지적, 근거 제시
  - '학교체육진흥회'가 실시한 사업 대부분이 이미 시행된 다른 사업들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사업임을 지적
- '학교체육진흥회'의 이권 확보 수단으로 스포츠혁신위가 이용된 실태 지적
  - 스포츠혁신위 '학원스포츠 혁신분과' 주요 위원이 학교체육진흥회의 감사와 이사로 활동하며 학교체육진흥회로부터 수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 사단법인인 '학교체육진흥회'의 각종 이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혁신위가 이용된 구체적 과정을 제시하며 강력 비판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학교체육진흥회'의 관련 위법·불법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학교체육진흥회의 각종 사업 및 권한 위탁이 적정성, 학교체육진흥회 보조금 교부 및 교부 과정, 학교체육진흥회 보조금 집행의 위법성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강력 요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체육계 채용 특혜 의혹 제기
– '스포츠윤리센터' 특혜 채용 의혹 / '프로스포츠인턴십' 특혜 채용 의혹

주요 내용 및 성과

체육계 혁신과 체육인 인권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올해 8월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인권실장 특혜 채용 의혹 제기

-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인권실장으로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줄 당시 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경심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장관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김 모씨가 채용됨.
- 김 모씨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에 크게 관여한 문경란 전 스포츠혁신위원장의 남편인 한인섭 교수의 제자로 스포츠 인권 및 관련 행정 업무 경력이 전무함에도 스포츠인권실장으로 채용된 점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 제기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문체부 지원 '프로스포츠인턴십' 채용 의혹 제기, 관련 증인 채택 무산 및 관련 자료 미제출로 실체적 진실 규명 난항

- 추 장관 아들이 인턴십 지원 당시 휴가 미복귀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었으며, 추 장관 취임 직후 채용된 점을 지적하며 강력 문제 제기
- 채용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무산과 문체부 및 프로스포츠협회의 세부 자료 미제출로 실체적 진실 규명 난항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스포츠윤리센터'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프로스포츠인턴십' 특혜 채용 관련 세부 자료 지속 요구, 점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 분야 불공정 실태 강력 비판

주요 내용 및 성과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 스포츠 남북단일팀 추진 실태 비판

-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문재인 정부의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추진 실태 강력 비판
-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최종 출정 협정식과 남북 단일팀 IOC 협정문을 제시하며, IOC 규약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전 자격을 변경해 남북 단일팀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 제기
- 여자농구 종목은 예선부터 단일팀 구성해 본선 진출한 것이 아니므로 규정상 남북 단일팀 구성해 출전할 수 없음에도 문체부가 단일팀을 염두해 예산 편성,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 문제 제기
-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불공정 개입과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중단을 강력 촉구

영진위 블랙리스트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의 태만으로 인해 야기된 위법성 지적

- 영진위 블랙리스트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시효 만료에 따른 위법적 실태 지적
- 징계 시효가 만료된 징계요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라는 불법 업무 지시를 거부한 구성원(전 영진위 계약직 변호사)에 대한 조직적 부당 압력 실태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강력 비판

문체부의 보조금 부실 관리 실태 비판

- 문체부의 '박물관 학예인력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의 불법 실태 지적
  - 문체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정의기억연대의 박물관이 학예인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예산을 지원한 점에 대해 강력 비판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영진위 블랙리스트 징계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후속 추진 상황, 재판 결과 등에 대해 지속 점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념편향 코드인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25 70주년 편향·왜곡 전시의 문제점 지적·개선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25 70주년 특별전의 편향·왜곡 문제점 지적

- 6.25 70주년 특별전에서의 전쟁의 발발 관련 기술의 문제점 지적
  -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으로 역사적 평가받고 있음에도 당시 남북 간의 잦은 내전이 확대되어 시작된 것으로 기술한 점에 대해 강력 비판
  - 특별전의 기획 의도와 개전 책임의 중요성 언급하며 시정 촉구
- 대한민국 군경과 우익에 대한 부정적·편향적 기술의 문제점 지적
  - 대한민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중점적으로 전시, 상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학살은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전시물로만 전시한 점을 지적하며 동 특별전의 편향성 비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반복적 역사 왜곡·편향 운영의 문제점 지적,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역사 왜곡·편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 비판, 의도된 기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 편향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폐관 이후 운영방향 전반에 대한 재논의 방안 제시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운영 개선을 위한 학계·전문가 토론회 개최

- 문체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계자, 학계 및 전문가 참석 토론회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전시·운영 개선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실집행률 저조·목적에 맞지 않는 코로나 추경의 실태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코로나 극복 명분으로 긴급 편성된 추경 사업의 문제점 지적

-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저조한 실집행 실태와 문제점 지적
  - 코로나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긴급 편성된 2020년도 문체부 추경 사업 중 약 7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의 0%에 가까운 저조한 실집행 실태 지적
-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문화재청 ‘대학 유물 정리 사업’의 실태 지적
  - 30개 대학박물관 내 장기 방치된 유물의 정리, 등록에 인력 450명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경안까지 편성해 시급히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임을 지적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대학생이 아닌 40~50대 인력까지 채용돼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약 50억원의 국가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는 혈세 낭비 단기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태 지적
- 문재인 정부의 문화·관광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코로나 방역 국민 혼선 우려 지적
- 문재인 정부가 시급성을 강조하며 편성한 코로나 추경 사업의 대부분이 목적에 맞지 않는 단기일자리 사업임을 비판, 개선 촉구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긴급 편성 추경 사업 집행의 적정성 지속 점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 면밀 검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분야에 대한 무관심, 위기 의식 미약

- 이번 국감을 진행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번의 추경에서 단 한 차례만 농업 추경이 편성된 사실과 한국판 뉴딜 정책과 내년도 예산 등 현 정부로부터 대놓고 홀대받고 있는 농업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미약함을 확인, 농식품부가 농업인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없을 것임. 농식품부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세가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 행정을 펼쳐 가는 자세로 전환 촉구

코로나19! 위기이자 기회로

- 코로나로 '언택트 거리두기' 삶이 가능한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농어촌을 살릴 기회가 되고 있음을 확인. 향후 농식품부의 정책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농어촌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비전 수립 및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확인

옵티머스 사태! 국정감사로 유착의혹 등 진실 규명 한계

-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투자기관인 농어촌공사, 마사회 등이 상품판매와 투자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들께 재차 고발, 모든 공공기관의 책임감 및 경각심 고취. 한편, 특정 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다수 제기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로 진실을 밝히지 못함 점은 한계로 남음.

국민의힘,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실 규명 노력

-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의 소연평도 현장 간담회, 팀플레이를 통한 체계적 질의 등, 정부의 '월북 짜맞추기' 프레임에 맞서 진실 규명 노력

정부의 무차별 탈원전 정책의 일환인 산지태양광과 해상·육상 풍력 추진의 문제점 제기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 고발

정부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노력 촉구(국정감사 일정 중 농해수위 차원의 민간기업 간담회 실시), 농업재해보험의 불합리한 기준 개선 촉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

공무원 피살 관련 월북 짜맞추기 수사 중단 및 진상규명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해경의 월북 짜맞추기 수사 및 사건 은폐시도 추궁

- 9.23 02:30경, 해경청장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된 후 불태워졌다고 전달받고도 아무일 없다는 듯 수색 계속
  - 국민의 생명 지키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을 숨기려는 의도이자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방송에 영향 주지 않기 위함임.
- 증거없고 추정뿐인 '추리소설 수준 수사, '월북 낙인찍기' 위한 선택적 수사
  - CCTV 고장 및 목격자 부재 상황에서 선원들의 진술도 왜곡
  - 실종시각, 부유물, 구명조끼, 슬리퍼, 안전화 등에 대해 특정하지 못하면서 '인위적인 노력' 운운하며 추리 수준의 수사
- '실종' 조사임에도 '자진월북'으로 발표,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임을 미리 공표한 것으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살 때도 어떤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 했는지 공표 안함.
- 상임위 차원 여야 실종 현장 방문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하여 우리당 의원들만 소연평도·NLL 부근 방문(10.14)
  - 조류흐름 및 거리상 헤엄쳐 갈 수 없는 상황임을 육안으로 확인
  - 당일 오후 현장 간담회 개최, '당일 시각 물살 빨라 월북 불가능하다', '그 장소에서 자진월북 시도는 있을 수 없다', '오랫동안 일 했지만 그런 사례도 없었다. 조오련이 오더라도 어렵다' 등 생생한 주민 진술 청취
- 해경 수사 간담회에 대해, 우리당 농해수 위원 성명서 즉각 발표(10.22)
  - 계속되는 짜맞추기와 추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강도높게 비판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위 차원 조치 및 다각도 노력 계속

- 형 이래진 씨 국회 상임위 참석·진술 추진
- 해경 외부 전문수사 인력 확대 보강 요구
- 사건 당일과 조류 등이 유사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공개 검증 및 슬리퍼 국과수 검사 결과 등 구체적 수사 내용 공개 요구
- 실종자 및 유가족 명예회복 위한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권력형 비리 의혹 /

옵티머스 판매 외압 의혹 규명 및 피해자 대책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NH투자증권, 펀드 판매 외압 의혹 및 피해자 보상 촉구

- NH투자증권 정 모 대표는 자신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전화번호를 담당 직원에게 건냈다고 농해수위 국감에서 증언(10.16)
  - 정 대표가 옵티머스 대표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상품에 대해 언급한 점은 당연히 지시로 받아들여지므로 사태 책임이 위중함을 주지
  -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피해 사태의 시발점이므로 피해자들에 구체적 피해보상안 마련 책임 강조
- 펀드 판매 과정에서 기초적인 확인 및 금융감독 가이드라인 등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서 외압 가능성 높음을 지적

마사회 20억·농어촌공사 30억 투자, 외압에 의한 '묻지마 투자' 의혹 제기

- 두 기관은 펀드상품에 대해 금융전문가 자문, 타기관 사례분석, 펀드 내용 분석 등 기본적인 과정 거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투자 과정에 외부 압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 제기
  - 마사회, 옵티머스 로비스트이자 마사회 사업개입 의혹있는 기 모 씨 로비받은 의혹
  - 농어촌공사, *이 모 前 청와대 행정관 투자 커넥션 의혹
    * 윤 모 옵티머스 이사 아내이자 옵티머스 대주주, 사건 터지자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사임(19.10월~20.6월), 직전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18.6월~19.10월)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NH투자증권 및 농어촌공사·마사회 법적 책임 조치 점검

- NH투자증권 대표·관련 직원 구상권 청구, 피해보상안 상임위 보고 요구
- 농어촌공사·마사회 투자 관련 직원 업무상 배임행위 고발 촉구
- 농어촌공사·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정감사 추진 또는 상임위 차원 감사원 감사 의뢰 추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탈원전 정책 참사 /

산지태양광 및 해상풍력 무분별 설치로 농어민 생존 위협

주요 내용 및 성과

농어민 생계와 생명 위협하는 탈원전 시설 문제 지적

-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농촌형태양광 설치로 농지잠식 및 농가소득 감소
  -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농민들에게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보급 필요
- 올해 7월 28일부터 시간당 40~100㎜ 집중호우가 이어진 15일간 산지태양광 총24곳 산사태 피해 발생(하루 1.6건)하여 폭우나 태풍 등에 취약 입증
  - 올 여름 5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같이 기후변화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옹벽 시설과 배수시설 미설치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사면안전성 검토와 모듈(패널) 구조안전성 검토 법적 강제화 필요
  - 산지태양광 시설 허가시 평균경사도를 현재 15도에서 10도로 강화하고, 평균 경사도 측정도 구조물 설치구역의 경사도로 변경 요구
- 해상풍력발전 입지들이 황금어장들과 겹쳐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중
  - 공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사업도 민관협의체 구성 의무화하고,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의견 적극 반영 주문
- 인공조림지에 짓는 육상풍력발전 신중 검토 필요
  - 인공조림지 조성한 곳에 다시 나무를 베어 숲과 환경을 파괴하는 풍력시설 허용하는 자기모순 행위 중단 요구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농어민 생존 위협하는 탈원전 시설 허가 기준 및 안전검사 강화

- 사면안정성 검사 의무화(옹벽시설 의무화 포함)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국토위)
- 산림청, 산지태양광 전수 점검 계획 및 결과 상임위 보고
- 해상풍력 민간사업도 민간협의체 구성 의무화 및 조업 어민 참여 제도화
-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강화 제도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문재인 대통령 사저용 토지매입 위법 및 특혜 의혹

주요 내용 및 성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의 위법성 및 특혜 의혹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퇴임 후 머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용 토지매입 과정에 농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 '영농경력 11년' 기재, 노동력 확보방안 거짓 기재 등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은 농지법 위반이자 헌법 자경의무 위배
- 농지취득자격 신청 당일 이례적 신속 발급도 특혜
- 대통령이 매입한 하북면 농지에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로 형질변경 불가피. 이는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형질변경을 통한 농지 투기의 전형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대통령 사저 건축 및 형질변경 모니터링 계속

-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 제8조 등의 위반 사안 시정 요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2020.8.3~11.30) 결과 및 전국 농지법 위반 사안 향후대책 상임위 보고 요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농작물재해보험! 합리적 개선책 마련해야

주요 내용 및 성과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적용 기준, 농민 부담증가 및 수용성 저해

-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국비 지원율과 보상률을 낮추는 등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저해, 국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자기부담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보험사의 부담을 농가에 전가
- 농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달성보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그 부담을 농업인에게 전가하고, 농업인은 오히려 생산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초래, 결과적으로 농식품부가 보험에 대한 농가의 수용성을 저해시키는 현실 지적
- 재해보험 제도의 할증제와 이로 인한 지역별 보험료의 큰 간극 문제 지적
- 자연재해 발생시 농업피해를 평가하는 손해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정부지원 및 농가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책보험으로서 농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입 가능한 수준의 가입 기준 산정이 시급
- 자동차보험처럼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책임과 의무를 다한 농가에 추가적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의 할증제도(연좌제)에 대한 개선
- 심의위원회 같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용자를 배려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공정한 손해평가 위한 구조 개선 및 가입률 제고 유인책 필요
- 농업재해보험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2021년 예산 증액 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정부가 적극 나서야

주요 내용 및 성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현지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유통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기금으로 2017년 3월 출범,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조성 목표
-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조성된 총 기금은 1,043억원으로, 4년 목표액인 4,000억원 대비 달성률은 26.1%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
-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1,043억원 중 공기업이 864억원(83%)을 출연 했고, 민간기업은 177억원으로 16.9%에 불과한 실정
-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의 민간기업 몫 운영위원 2년9개월째 공석, 민간기업 운영위원의 장기 공석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책임, 역할 촉구
- 기금의 관리, 운영, 모집 등 모든 업무를 운영본부에게만 맡겨둔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농식품부의 자세를 강도 높게 질책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역할 강화

- 민간기업 몫 운영위원의 조속한 임명
-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민간기업 출연 홍보 및 노력
-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방안 강구

기금 운용본부 독립 설치 → 농어업협력재단 설립 필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 발의(정운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탈원전 정책의 국가적 재앙 현황 및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강력 대응

- 국감 초·중반, 신재생에너지 과속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3020 에너지 정책의 허술함 등 집중 제기
- 감사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발표 이후, 청와대-산업부-한수원의 2개월 만에 졸속 결정과 과정 중에 탈법적 조작행위, 산업부 국장과 직원의 자료 삭제 등 감사원 감사 방해 질타

옵티머스 펀드 문건의 신빙성 확인으로 수사 추동력 지원 및 산업부 산하 한전 등 공공기관의 무능한 투자와 윗선 개입 의혹

- 옵티머스 펀드 관련 한전, 남동발전 등 산하기관이 수십억에서 수천억원의 투자 행위, 관련 허술한 검증 과정, 막대한 국민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 집중 성토

공공기관 비리 및 낙하산 기관장의 전횡, 인사 비리 등 도덕적 해이 문제

-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낙하산 인사의 무능하고 편협한 기관 운영, 인사 전횡 등 비리를 집중 질타, 국민적 공분 이끌어 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표 허장성세 정책(가치 삽시다, K브랜드, 스마트팩토리 등), 방만한 R&D, 추경 누수 현상 질타, 장관 홍보성 유튜브 컨텐츠 홍보물 제작 문제 지적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위기(매출감소, 폐업증가, 임대료 문제, 벼랑끝 신용위험)에 따른 경제조망 및 정부 정책 적절성과 효과성, 관련 예산 집행 실태 등 행정력의 취약성 질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탈원전 정책 참사 /

탈원전 정책의 국가적 재앙 현황 및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강력 대응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감 초·중반, 신재생에너지 과속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3020 에너지 정책의 허술함, 그린뉴딜 해상풍력 어민 수용성 등 문제, 산지태양광 산사태 등 공급과잉 태양광 발전 문재인發 '태양광 쓰나미'으로 인한 환경파괴·훼손 및 주민 피해 질타, 폐패널로 환경오염 지적 및 대책마련 촉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특혜 비리 의혹, 국내산 표기지만 사실상 중국산 태양광 부품 문제 등 집중 제기
- 1년 1개월을 끌어온 감사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발표(10.20) 이후, 청와대-산업부-한수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은 2개월 만에 졸속 결정과 과정 중에 탈법적 조작행위, 감사원 감사 방해를 위한 산업부의 조직적 자료 폐기 및 은폐 등에 대해, 국정감사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10.21,10.22 등 2차례)을 통해서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관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비도덕성, 탈법적 국정운영 문제 질타해 우호적 국민 여론 조성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요구

- 청와대-산업부-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요구
- 검찰 고발 결과에 따라 대통령 사과, 산자부 장관, 한수원 사장 등 책임자 해임 및 처벌
-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권력형 비리 의혹 /

옵티머스 펀드 문건의 신빙성 확인으로 수사 추동력 지원 및 산업부 산하 한전 등 공공기관의 무능한 투자와 윗선 개입 의혹

주요 내용 및 성과

- 옵티머스 펀드 관련 한전, 남동발전 등 산하기관이 수십억에서 수천억원의 투자 행위, 관련 허술한 검증 과정, 막대한 국민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 집중 성토해 수사 추동력 지원
- 관련 내용에 대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송혜자 무안 코퍼레이션 대표 등 친여 정부 관계자 등 관련 가능성 의혹과 검증에 주력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국 상황에 따른 조치 검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념편향 코드인사_내로남불 말바꾸기_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

공공기관 비리 및 낙하산 기관장의 전횡, 인사 비리 등 도덕적 해이 문제

주요 내용 및 성과

-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낙하산 인사의 무능하고 편협한 기관 운영, 인사 전횡 등 비리를 집중 질타, 국민적 공분 이끌어냄.
-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수십만장 마스크 구매, 공영홈쇼핑 최창희 사장의 전횡과 측근 인사 채용 비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저리의 수억대 주택자금 대출, 한전 직원 및 가족의 태양광 운영 비리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 집중 제기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

- 관련 부처 및 기관 자체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로 의혹 규명 및 처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표 허장성세 정책시리즈 문제(가치삽시다, K브랜드, 스마트팩토리 등), R&D·추경 누수 현상 및 장관 홍보성 컨텐츠 홍보물 제작 문제

주요 내용 및 성과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위기(매출감소, 폐업증가, 임대료 문제, 벼랑끝 신용위험)에 따른 경제조망 및 정부 정책 적절성과 효과성, 관련 예산 집행 실태 등 행정력의 취약성, 중소기업·중견기업 긴급 정책 점검 각종 정책 자금 문제 등으로 여론환기 및 정책 수정 필요성 단초
- 배달앱(배달의 민족 등) 독과점 및 수수료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접근도가 떨어지는 금융지원 정책, 허울뿐인 소상공인 플랫폼(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업체 중 70%가 매출액 0원') K브랜드 대통령 참석행사에 탁현민 측근 회사 실적 몰아주기, 사후관리 안 되는 초보 수준 스마트팩토리 등 현장과는 동떨어진 박영선 장관표 허장성세 정책시리즈 문제, 소상공인 관련 통계 미흡 등 전시행정 문제, R&D 누수, 4차 추경의 허실 등 질타해 정책 대전환 초석 마련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정책 대전환

- 가치삽시다, K브랜드, 스마트팩토리 등 정책 지속 점검 및 현장 친화 정책 변화 유도
- R&D 예산 관련 면밀한 검토와 대응
- 장관 홍보성 컨텐츠 홍보물 제작 관련 중기부 홍보 현황 및 예산, 내용 등 집중 점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_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

대한민국 전통 제조업 산업단지공단 생산·수출·안전·일자리·산단관리 등 총체적 부실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가산업단지 2019년 총 생산액은 486조 6,622억으로 2015년 509조 6,386억에서 연평균 2.5% 감소, 업체당 생산액도 2015년 129억에서 연평균 3.7% 줄어 2019년 123억 수준. 수출액은 연평균 6.3% 줄어 2019년 1,530억 3,600만불에 그쳤음. 산단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6.1%에서 2019년 28.3%로 축소. 가동률은 2015년 81.2%에서 2019년 78.2%로 떨어졌음. 300인 미만 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19.6%. 영호남 전부 하락. 대구(-26.35), 군산(-11.65)순
- 산업단지 고용인원은 2015년 107만16명에서 2019년 98만7,728명으로 8만2,288명이 줄어들어, 업체당 고용인원도 같은 기간 23명에서 21명으로 감소
-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64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89명, 부상 147명에 이름. 2020년 8월 집계도 이미 작년 수준에 근접할 정도임. 관련 안전 관리인력이 63개 산단 관할하는 데 인력은 28명에 불과
- 관련, 정부의 대책인 스마트 산단, 스마트 그린 산단 등 산단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 문제도 집중 제기해 여론환기 및 정책 개선 노력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의 관련 대책 보고 및 예산 반영 내용 집중 점검

- 스마트 산단 등 관련 구체적 사업 계획 및 대책, 안전인력 예산 반영 내용 집중 점검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보건복지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독감백신 사태 국민 안심 대책 마련 촉구

- 상온 노출 사고부터 백색 입자 발견, 최근 연이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건까지 정부의 백신 관리 감독 체계와 미진한 후속 조치에 대해 집중 질의
  - 상온 노출 사고 초반에는 신성약품이 배송한 백신 접종자는 없다고 자신하더니, 결국 16개 지역에서 3,045건이나 접종된 것으로 드러남.
  - 백색 입자 발견 때는 정부가 뒤늦게 관련 사실을 알리면서 같은 제조사 백신을 6,500명이나 접종하도록 방치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건 발생에도 초반 사흘이나 관련 사실을 숨겼고, 백신의 제조사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발표도 늦어 현장의 불안과 혼란 증폭
- 정부는 충분한 조사없이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 안전과 안심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백신의 전수조사와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접종 중단 촉구

자화자찬하는 K방역의 이면

- 코로나에 더 취약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는 방치 수준인 정부의 무대책 질책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 부족
- 우수성을 인정받은 신속진단키트 도입 필요성
- 광화문과 그 외의 장소를 달리하는 정부의 이중적 방역 지침 지적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뒷전

〈 건강보험 〉

- 전 정부가 감염병 등 위기시를 대비해 쌓아놓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현 정부가 생색내는데 사용
- 건강보험 재무계획에서 슬그머니 부채비율 상향조정하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위협
- 코로나 상황에도 건보료는 올리면서 법적 국고지원 비율 위반
-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에서 급여비에는 국고지원금을 포함하고 보험료에는 미포함하면서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부풀려 포장
- 편향된 문케어 여론조사에 대한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답변 유도하는 여론조사와 기관장들의 조직적 언론 기고 행태 지적
- 의료쇼핑 증가, 상급병원 쏠림, 비급여 폭리 등 문케어의 부작용 지적

〈 국민연금 〉

- 국민연금 장기 재정목표 설정 필요
  - 현재는 장기적인 재정안정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고 장기 자산 배분 전략 수립이 어려움
- 4차 재정추계시 기금운용 관련 비용, 관리운영비, 출산크래딧 지출을 축소하여 연금의 고갈시점을 늘리는 등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신뢰할 수 없음 강조
-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추계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 크다는 점 지적
- 연금개혁 논의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단일안 제시를 포함한 책임있는 자세 촉구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 아동양육시설 중 ADHD 처방률 높은 시설 중심 현장조사 필요
- 학대아동의 조기 발견을 높이기 위한 비상벨, 화상통화 인프라 등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중고거래앱에 신생아 거래글이 게재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혼모 지원, 입양정책 개선 등 관련 대책 마련 촉구
- 민간이 운영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한 국가 지원, 관리 필요성 강조

그 외 정책 질의

- 의사 국시 재허용 여부는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특화서비스 아닌 기존서비스에 불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더니 실상은 높은 계약직 비율 ▲노동계 인사, 정치인 등 코드인사 임용 등 지적
- 식약처장의 업무관련 주식보유 지적. 백지신탁위에 재심 청구하겠다는 답변 받아냄.
-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도입 필요성,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제고 필요, BF인증 신규 취득 비율 34%에 불과하고 지속 유지될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독감백신에 대한 우려로 어느때보다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복지위는 정쟁보다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

- 국감 당일 사전전략 회의를 통해 당일 이슈에 대한 토론, 위원간 질의사항 공유, 쟁점 현안에 대한 역할 분담 등 팀플레이를 강화하였음. 국회-세종-오송을 연결하는 화상 국감을 시도하였고 독감백신 사망자 급증하는 날에는 정은경 청장이 사태에 집중하도록 오후 질의를 기조실장으로 대신 진행하기도 함.

보건복지위원회

/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

상온노출, 백색입자에 이어 접종후 사망사건 발생까지 독감백신 포비아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독감백신 사태 정부의 늑장행정과 무능 지적

- 공급량은 늘었는데, 유찰, 재입찰 과정으로 최종 낙찰이 9월초로 늦게 이뤄지면서 짧은 시기에 배송되도록 만든 정부 책임 지적
- 상온노출 사건 초기 정부는 상온노출분 백신 접종자는 없다고 자신하더니, 실제 상온 노출분 백신 접종자 3천명 육박
- 백색입자 발견 10.6 첫 보고 받고도 10.9일에서야 국민에게 알림.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10.7~9일 6,479명이 문제의 백신 접종받도록 방치
- 과정에서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진 대국민 공개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건 발생에도 초반 사흘이나 관련 사실을 숨겼고 백신 제조사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발표도 늦어 국민 불안을 키움.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70세 이상 하루 560명 사망한다며 사망자 부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독감백신과 사망자는 관련 없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접근

  ※ 신성약품 물류창고에서부터 독감백신이 상온에 장시간 노출된 채 운송되고 있는 영상, 사진 공개

독감백신 부족분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 불안 해소방안 마련 촉구

- 상온노출 사건으로 48만 도즈, 백색입자 발견으로 61만5천 도즈 등 총 107만 도즈 회수(중복제외)되면서 백신 부족사태 발생
  - 실제 접종 현장에서는 백신부족으로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가능여부 확인하면서 맞아야 하는 백신난민 사태 발생
- 정부는 문제발생 백신에 대해 안전하다고 반복하지만 국민 다수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음 강조. 국민 안심 대책 마련 촉구

국민건강에 관한 사항인 만큼 전수조사와 문제분 전량폐기, 안전성 확보시까지 중단 촉구

- 국민 다수는 독감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해 극도로 불안함. 야당은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문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
- 책임있는 정부라면 백신에 대한 비파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능성이 있는 백신의 경우는 전량 폐기, 안전한 백신 공급방안을 조속 마련해야함.
- 접종후 사망사건 발견에도 정부는 충분한 조사없이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 안전과 안심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백신의 전수조사와 안전성 확보될때까지 접종 중단 촉구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국가 백신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20.12)를 토대로 방안 마련
- 저개발 국가로 가는 백신은 콜드체인 유지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국내유통분에도 적용 필요
-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항인 만큼 백신에 대해서는 비파괴 전수검사 법안 마련
  - 백신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까지 전사적으로 '안전성 품질'을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토탈 퀄리티 콘트롤, 즉 TQC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추진
- 유통업체에 대해 콜드체인 교육 강화

독감백신 입찰과정에서 동일한 금액 제시 등 담합 의혹 조사 필요

- 독감백신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보건복지위원회

/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

자화자찬하는 K방역의 이면

주요 내용 및 성과

정부의 이중적 방역지침

- 공중보건 방역지침이 광화문과 그 외 장소가 왜 다른지 지적. 정치방역의 행태 강조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등 방역 역행

- 정부의 코로나 방역 역행 행태 지적
  - 2월 대통령의 방역 부적절 발언("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될 것",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등) 이후 대구·경북 집단 감염 사태 발생
  - 5월 거리두기 완화 직후 이태원발 클럽 감염 사태 발생
  - 7~8월 대대적인 쿠폰발행 이후 2차 대유행 발생
-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에 대한 반성은 없이 집단감염에 대해 국민탓만 하는 행태 지적

코로나에 더 취약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는 방치 수준

- 취약계층 코로나 치료 인원은 1,989명으로 전체 10.66%나 차지(8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취약계층 비율인 2.94%보다 3.62배 많은 수치. 역대 최대 추경을 했지만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전무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우수성을 인정받은 신속진단키트 도입

- 대한민국, 코로나 검사율 세계 119위 수준으로 높지 않음. 조용한 전파자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속진단키트 도입 필요성 지속 강조
  - PCR 검사의 대체용이 아닌, 무작위 검사용 또는 PCR 검사의 보조 성격으로 도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 강조

- 추경을 통해 확보한 치료제와 백신개발 예산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시
- 적극적 백신확보를 위해 코벡스퍼실리티 참여를 위한 예산 반영

코로나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대책 마련

- 코로나에 더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예산 반영
- 상급병원 입원을 위한 코로나 검사비용 지원 우수성을 인정받은 신속진단키트 도입

보건복지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적립금 털어 생색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문재인 케어

주요 내용 및 성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 정부와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최소 10~20년 뒤까지 재정 추계를 낼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연평균 3.2% 건보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민 80%는 건보 인상률이 높다고 생각함. 건강보험재무계획 2018년에는 부채비율을 100% 이하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계획에서는 부채비율을 150% 이하 유지로 변경, 부채비율 상향은 결국 건보의 재정건전성 위협과 국민 부담만 가중
- 백내장, 안과질환 검사비,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 등에 문재인케어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들의 과잉의료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천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도 비급여항목이 추가되며 국민들의 부담은 결국 같아짐. 국민부담을 줄여준다던 목표와는 반대로 가고 있어 문재인 케어의 허구성이 드러남.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기금외로 운영, 국회의 재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정위험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기금화 필요
-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급한 조치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 민생·경제 참사 /

국민연금 개혁은 뒷전인 채 보은인사에 도 넘은 일탈행위까지

주요 내용 및 성과

정부의 책임 있는 단일안 마련 촉구 및 공단의 도 넘은 기강해이 지적

- 4차 재정추계 당시 2057년 고갈이 예상,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고갈시점이 2057년보다 당겨질 수 있으며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해 재정목표 설정이 안 돼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음이 지적됨.
- 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후보로 출마했고 5월에 연금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대내외적으로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
-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7월)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사내 갑질, 기밀정보 유출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57명에 달하고 습관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사람들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했다는 점 등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함.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정부의 책임있는 단일안 마련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쇄신대책 마련 촉구

-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단일안 마련 등 책임 있는 자세 촉구
-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각별한 조치 요구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청와대의 인국공 사태 개입의혹 규명과 이스타 항공 노동자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주력

-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이 이 정부의 실정으로 사망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등 국민고통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님. 정부여당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국공 사태의 진상규명, 즉 청와대 개입의혹 규명을 방해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에 이은 정의에 반하는 국감태도를 보였음. 또한 이스타 항공 노동자 정리해고(605명) 사태에 직면하여 문재인 정부는 해결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노동자를 자기 입맛과 정치적 선택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는 등 '선택적 노동관'을 여실히 드러냈음.
- 2020년 국정감사는 정부의 비협조로 일정 부분 한계를 안고 시작했으나 감사횟수를 거듭할수록 인국공사태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의혹이 확대되었으며, 이스타 항공 노동자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경사노위가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댐관리 부실 등 수해관련 진상규명

- 수위조절 등 댐관리 실패로 인한 수해발생 책임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허위 해명을 지적하고,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통해 천재가 아닌 인재임을 입증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6명의 댐관리 조사위원의 교체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했음. 피해 농민 등에 대해 배상을 촉구하고, 수해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음.

환경노동위원회

/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

정부의 무능·불법·편법, 예산낭비 등 시정요구

주요 내용 및 성과

정부의 무능·불법·편법, 예산낭비 등 시정요구

- 환경부 산하 기관의 낙하산 인사(7개 기관 24명이 낙하산, 이중 환경공단은 핵심간부 7명 중 5명이 낙하산)의 심각성을 밝혀 냈으며, 산업안전공단이 500억원의 삼성전자 백혈병 기부금을 수도권 건물매입(390억원)에 사용하는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산업안전공단의 3차추경에 따른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3천명 단기일자리에 산재기금 302억원 낭비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
- 사회적기업의 공제사업 카르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음.
- 기상청 예보 적중률이 92%라는 기상청의 주장을 질타하고, 기상청의 청렴도 최하위, 국민만족도 최하위, 지진관측장비 오작동 등 기상청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시정하도록 요구했음.
-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이후 지방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고,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에 정부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음.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감사원 감사 요구

- 사회적기업의 공제사업 카르텔에 대한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토교통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2020년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성과

①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와 이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 국민을 힘들게 한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자,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 카르텔 실체규명 성공
- 민간 KB통계와 정부 감정원 통계 수치의 정밀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눈속임 부동산통계의 허구성 입증

②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캠코더-낙하산 인사 문제

- 자격 미달 낙하산 기관장들의 부적절한 정치 활동과 각종 비위행위 문제 적발로 감사원 감사 청구, 해임요구 성과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좌관 출신 등 부적격 인사들이 각종 특혜를 받아 거액을 받는 각종 협회 및 조합 고위직에 임명된 의혹 적발

③ 인국공 사태 등 무리한 정규직화 추진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 청와대의 직접개입에 의한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노·노, 노·사 갈등과 취업준비생의 박탈감만 더 심화시킨 문제 지적

④ 이스타항공 사태 등 문재인 정부 권력형비리 의혹

- 이상직 창업주의 편법승계와 체불임금 문제 등 이스타항공 경영 과정상의 문재인 정권과의 유착관계 의혹 문제 집중 제기

⑤ 방만한 경영실태와 강성노조의 초법적 월권에 휘둘리는 공공기관 문제

- 국민 혈세로 가짜 단기일자리 양산과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급등 등 방만경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 지적
- 문재인 정권 창출 일등 공신인 민주노총에 과도한 노사협의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공공기관 논란 질타

국정감사 증인소환으로 실체규명 시도

①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자 :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

② 인천국제공항 사태 : 구본환 前 사장, 조성재 前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도재형 現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③ 이스타항공 의혹 : 이상직 의원, 이원준 이스타홀딩스 대주주, 장영신 애경회장,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 국민 관심이 큰 현안 중심으로 증인심문을 통해 실체규명을 시도하였으나 민주당의 국정감사 무력화를 위한 강한 반대로 채택하지 못함.

국토교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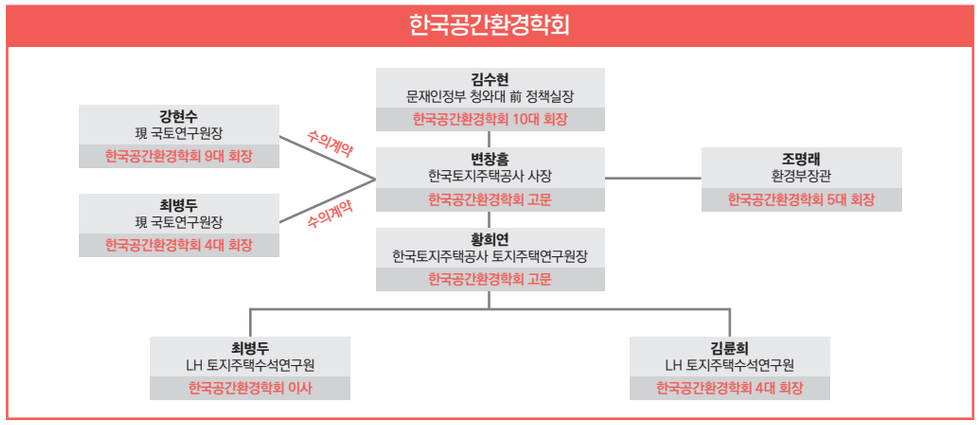
/ 부동산 참사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본산, 김수현 카르텔의 실체!

주요 내용 및 성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본산, 한국공간환경학회 카르텔 적발

- 실패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이 10대 학회장을 지낸 급진좌파 성향의 한국공간환경학회 출신들이 現 정부의 국토·토지·주택·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포진하여 부동산정책에 특정 이념을 투영,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하는 광범위한 부동산 카르텔의 실체 규명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속된 한국공간환경학회 출신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 만연 사례 적발
-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핵심인사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친 이너서클을 만들어 놓고 성역을 구축, 내 편만 챙기는 혈세 나눠 먹기 의혹 제기



※ (사)한국공간환경학회 연혁 (홈페이지 발췌)

- 지난 1988년 7월 17일, 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감사원 감사청구 및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 부동산 참사 /

부동산가격은 못 잡고 부동산통계만 잡은 문재인 정부

주요 내용 및 성과

문재인 정부의 눈속임 부동산통계 조작 등 신뢰성 문제 지적

- 국가공인 부동산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가 표본보정을 거치면서 통계수치가 바뀌는 현상 적발
-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
- 부동산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함을 지적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통계 문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정원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112.6) 증가, KB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0.9%(96.1→125.8)급등,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로 벌어지는 등 감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격차가 MB정부의 38배에 달함.
- 감정원 통계 中 아파트가격 상승률 나타내는 지수는 매매가격지수 등 총 6개가 있으나, 통계 간 차이가 최대 39.8%까지 나면서 어떤 통계수치를 인용함에 따라 시장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는 상황 지적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한 'KB 통계 산출 방식은 호가 중심'이라는 주장 전면 반박, KB 측에선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각종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와 금융기관 곳곳에서 KB 통계를 감정원 통계보다 우선해서 사용하는 사례를 조목조목 들며 시장에서 신뢰하는 통계임을 입증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지적을 수용하여 시장 상황을 반영 못하는 정부 부동산 통계 문제를 인정하고 공공통계 강화방안을 강구 할 것 지시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지속적인 정부통계 표본 공개요구 및 공공통계 조작 여부 감시

국토교통위원회

/ 부동산 참사 /

마포 사는 전세난민 홍남기씨의 딱한 사연...
테스형 세상이 왜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주요 내용 및 성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관련

- 잘못된 목적을 가진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정책이 시장 왜곡을 가중시키며 국민들의 삶을 팍팍하고 험난하게 만들고 있음을 나훈아의 노래로 풍자
-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문제를 시중 유동성 증가 탓, 저금리 탓, 코로나 탓에 급기야 전 정권 핑계만 대고 있는 현실 지적
- 주택대란이 일자 부실하게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은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 타 부처의 문화재 보전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 불투명
- 또한, 들쭉날쭉 엉터리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기도 3 ~ 6억 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208.87%) 늘어난 것으로 확인
- 공시가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증세를 하려다 보니 정작 내 집하나 있는 서민들의 세금부담만 증가된 것을 지적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대국민사과를 이끌어냄

멀쩡한 임대차 시장을 초토화시킨 임대차 3법의 혼란

- 계약갱신청구권 소급적용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전세매물 소멸, 전세가격 수직상승, 전세난민 양산 등 임대차시장 부작용 문제 지적
-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피할 수 없었던 임대차 3법의 혼란 사례를 들며 정부를 향해 국민여론 전달
- 길거리에 나앉을 국민들의 애끓는 사연에 새집을 알아보라는 장관과 노숙을 하라는 정부 콜센터의 황당한 답변을 공개하며 국민공분을 이끌어 냄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사례 대국민 여론전 시행 및 국회입법 대응

국민신뢰를 배신한 정책실패 책임자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 이념편향 코드인사 /

캠코더-낙하산은 계속되고, 하다 하다 처제 찬스까지...

주요 내용 및 성과

문재인정부 캠코더-낙하산 인사 임명사례와 비위행위 적발

- 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의 임직원 코로나 성금 1억 3천만 원을 친여 성향 단체 및 개인적 인연들이 포진한 단체에 몰아준 부적절한 처신
- 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의 비상임이사들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자마자 그 자리에 다시 낙하산인사를 채우고,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 낙하산 인사들이 개인 정치 활동을 하는 등 자질과 품위 문제 지적
- 국토정보공사 류근태 前 상임감사의 경우 직원들이 반납한 성과급 4억 1,700만 원을 이상직 의원 지역구인 전주 완산구에 몰아주고, 특정지역 출신을 승진시키거나 배제하라는 부당한 인사개입, 허위 예산편성 및 부당 집행강요 등 각종 비위행위로 해임되었으나 처벌받지 않은 문제 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의 지난해 차량 불법개조 관련 위증 사실을 지적하고 회사직원을 자택 경호업무에 동원하는 갑질행위·회삿돈유용·인사전횡·근무태만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요구
- 제주개발공사 문대림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개인의 수상하고 부적절한 토지거래 의혹 추궁
-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폭언논란으로 해임된 코레일네트웍스 하석태 前)사장의 부당 사용금액 환수조치 촉구
-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 조영진 사장은 민주당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 현직임에도 공공연히 SNS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공직 유관단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배 등 선거법 위반 가능성 적발
- 억대 연봉을 받는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의 28.6%가량이 전문성도 없는 문재인 정부 캠코더-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사실 질타

추미애 법무부장관 친족인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보은인사 특혜의혹

- 연봉 1억3천만원, 업추비 4,200만원에 달하는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에 건국대 교직원 출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당시 여당 대표) 형부 정인경씨가 이력서 한 장으로 공모 신청, 단독 추천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임명
- 연봉 1억9천만원, 업추비 무제한에 달하는 한국건설인협회 상근부회장에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건설기술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김현미 국토교동부 장관 前 보좌관 출신인 김영환씨를 임명, 부적격 인사 정리요구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낙하산 인사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위법 행위를 지속 발굴하여 관련 문제 제기와 감사원 감사청구, 해임요구, 형사고발 등 실시

국토교통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문재인식 정규직 전환에는 공정과 정의는 없었으며, 모두가 피해자다

주요 내용 및 성과

청와대의 직접개입으로 사회적 갈등만 커진 인국공 사태

-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 이후 노조수는 7→12개로 증가, 보안검색직원 1,900명은 청원경찰 직고용 1,000명과 경쟁채용 900명은 자회사 정규직 요구로 나뉘어 반발 中, 소방·방재직 241명은 직고용 194명, 해고 47명이라는 최악의 성적표
- 이 같은 결과는 수년간 논의하고 합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고용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청와대의 무리한 지시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
-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 주장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서 제출 등이 8건에 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발견
-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실적을 위해 공정성은 훼손되고 노노·노사 갈등만 심화시키며 모두가 희생당한 최악의 결과가 나왔음을 질타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 단기일자리가 낳은 文적폐 문제

- 정규직화를 위해 신규 설립된 각종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들은 직무 관련 유관경력자가 아닌 캠코더-낙하산 인사만으로 채용
- 도로공사의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총 6,500여명 中 자회사 정규직 5,100여명, 공사 직고용 1,400여명)으로 공사 직고용 된 1,400여명의 수납원이 신규 직무요구와 고도의 기술과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무와 동일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며,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한 업무태만 적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로만 13,612명 채용, 예산만 823억원 투입하며 공공기관 경영부실 초래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공정성이 훼손당한 무리한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대국민홍보 지속

가짜일자리 예산 삭감 추진

국토교통위원회

/ 권력형 비리의혹 /

이스타항공·옵티머스 사태 등 끝없는 文정권 권력형비리 의혹!

주요 내용 및 성과

이스타항공의 권력형비리 특혜의혹

- 2015년 10월 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이스타홀딩스(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산 1,500억여 원의 이스타항공 지분 약 63%를 인수해 편법승계
-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 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고 총수는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등 이스타항공과 文정부는 각별한 관계
- 이스타항공의 2018년~2020년 9월까지 7회 부과된 과징금 중 5회(27.6억원 중 11.4억원), 41.3% 감경으로 親與 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 적발(같은 기간 대한항공 3억원, 아시아나 및 LCC 3곳은 0원)
- 또한, 인천공항 활주로 골프장(스카이72CC) 운영사업자 선정 時, 신규업체(KMH)가 낙찰 받는 과정에서 특정지역 인맥(이상직, 구본환, 이강래, 이종찬 등) 親與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제기

건설관리공사가 처음 투자한 펀드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옵티머스, 회수가능성은 미지수

- 잉여금 발생시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던 건설관리공사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 내부 규정도 없이 담당자(재무팀장)가 유선 통화만으로 공사 창사 이래 최초로 펀드 상품에 투자 결정, 결재서류 또한 정기예금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수상쩍은 정황이 많음을 지적

옵티머스 연루 의혹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 옵티머스 고문인 채동욱 前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부적절한 만남에서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민원 청탁을 했다는 의혹 제기
- 실제 만남 뒤 여러 하자가 발견된 사업임에도 공고를 내는 등 최종 결정권자인 이 지사의 개입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라는 수상한 정황 포착
- 이 과정에서 선거나 정치적 입지에 관한 문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채 前 총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끌어냄.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각종 권력형 게이트의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수사 의뢰, 특검도입 추진

국토교통위원회

/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

방만한 경영실태와 강성노조의 초법적 월권에 휘둘리는 공공기관

주요 내용 및 성과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로공사 인력 8,633명 증가로 인건비 급등(인건비 144.6% 증가, 당기순이익 -26.5% 감소), 1인당 매출액 절반 이하로 급감
-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의 경우 매우 부적절한 예산운용
- 결국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등 방만경영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전달되어 비용을 전가하게 될 우려
- 또한, 공공기관 퇴직예정자들을 정규직전환 신규 자회사에 재취업 시키며 정년연장 자리보전용으로 활용 中

강성노조의 초법적 월권에 휘둘리는 공공기관

- 코레일은 불법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조합 활동까지 보장해주는 민주노총의 초법적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사분쟁 야기 및 사측의 정당한 인사권 및 재판권에 중대한 침해 발생
- 성과급 재분배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철도노조의 성과급 재분배 지속 횡행
- 경영평가 등급을 부풀려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공공기관(코레일 등)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작해왔던 사실 적발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대법원 판결 이후 총인원 8,810명인 도로공사에 민주노총 조직원 959명(10.9%) 진입
- 도로공사는 '노사상생협의체'로 확대한 새로운 노사협의기구를 만들어 '한노총 4·민노총 5·비노총 1' 등으로 구성, 소수노조인 민주노총 8,810명 中 925명(10.5%)에 과도한 노·사 교섭권한을 주는 방안 추진 中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자칭 촛불정권의 집권을 도와준 민주노총의 청구서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실태 지속 공개(공공요금 인상, 청년일자리 소멸 등)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증인채택 거부, 합의된 참고인 일방적 철회 등으로 국감을 방해한 민주당

-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국감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증인·참고인 명단을 작성하여 여야 간사회의에 제시하였으나 민주당은 일체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10월 20일 1차 성명서 발표를 통해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했으나 또 무산되었고, 여야가 합의한 참고인(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힘.
- 10월 25일 2차 성명서 발표를 통해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로 국감을 방해하는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 강력 질타

☞ 국고보조금 횡령, 사기 관련한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와 관련된 증인·참고인이 단 1명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여가위 국정감사는 맹탕국감, 하나마나한 국감이 됨.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안일한 인식 집중 질타

- 피해자보호를 외면한 채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여가부의 행태 지적하고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여가부의 사업 운영의 문제점, 불법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 필요성 제기

-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연에 대한 여가부의 자료제출 거부를 강력 질타하고 자료제출 및 열람에 적극 협조할 것 촉구

여성가족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윤미향 정의연 기부금 사적유용 논란

주요 내용 및 성과

윤미향 사건 (정의연, 정대협 기부금 유용)

- 2020. 5. 07,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후원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 2020. 5. 11, ‘활빈당’ 등 시민단체, 윤미향과 정의연을 횡령·사기 등 으로 검찰 고발
- 2020. 5. 15, 검찰 조사 착수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 2020. 8. 13, 검찰 조사
- 2020. 9. 14, 불구속 기소(사기, 횡령 등 6개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
  -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을 예정
  -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 2020. 9. 26, 공판준비 기일을 11월 30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여가부에 대해 강력 항의 및 자료제출 협조 요구

여성가족위원회

/ 공정·정의 실종 /

권력형 성범죄

주요 내용 및 성과

박원순 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

- 2020. 7. 8,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인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 A씨는 고소인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
- 2020. 7. 9, 박원순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권력형 성범죄 관련 이정옥 여가부 장관 주요 답변

-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의원의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은 가해자이냐 피해자이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기피
-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있나"라고 질의에 대해 "피해자가 있다"고 답변 (일부 인정하는 답변을 함)

후속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 관련

-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하여 수사 대상자도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
- 간사 간 증인채택 합의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번복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국감에 증인, 참고인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원할 경우 검증 후 채택하도록 관련 법 개정 필요

2020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 국회운영위원회 ····· 151
▶ 법제사법위원회 ····· 163
▶ 정무위원회 ····· 171
▶ 기획재정위원회 ····· 181
▶ 교육위원회 ····· 19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99
▶ 외교통일위원회 ····· 207
▶ 국방위원회 ····· 215
▶ 행정안전위원회 ····· 2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3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4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51
▶ 보건복지위원회 ····· 263
▶ 환경노동위원회 ····· 271
▶ 국토교통위원회 ····· 277
▶ 여성가족위원회 ····· 289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2020
국정감사
백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원 **김성원** /

감사원 감사결과도 내로남불 청와대!
실속없이 혈세만 축내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통폐합해야!

주요 내용

(대통령비서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인식문제 제기, 실속없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통폐합 주문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비서실장으로부터 "국가에너지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넌센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음.
- 감사원 감사결과별로 청와대의 달라지는 평가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처의 저항이 심해지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또한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자문위원회 중 77개의 위원회가 조직을 만든 이후 단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등 별다른 역할없이 엄청난 혈세만 사용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통폐합을 주문함.

(국회) 입법조사처장, 예산정책처장, 도서관장 임명 시 서류제출 보완 및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기준마련 주문

- 국회입법조사처장, 예산정책처장, 도서관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있음을 지적함.
-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할 것을 주문함.
- 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과 관련 조사회답 자료를 일률적 공개할 경우 국회의원 고유의 입법정책 아이디어가 다듬어지기 전에 공개되고, 뜻하지 않게 정치적·사회적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 조사회답서의 공개, 비공개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나 조사처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함.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원 **곽상도** /

문재인 정부의 무사 안일주의, 탁상행정 질타

주요 내용

기강해이 도 넘은 청와대

- '정관계 인사' – '옵티머스 펀드'간 로비 의혹 녹취를 사례로 청와대 내부 감찰 등을 통한 철저한 감독 요청
  - '임OO실장, 기OO의원 등 골프치러 다니는 멤버다'
  - '기OO을 의원 되기 전부터 케어했다.'
  - '기재부 백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 고위 인사들과 밥 먹기로 약속했다.'
  - '경제공동체는 특수관계… 돈주면 된다'
- 청와대 인사들의 각종 수사·재판 현황을 사례로 공직기강 해이 지적
  - 조국 비리사태,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연루 재판, 겸직 금지의무 위반, 울산시장 선거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등

인권위의 업무 태만

- 인권위는 손 놓은 인헌고 사태, '편향교육' 주장한 인헌고 학생이 직접 학교 상대 징계 취소 소송해 승소
- 2018년 인권위의 정의연·정대협 사무점검은 주무관청으로서 부실한 관리감독, 사후 조치 필요
- 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조속한 처리 촉구

국회사무처 탁상행정 아닌 융통성 발휘해야

- 출근시간, 발열체크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 등 개선책 마련 촉구
- 국회 도서관 검색기능 개선필요 및 국회의원회관, 소통관 누수문제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원 **김도읍** /

선택적 침묵, 의도적 침묵하는 文정권, 안보는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

주요 내용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인권위 차원 조사 필요성 지적

-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인권위 태도 지적하며, 진실규명 위해 인권위 차원의 조사 요구

인권위, 교정시설 내 수감자 인권 보호 필요 지적

- 교정시설 내 의무관 직무유기, 불법의료행위 등 교정직원들의 부패행위의 심각성 지적, 인권위법에 따라 수용자 인권침해 관련 직권조사 요구

국회도서관 부산관 건립 관련 직제개편 및 상시개방 고려 촉구

- 청년 실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려하여 지역인재 선발 할당 확대 및 지역 주민 문화 향유권 보장 위한 365일 상시개방 필요성 촉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청와대의 안일한 대응 지적

- 해수부 직원 피살 사건 주체를 '북한'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는 청와대 태도 지적 및 핫라인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에 대한 조속한 귀환 요구 없었던 점에 대한 지적

文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대표직 걸고 지켰던 민주당 당헌 뒤집어도 침묵

- 박원순·오거돈 前 시장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후보 내기 위해 당헌까지 뒤집는 민주당에 대해 침묵하는 대통령 모순 지적

현실경제 직시 못한채 '경제반등'이라 자찬하는 文 정부

- 왜곡된 자료 해석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다른 국가채무 비율 전망 지적

청와대의 제 입맛대로 인사검증

- 부동산 투기 의혹 이강섭 법제처장, 다주택 청와대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태도 돌변

文정권, 자기편 심기 위해 검찰인사 시스템 붕괴

- 검찰총장 패싱한 검찰 인사 비롯 '친문 영전 반문 좌천' 등의 행태 지적

옵티머스는 청와대 위한 경제공동체

- 이진아 靑 행정관 비롯한 친여인사 및 옵티머스 관계 정황에도 내식구 감싸기

라임사태 검찰수사 방해 및 여권인사 개입

- 여권인사 개입 정황 라임사태 수사 중이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 법무부의 조직적 라임수사 방해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원 **김정재** /

(청와대) 선택적 침묵과 불통으로 일관하는 태도 비판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前 시장 성희롱 등에 관련된 철저한 직권조사 기대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공무원 비위행위, 철저한 진상조사 및 처벌 촉구

주요 내용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불리한 이슈에 선택적 침묵하는 청와대 비판

- 文대통령이 당대표 때 마련한 혁신안인 당헌을 개정하고 내년 재보선에 후보 공천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현재 당원인 대통령의 입장표명 촉구
- 이번 민주당 공천은 오거돈·박원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박원순 前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정의연 윤미향 사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불리한 사안에 선택적 침묵하는 청와대 비판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및 임대차 3법으로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 전달

- 치솟는 서울 부동산 가격, 메마른 매물, 양극화 가속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 전달
- 부동산 시장 정부개입의 실패 인정하고 시장 간섭 규제 최소화 필요 강조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 인권위가 밝혀야

- 성추행 사실, 인물, 장소, 서울시와 경찰 등 권력형 성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여과 없이 밝혀 피해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길 당부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상대로 갑질, 세금도둑질 일삼은 국회방송 공무원

- 비정규직에게 추가 근무 수당 부정기록 지시 갑질로 매년 수 백만 원 부정수령한 국회 공무원 진상조사 및 처벌 촉구
- 국회 내 전수조사 실시 및 시스템 점검 강조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원 **박대출** /

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국민을 코로나 소굴로 가둔 '재인산성'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결단을 해야 할 시점

- 윤 총장과 추 장관 갈등이 심각한 단계에 와있는데 국정에 부담된다고 판단하는가?
-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가 더 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법치 논란, 법치 파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도 국정 부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진언해야 할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표직을 걸고 추진했던 이른바 '문재인 혁신'을 지운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

- 2015년 7월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에서 10개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고, 1호 안건이 부정부패로 직을 상실하면 (해당 지역구에) 무공천을 하기로 함.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사망 사건이라 표현한 것은 부적절
- 피살 사건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사망 사건은 제3자적 객관자적 입장에서 보는 것.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처지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함.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이 시위대를 한쪽 코너로 몰아넣은 '재인산성'

-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
- 국민을 나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게 아니라 감염 위험을 높였어야 하는가?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원 **신원식** /

북한 First 靑·국가인권위 및 불공정 국회

주요 내용

서훈 국가안보실장

- 종전선언은 결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동인(動因)이 될 수 없음.
  → 여러 차례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핵개발 의지 포기 없었음.
- 제46대 美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측에 종전선언 협의를 추진 할 계획인가?
  →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함. 선언만 한다고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 북한 입장에서 실익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그동안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고 대한민국만 양보하는 모양새가 지속되어 왔는데 또다시 실책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 多
  → 종전선언이라는 선언만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오명호 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평가 진행하고 낮은 등급 부여
  → 제도적 개선을 통한 부당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
- 채용심사 인사위원회의 부당한 내부방침을 사유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재계약 불가 처리
  → 채용과정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시신훼손은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인가, 아닌가?
- 북한은 반인도적 행위를 우리가 감싸는 태도를 보이면 그또한 반인도적이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 이에 국가인권위원장은 동의하는가?
- 귀순자 2명 강제북송과 관련한 인권위의 진정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진정처리에 늑장대응인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설립목적에 맞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람.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원 **정점식** /

해수부 공무원 피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점검 및 탈원전 정책 검토! 국회 출입증 발급 및 국회입법조사처 전문성 실태 점검하고 대안제시!

주요 내용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청와대 비판!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해경의 세차례에 걸친 단정적 월북 표명을 비판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입장 추궁
- 해수부 공무원 피격과정에서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보고시기 및 조치사항을 꼼꼼히 파헤침.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청와대 보고 이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청와대 비판

총체적 종합비리세트!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청와대 개입의혹 점검!

-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의 조직적인 개입과 외압이 없었는지 점검
-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원전산업 붕괴, 우수인재 유출 비판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성 확보방안 제시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입법·정책 활동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이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그러나, 행정직은 41%,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42%에 달하며, 연구관 비율은 고작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직 비율을 상향하고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향후에도 관련사항을 점검해 갈 예정임.

국회 출입증 발급 실태 점검

- 2020년 신규로 발급된 국회청사 출입증 발급매수는 총 3,849매로 위원회 소관기관이 1,624매, 유관기관 656매 등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
- 남발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일부는 국회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출입증 발급을 확인하였음.
- 국회 출입 및 방문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명확한 발급기준을 정립하여 국회 청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원 **정희용** /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제시' 국정감사 실시

주요 내용

(대통령 직무평가 하락) 대통령 취임 이후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원내대표 몸수색, 검찰 문제, 부동산 문제, 독감백신 문제 등으로 대통령 직무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함.

- (후속조치) 대통령이 초심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주 소통하고, 민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촉구

(문재인 펀드) 2012년 대선 당시 모금된 문재인 펀드의 약 1억9,000여만 원에 대한 미상환을 지적하고, 소액기부자 환급 방안, 공익적 목적 사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

- (후속조치) 문재인 펀드 미상환 문제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끌어냈으며, 미상환 금액을 공익적 목적으로 쓰거나 국고로 반납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끌어냄.

(청와대 인력관리 시스템) 옵티머스 사건의 이진아 前 행정관의 연루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편의 조사 중에도 근무하고 있었던 정황,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함.

- (후속조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남북연락채널 확인 및 부적절 대응 ▲성급한 월북 주장과 고인,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통령이 한 약속에 대한 과정 점검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우선할 것을 촉구

- (후속조치)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남북연락채널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개선 답변을 끌어냄.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원 **조수진** /

무능력, 무책임, 무규칙한 文정권 비서실 행태 지적

주요 내용

[청와대]

권력형 비리 없다고 자부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는 각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되어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체적 진상 파악 요구
- 비리 연루 직원 관리에 소홀한 비서실장의 무능,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질타
- 공수처 출범 전까지 지지부진한 특별감찰관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대상 질의
- 5천만원 수수 의혹받는 강기정 前 정무수석에 대한 철저한 팩트체크

끝없는 편가르기,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 진보진영에서도 등 돌리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편가르기와 내로남불 기조를 질타
- 문 정부가 뉴노멀이라 주장했지만 다주택자들의 투기의혹 및 부실검증에 대한 지적

[국회사무처]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사무처

-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 몸 수색, 경호처의 무분별한 본회의장 총기 반입 관련 사무처의 엄정한 규정 미비 질타
- 출마위해 거쳐가는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가 정치중립성에 대해 항상 논란이 된 이유 집중 지적
- 출연료 예산의 25% 황제출연료 받고 입법조사처장된 김만흠 처장에 대해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前 서울시장 사망 이후 진척없는 인권위 직권조사, 親與 성향의 국가인권위원장의 공정성 촉구

- 연내 직권조사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시급성을 고려하여 2차 가해가 더는 없도록 빠르게 진행할 것
- 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2016년) 서울시 인권위원장, 2012년 민주통합당 공천 심사위원, 2011년 박원순 지지선언 등의 이력을 지적하며 공정과 객관성 요구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원 **주호영** /

공정하다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불공정 지적

주요 내용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사범을 처벌하는 장관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

-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선거 관리와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
- 당적을 가지고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당적을 유지하면서까지 중립성 훼손의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공정을 외치는 내로남불을 반복하지 않아야 함을 피력

5년 전, 대북전단 활동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표명한 인권위, 이번 대북전단 활동 진정에는 4개월 동안이나 답변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정권에 따라 인권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인가?

- 인권위는 2015년 '우리 국민의 적법한 표현 행위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대북전단 활동을 통제하라는 요구를 우리 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명한 바 있음.
-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의 이유로 북한이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을 거론한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인 대북전단 활동이 달리 평가되거나 통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대북전단 활동에 대해 인권위는 설립취지, 본래목적, 보편적 인류 가치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조속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법제사법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의원 **김도읍** /

文정권 공정·정의 실종, 文정권 사법부 장악 친문무죄, 반문유죄

주요 내용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남용 및 검찰 인사학살
- 추장관,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수사 막기 위해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문제 지적
- 검찰 인사 절차적 하자 및 정권 비리 수사 검사 좌천시켜 검찰 길들이기 문제 지적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 의혹 특검 도입 주장
- 서울중앙지검 부실수사 지적 및 나무지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문제 지적 등 특검 도입 주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 관련 부실수사 및 은폐의혹 지적
- 관련자 진술 상반, 증거자료 불일치, 대검 보강수사 지휘에도 무혐의 처분 문제 지적

사법부 편향 인사에 따른 '사법 신뢰 실추'
- 편향된 대법관 인사에 따른 좌편향 판결 속출 문제(이재명, 은수미 면죄부) 지적

대법원, 군형법 판결오류 및 은폐를 위한 거짓 판결 문제 지적
- 대법원, 군형법 특례조항 간과하여 판결오류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상고심 거짓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 사법부 법치파괴의 주범 문제 지적
-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법외노조 합법 판결 문제 지적 및 입법부 권한 침해 지적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 문제 지적 및 회생·파산·경매 DB 구축
- 文정권들어 파산급증에 따른 데이크로스 발생, 지방 경매 건수 급증 → 지역 경제 파탄
- 회생·파산·경매 사건 분석 활용 및 국가 경제 정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DB구축 지시

文정권 1주택자 홍보 이강섭 법제처장 알고보니 다수의 재개발 상가 보유 부동산 부자
- 文정부, 지난 9월 차관급 인사에서 1주택자로 인선 홍보 인사의 뉴모멀 자화자찬
- 그러나, 이강섭 법제처장 1주택자이지만 개포동 주공아파트 부동산 투기 의혹 및 배우자 명의 다수의 재개발 상가 보유

文정부 감사원 감사 방해 문제와 이에 따른 미흡한 감사결과 문제 지적
- 산업부 조직적 감사 방해 및 증거 인멸 등 이로 인한 감사결과 미흡 문제
- 감사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자 문답 영상녹화 자료 자료 요구

北, 해수부 공무원 피격 및 시신 훼손 문제 관련 문제 지적
- 軍 첩보 분석 능력를 비롯한 안보체계 전반적 무능 문제 지적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의원 **유상범** /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은폐 시도,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지적

주요 내용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제기 및 비판
- 청와대, 정치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펀드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제기
- 정관계 인사의 펀드 사기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은폐, 축소 수사 문제
- 라임 피의자의 사건 물타기와 민주당 공세에 대한 허구성 분석 및 대응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법치주의 훼손과 도덕성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문제점 지적
-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검찰 인사권 행사로 권력형 비리 축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좌천 인사, 권력 옹호 추미애 사단 비판
-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를 위한 감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

'월성1호기 감사' 지연 관련 정부·여당 대응 비판
- 국정운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의 지나친 '감사원장 비판'에 대한 문제 제기
- 청와대 '코드인사' 추천으로 인한 감사위원 공석 장기화에 대한 비판
- 장기간 기관운영감사 미실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편향된 사법부, 정치화된 사법부 비판
-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좌편향에 따른 판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 유재수 등 여당 정치인 봐주기 판결 비판
- 전교조 법외노조 허용 등 친여성향 '답정판' 판결에 대한 비판
- 재인산성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비판

우리 국민 피격 및 소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월북 몰아가기 비판
- 군의 경계 실패와 청와대 안보실·대통령의 초기 대응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정부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주장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의원 **윤한홍** /

사법개혁·검찰개혁으로 위장한 文정권의 반민주·독재 음모

주요 내용

인사권·직제개편·수사지휘로 권력비리 수사 방해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 '정권수사한 검사는 좌천, 정권보호한 검사는 영전'됐음을 입증하여, 추 장관 이후의 검찰인사가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냄.
- 특수부를 축소·폐지하고,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보직 4개를 폐지하였으며,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야 할 증권합수단도 폐지하여 정권비리를 덮으려 한 점을 지적함.
-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떤 근거도 없이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검찰청법에 명시된 총장의 수사지휘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있음을 지적함.
- 반면에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동부지검 수사의 허점과 추 장관의 거짓말을 지적하며, 문재인·추미애식 검찰개혁이 결국 정권보호, 권력유지에 있음을 입증함.

공수처 악법에 대해 대법원, 검찰, 경찰 모두 반대하고 있음을 공개

- 법원·대검·경찰 모두 공수처법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함. 공수처가 이대로 출범할 경우 사실상 최상위 수사기관으로 군림하게 됨.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정권비리 수사는 불가능함. 법원·대검·경찰 의견을 들어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의견을 피력함.

대법원의 정치보복 수사 관련 재판지연, 문 정권 검찰의 무리한 기소

- 정치보복 수사 전체 106건, 1심 선고된 95건 중 15건이 1심 무죄(무죄율: 15.8%)로 형사사건 무죄율 0.82%의 19배임.
- 1심 유죄판결 나온 사건 80건 중 59건은 3심까지 속전속결, 반면 1심 무죄나온 판결 15건 중 3심까지 무죄 유지는 3건에 불과. 죄 없어도 적폐몰이한 것 지적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의원 **장제원** /

문재인 정부의 법치 欺瞞 실태

주요 내용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깡통법치 맹폭

① 개혁 美名下 국민 배제, 검·경 길들이기용으로 변질 된 검경수사권조정 실태 지적 및 국민 환원 위한 정책 대안 제시
  1) 靑·법무부·행안부 상설협의체 구성
  2) 물샐 틈 없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전면적 자치경찰제 시행
  3) 법무부 산하 수사전담 독립청 설립
  4) 검·경·수사전담 독립청 인사권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 이행
②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대국민 여론 제시 → 사퇴 촉구
③ 표리부동한 검찰 인사 실태 완전 분석
④ 숙의민주주의 빙자, 감찰권 남용 등 검찰 甘呑苦吐 행태 과거 민주당 의원 발언 복기해 전면 팩트체크! (관련 영상, 조회수 수백만 돌파 대국민 호응)

김명수 대법원장, 지지부진한 사법4대 개혁과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질타

① 사법개혁 추진 실태 전수 면밀 분석! 낙제점 지적
  – 4대 과제 32개항목 中 4개 항목만 시행, 이행률 11.7% 불과
② 사법농단 비판판사(법복 정치인) 4인방의 청와대行 및 정치인 행보 규탄
③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 행태
④ 결핍된 다수결, 친여성향 인사 一邊倒, 기울어진 대법원의 예측가능한 판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구성과 판결의 문제점 지적

- 사개특위 사보임 권한쟁의 사건등 4건에서 보여지는 재판관의 편향성
  – 現 헌법재판관 추천위구성 자문기구 → 의결기구화,재판관 편향성 불식必要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방안 提言

- 월성1호기 감사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 행태 지적, 독립기구 설치안 提言
  1) 감사원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하원에서 설치
  2) 주요국 최고감사기구 독립성 관련제도 분석

법제처 문재인 정권 시행령 독재 실태

-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 지적 및 행정입법 통제 방안 강화촉구(선진사례 提言)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의원 **전주혜** /

편향적 코드 인사가 코드 수사·재판·감사로 이어진 기울어진 운동장

주요 내용

(법무부) 사기꾼 세치 혀에 놀아난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

- 한명숙 前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 검언 유착 의혹, 라임 수사 은폐 의혹 등은 모두 사기꾼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의한 것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권 남용 소지 및 집권 여당의 편파적이고 일방적 비호 지적
- 검찰총장 흠집내기 통해 현 정권 권력 비리 수사 저지 및 검찰 무력화

(검찰) 추미애 장관표 검찰개혁? 검찰 장악 통한 현 정권 수사 무력화

- 정권수사 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 → '코드인사' 통한 검찰 충견 만들기
-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의혹, 황제수사 통한 셀프 면죄부
-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관련 권력게이트 수사 의지 없는 검찰

(대법원) 대법원의 우·국·민 코드 인사, 코드 판결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연구회 출신으로 구성된 편향적 대법관 코드 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전교조 합법화 등 기울어진 코드 판결 주도
-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한 '좋은 재판'은 허언에 불과. 사법부 독립성·중립성 저해하는 결과, 법원의 사건처리기간은 늘어나고 사건처리율은 저조
-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감사위원회의 정권 눈치 보기 방지 제도 필요

- 월성1호기, 국회 요구에 의한 감사 기간 역대 최장으로 지연(386일)
- 文정권, 감사위원 코드화로 헌법에 적시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실종
-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지연에 따른 국민 신뢰 저하

※ 참고 : 감사 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 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2020. 9. 2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의원 **조수진** /

민주당 출신 법무부장관과 코드 권력기관의 편파적인 법집행 지적

주요 내용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인사제청권 남용

- 법무부, 대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이중적 태도 질타
- 중대 사기 범죄 피고인의 근거없는 제보를 근거로 야당 관계자를 표적하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한 수사지휘권 발동 집중 지적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가족일가 비리 등 '산 권력' 수사한 검사들을 좌천시켜 수사·공소유지 방해한 인사권 남용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상하복종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근본적 문제점 조명

(대법원) 내로남불 코드 법원인사, 정부·여당 입맛대로 갈리는 판결

- 법 몰라 판결을 실수했음에도 뻔뻔한 대법관의 태도를 질타하고 이런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내정한 정부 행태 지적
- 일반 부모 울리는 법원 판결, 엄마찬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특혜에 대해 집중 지적
- 광복절, 개천절 보수진영 집회만 막는 법원의 홍위병 행태와 인파 몰린 문화시설 제재 없는 K-방역의 실체를 질타

(대검찰청)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복종관계' 미성립

- '산 권력'에 대한 투명한 수사 촉구,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조명
- 김봉현 황제 접견 기록(4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193회) 질타

(감사원) 월성원전 문제점 지적, 수돗물 감사 촉구, 최재형 수호法 거론

(법제처) 이강섭 법제처장 투기 의혹 지적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2020
국정감사
백서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성일종** /

文정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

주요 내용

국무총리,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지시, 총리실은 "내 알 바 아니야"

-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2급 이상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 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지시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18개 부처에 모두 서면질의로 확인한 바,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는 개인정보여서 파악할 수 없다", "총리실에서 관련 지침 받은 바 없다"로 답변
- 국무총리 영이 안 서는 것인지, 국무총리가 정치쇼 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

추미애 황제 유권해석

-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타 부처에 5개의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
- 청탁금지제도과와 행동강령과 실무자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권익위 설립 이후 유일무이한 사례
- 권익위의 추 장관에 대한 '황제 유권해석'과 국민들의 괴리감 지적

주택연금 중도해지 급증…집값 상승 반증

-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역모기지론)
- 집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늘어나며, 가격산정은 연금 가입 시점임.
- 하지만, 올해 전국적으로 주요도시에서 중도해지자 급증함.
- 19년 말 기준 중도해지율 2.46%→20년 9월 기준 3.79%
- 집값 상승으로 인해 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파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부터 "집값 상승이 원인"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냄.
-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입증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강민국** /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 낮은 곳을 챙기겠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현 정부의 자화상 조명

- '한국판 뉴딜'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사업에 불과 강조
- 현 정부가 약속한 취약계층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가운데, 아동학대·돌봄공백 사건이 연이어 발생 지적
- 청년이 꿈꾸는 나라는 없고 2030청년의 실업률, 자살률, 우울증 등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비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사태 책임론 강조

-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로 집중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정조준
- 3년 동안 옵티머스 사기행각을 밝히지 못한 금융당국의 무능함 질타
- 피해자 구제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금융질서 마련에 집중
- 무소불위 금융지주회장의 연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관리·감독 철저 주문
- 옵티머스 103개 펀드의 펀드명세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준 한국예탁결제원 비판

공정거래위원회, 말로만 쇄신 외치는 조직

- 밀어붙이기식 공정거래법 개정의 '리니언스제도 무력화' 우려
- 과잉조사, 퇴직자 전관창구 등 반복되는 구태 행위 비판

국가보훈처,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정책 필요

- 산하기관에 낙하산 코드인사로 기울어진 보은인사 실태 질타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위한 처우개선과 의료제도 대폭 지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화 주문

- 불공정 채용 관행, 반복되는 직장내 성희롱, 천태만상 비위 지적
- 연구보고서 표절·중복게재 반복, 정책연구협의회 미개최 비판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김희곤** /

라임·옵티머스 직원채용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허상

주요 내용

라임·옵티머스 직원채용 의혹

-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올해 5월 21일 경력직 채용 최종 합격자 중 기업구조조정전문가(5급 대리급)로 라임자산운용에서 펀드 운용 및 관리를 담당했던 윤모씨를 임용한 사실을 밝혀냄. 캠코 측은 단순 실무자라는 해명을 했지만, 윤모씨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등 해외펀드, CI펀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력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국유재산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인 캠코의 부적절한 채용임을 지적하고, 라임사태와 관련한 정권 실세 개입 등 의혹을 제기함.
- 캠코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뉴딜펀드 허상

- 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에 향후 5년간 총 6조원 출자 예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함.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은행의 펀드별 수익률 출자액 대비 회수액 비중 분석결과, 평균 투자 수익률은 0.2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률 0% 미만 펀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펀드의 33.0%으로 10개 중 3개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 수익률 연 1.5%+@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뉴딜펀드는 시장 자율성을 헤치는 관제펀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호한 펀드투자 가이드라인으로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한편,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원금보장을 해주는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함.

은행 갑질 전수조사

- 은행의 무료 탁상자문(외부 감정평가 의뢰 전 사전감정) 관행이 고착화되어, 감정평가 정식의뢰(정식 의뢰로 수수료 발생)는 저조(15%)한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85% 대부분은 수수료 없이 이뤄지는 감정평가로, 은행들은 사전 감정평가 성격인 탁상자문을 고객의 담보평가에 활용하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는 문제를 지적함.
- 이에 대해 금감원은 탁상자문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담보가치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화할 뜻을 밝힘.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유의동** /

정권편향, 시대후진, 부실시스템, 비효율적 정부운영 지적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여권성향 청년 스펙쌓기용 위원회로 전락
- 코로나 확진자 정보공개시 개인 민감정보 침해사례 급증
- 형사정책연구원 내 불공정 채용 의혹 제기, 시정조치 필요성 강조

공정거래위원회

- 정권 바뀌자마자 13개 소관법률에 대한 입장 뒤집은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앞두고 공정위 철학에 대한 문제 제기
- 언택트·온라인 시대를 못 따라가는 공정위, 화장품 가맹점 '영업지역' (시대 변화상을 감안하지 못한 지리적 상권 해석 문제 제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리 및 감독 부실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로 증권범죄 증가, 강력한 수사기구 설치필요 주장
- 1만여 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허구성 지적
- 금융감독원 옵티머스에 특혜 제공하는 동안 많은 피해 양산한 문제 지적, 부실한 관리·감독 행태를 비판

(금융 공기업) 방만경영 질타

- 산업은행: 성과없는 KDB인베스트먼트의 행보, 향후 구조조정 계획 지적
- 기업은행: 동산담보의 허술한 관리지적,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 신용보증기금: 감사 연임에 따른 노조-감사 간 갈등 증폭, 해결책 마련 촉구
- 예탁결제원: 자회사 KS드림의 고액연봉 낙하산 사장의 재선임 문제 지적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부처 행태 비판

- (국가보훈처) 논란 있는 국장의 인사이동 조치에 대한 문제 지적
- (국민권익위)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이해충돌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윤두현** /

국민의 입장에 서서 文정부 실정을 지적한 2020 국정감사

주요 내용

무늬만 사모펀드, 쪼개기 판매 근절해야

- 환매중단 사모펀드 대부분 시리즈 펀드(쪼개기 판매) 이슈가 있음. 시리즈 펀드는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판매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
- 옵티머스 무인가 영업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거나, 라임·디스커버리 피해자 보상도 지지부진함. 금감원 임직원의 유착과 비리도 밝혀지고 있음.
- 철저한 원인 규명, 시리즈 펀드 제재 강화, 운용사, 판매사에 대한 엄벌 등을 통해 사모펀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

기업은행 셀프대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 기업은행 직원이 가족 기업에 76억원을 대출해주어 29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지만, 걸러낼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없음.
-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시정약속을 받아냄.

백신 접종 사망자 급증, 국민 불안 떨쳐내야

- 무료 백신 대상자 중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무료 접종 대신 유료 접종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는 문제가 없으니 믿어달라고 대응하는 것이 고작임. 이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
- 철저한 원인규명, 추적조사 실시, 사고 유발 업체에 대한 엄벌 및 구상권 청구를 통한 피해보상 등을 촉구

5G, 터지지도 않는데 왜 요금만 5G? 불공정 약관 개정해야

- 5G 적용 지역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국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5G에 가입하여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
- 커버리지 및 커버리지 내 LTE 전환이 약관상 고지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윤재옥** /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자초한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강력 규탄

주요 내용

금융당국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부실 감독 행태 지적

-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의 문제점 지적 및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합수단 부활 필요성 제기
-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부실 조사 및 늑장 대응에 따른 피해 확산 문제 지적
-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청와대 행정관과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엄정 수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이익을 강화하고 뉴스 및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 지적
-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비판
-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와 표절 등 부도덕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네이버의 기업 경영 행태 비판

정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

- 국가권익위원회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광고비를 편향성 논란이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주는 문제 지적 및 개선 촉구
- 광복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보훈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과도한 언행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필요성 지적
-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임에도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 부족 지적, 인력 및 예산 확보 노력 촉구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윤창현** /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게이트, 문재인 정부 헛점 조목조목 지적

주요 내용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정조준

- ‘펀드 하자 치유’ 문건과 前 청와대 행정관의 ‘빈칸 지원서’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청와대 게이트’로 규정
- 실질적으로 시장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강력 항의
- 2018년 기관경고, 2019년 허위공시 혐의, 2019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 등 3번이나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금감원 비판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불평등’ 차별, 금융권의 중재안 요구

- ‘빅테크’라는 딱지를 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로 숨어 ‘카드 서비스 3년 유지 의무’를 어긴 핀테크 산업들을 나열하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천명
- 규제 사각지대에 숨어 고객 유치를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꼼수’를 지적

정부말 믿고 6% 이자 적금 가입한 군장병들 감쪽같이 속여놓고 또 야당 탓하는 정부행태 지적

- 정부가 ‘최대 5%+1% 우대금리’를 약속하며 시중 은행을 통해 판매한 정책금융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가 정부 홍보와는 달리 2.5%~최대 5%에 그쳐
- 정부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려면 병역법을 고쳐야 함. 정부는 2018년 당시 야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당시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하지도 않았으며, 상품출시 70일 뒤 민주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의 발의였고, 2019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음에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반박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이 영** /

싸구려 금융테크닉! 공공기관 사모펀드 실체 밝혔다!

주요 내용

집단 최면에 걸린 금융 시스템, 방치하면 또 터진다!

-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고도 안일하게 대처,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발발
- 옵티머스의 주범인 이진아 前 청와대 행정관이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 사내근로복지기금 6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으며, 짧게는 하루, 길어봤자 일주일 만에 투자 검토를 결정한 것을 밝힘.
- 라임 환매 중단 직전 기관투자자 및 일부 고객이 대규모 환매한 자료 입수, 사고 발생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적 문제점 지적, 개선 촉구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결국 피해는 소비자·콘텐츠 창작자·SW 개발자에게로

- 구글의 디지털 콘텐츠 인앱결제 의무화, 수수료 30% 과금 방침은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사실상의 통행세
- 게임앱의 경우 통신사들이 통신과금 방식으로 결제 시 인앱결제액 수수료(30%)의 절반인 15%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
- 구글 수수료로 인해 유통 수익이 대폭 줄어들 대기업 유통사들 역시 수익 보전을 위해 소비자 가격 인상 불가피. 결국 소비자와 콘텐츠 창작자, SW 개발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구글과 공정위에 시정 촉구

불신·방만·불법·거짓, 광복회의 민낯

- 보훈처에 7년째 보증금 미상환하고 있는 광복회, 오히려 결손 처분 및 이자율 하향 조정까지 요구. 보훈처 재정점검 결과, 김원웅 회장 취임 후 1억원 이상 적자 방만경영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주겠다던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부채 상환하겠다고 해명, 광복회 전직 임원들의 한강공원 편의점도 편법 수의계약, 심의 없이 불법 영업에도 손놓고 있는 보훈처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기획재정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의원 **류성걸** /

‘엉터리·해괴망측’ 재정준칙, ‘주식시장 망치는’ 대주주 확대, ‘고용안정’ 책임지는 중앙은행

주요 내용

文정부 임기 끝까지 ‘돈 펑펑 쓰겠다’ 선언한 재정준칙

- 文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기존에 활용하던 기준(한도계산식)을 바꾸면서 이론상으로는 무한히 재정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였음. 이는 재정을 아끼고 건전하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펑펑’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용인해준 ‘재정준칙’에 불과함.
- ‘재정준칙’ 산식의 모순점을 찾아낸 것을 비롯, 구속력도 없고, 예외 규정도 명확치 않으며, 시행시기마저 현 정부 이후로 미뤄버린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냄.

대주주 기준 3억원 논란, 독불장군 정부에 법안으로 행동 나선 국민의힘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인 대주주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21년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부안은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가게 됨.
- 가족 연좌제 논란, 과세 불공정성, 금융시장 불안전성 등 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文정부의 세금 올리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가족연좌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20. 10. 6)하고, 국정감사에 관련 질의로 정부·여당의 실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변화한 시대, 한국은행 설립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해야

-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저금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던 ‘물가안정’, ‘금융안정’만으로는 변화된 경제구조에 대응이 어려워졌음.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목표로 삼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에 중앙은행이 대응하는 등 한국은행 역시 ‘고용 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등 기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함.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의원 **김태흠** /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가혹한 증세, 공공기관 관리부실 지적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 관리

- 현 정부 출범 당시 예산 규모는 400조원대였지만 2021년에는 555조원까지 증가.
- 임기 4년간 예산증가율은 38.8%로 연평균 9.7% 상승. 지난 정부 5년간(박근혜 4.3%, 이명박 6.6%)증가율 대비 2배 이상 확대
- 재정규모의 폭발적 증가에도 집행관리는 방만해서 2017년 이후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654개로 9조5440억원을 불용. 이중 167개 사업은 배정된 2조원의 예산을 전액 미집행. 무분별한 재정확대와 방만한 집행관리를 지적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 전가한 세제(稅制)

- 현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25평 기준 4.5억원으로 역대 정부 최고 수준.
- 23차례의 부동산정책에도 가격폭등, 매물급감, 세 부담 증가
- 종부세의 경우 2018년 납부대상자가 39.3만명으로 5년 전 19.4만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특히 1주택자는 4.8만명에서 12.7만명으로 급증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 가중. 결정세액도 2014년 2.3조원에서 7.1조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전체 종부세 중 부담 비중도 10.0%에서 16.2%로 증가해 다주택자(세액 증가율 및 부담 비중이 감소) 대비 과세부담 과도
- 종부세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대책 필요 지적

기업하기 힘든 나라 만드는 조세·세무 정책

- 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등 기업과세를 확대. 법인세 세수는 2017년 59조원에서 2019년 72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부터 징수액 감소 및 목표 미달 발생(2019년 79.3조 목표 대비 91%(72.2조), 2020년 7월 30.8조, 진도율 52.7%로 부진)
- 지난해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70개 업체로 2015년 225개 대비 크게 증가. 반면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조사는 2019년 2,500개로 5년 전 3,100개 대비 대폭 감소
- 기업의 조세 부담 및 세무조사에 대해 경제상황과 경영여건 고려 필요 지적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부실한 경영평가

- 부채가 급증한 한국조폐공사와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 공사는 성과급을 과다 지출하고, 강원랜드는 허위 물품구매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음.
- 2018년 공공기관경영평가 기준 변경시 재무성과 등 경영실적 비중을 줄이고 정부정책 이행도를 높이는 등 부실한 경영평가제도로 인한 것임을 지적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의원 **박형수** /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되어야

주요 내용

기존사업 재탕이 70%인 한국형 뉴딜, '뉴딜' 아닌 '올드딜'

- 전 부처 총 642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
- 내년도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원 중 신규사업 예산 16.4%인 3조5천억원
- 기존사업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둔갑시켜 눈가리고 아웅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하여 추진해야

가상화폐 거래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 법적 근거 없어

- 국세청 질의에 기재부가 회신을 피하는 사이 위법한 과세처분
- 국민의 혈세로 물어야 할 환급가산금만 70억여원에 달할 전망
-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시정되어야

농산품 수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 농업 분야 지원액은 전체의 0.8%에 불과!

- 총 329조5천억원 중 2조7천억원 지원에 그쳐,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기업 해외 지원이 대부분, 지방 영세기업 소외 심각
- 수출입은행은 농업분야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소외되고 있는 지방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의원 **서병수**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 난맥상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 (정책 실패) 정부가 부동산대책 발표할 때마다 집값 폭등, 전월세 대란 결과를 초래했음.
- (컨트롤타워)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과 정부에 유리한 통계자료로 정부 정책 홍보에만 집중하는 잘못된 자세 질타
- (부동산감독기구) 국민 반발에 '(가칭)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이름만 변경했을 뿐, 부동산을 빌미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국민을 감시와 처벌하겠다는 '국민감시기구'에 불과함.

국가재정 파탄을 덮으려는 『사실상 증세』

- (꼼수, 서민증세)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는 중산층과 서민들 대상 증세는 없다고 했으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로 인해 파탄 난 재정을 복구하기 위해 사실상 꼼수증세, 서민증세를 도입해 왔음.
- (공시가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서울 주택 기준 2017년 이후 3년 동안 약 5%~14% 가량씩 올려왔음. 그 결과 2020년(추정) 서울 주택 전체의 재산세액은 2017년 313억원 대비 8,116억원 증가한 8,429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했음. 공시가격의 가파른 인상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사실상 증세 결과를 초래했음.

제2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불과한 『한국판 뉴딜』

- (세금 알바 일자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20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자해 190.1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나, 사실상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단기알바 일자리사업, 현금 퍼주기 사업으로 '국민 혈세 낭비' 우려가 있음.
- (올드딜) 2021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 사업 총 671개 중 신규사업은 188개로 나머지 483개 사업들은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국민혈세로 '뉴딜펀드 지원'은 펀드시장 교란은 물론 혈세 낭비임.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의원 **서일준** /

정권 4년차 실정을 바로잡는 국민께 힘이 되는 국정감사

주요 내용

대우조선 불공정특혜 매각 전면 재검토 촉구

- 12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 6천억원대에 인수하도록 한 불공정 특혜 매각 문제 지적
- '빅3'에서 '빅2'로 재편하겠다는 산업은행장의 결정은 결국 '수퍼 빅1', '온리 1'을 만들게 되는 결과 초래
- EU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생산라인의 4분의 1이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의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섣부른 매각 결정의 전면 백지 촉구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입찰 방산비리 의혹 집중 제기

- 경쟁사의 설계도를 훔쳐서 이를 활용해 7조원대의 사업 수주를 따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
- 방사청이 설계를 도둑질한 기업에게 표창을 주고, 또 성실도 평가에서 감점을 주지 않도록 수주 직전에 감점기준을 변경시킨 내용 폭로
- 3급 군사기밀을 훔쳐 25명이 검찰 송치된 사건에 연루된 기업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겨선 안된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 촉구

- 선박 시운전이 선박 건조 공정 중 중요 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 보세 공장으로 운영되는 국내 조선사조차 시운전용 유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저유가와 코로나19로 수주 절벽 등 심각한 위기에 빠진 조선업체들을 위해 선박 건조의 필수적인 공정인 선박 시운전 유류는 면세함이 타당하다고 지적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의원 **유경준** /

문재인 정부의 민낯,
통계조작부터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까지!

주요 내용

'무지'에서 시작해 '사기'로 …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해 비정규직이 87만명 증가했지만, 통계청은 이를 설문 문항이 바뀐 탓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음.
- 또한, 소주성이라는 엉터리 정책 추진으로 소득분배 정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통계청은 수차례 의도적으로 조사방식과 표본비율을 변경해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진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 이러한 통계청의 통계조작 행위들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함.

인국공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제대로 추진 안 되자 청와대 개입!

- 청와대에서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인 만큼 인국공, 노사전협의회 등이 직고용 불가 입장을 내비치자 직접 회의를 주최하며 개입하기 시작함. 결국, 직고용 불가 입장은 단 5일 만에 뒤집혀 직고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됨.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국공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이러한 청와대 불공정한 개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토부·고용부 등 관계자 증인심문을 통해 이를 증명해 냄.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관리를 해야 할 기재부의 무능함도 함께 지적하며 엉터리로 추진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비판함.

노동소득분배율 개편과 자영업자 소득 지표인 혼합소득 시계열 확대 생산 약속!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 정책임.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생산하는 공식 기관인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해서 증가추세여서 소득주도성장이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인 것을 반증하고 있음.
- 이에 본의원은 정부정책의 근간이 된 지표의 오용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은행을 질타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표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동소득분배율을 개편할 것과 한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지표인 혼합소득의 시계열 확대 생산에 대해 확답을 이끌어 냄.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의원 **윤희숙** /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함께 챙기는 정책 국정감사

주요 내용

(기재부) 엉터리 장기재정전망으로 재정상황을 오도하는 기재부

- 장기위험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실적 전망을 해야 함에도 낙관적 목표치를 설정해 재정상황을 오도한 장기재정전망 지적

(기재부) 시장을 무시한 이념 일변도의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 다주택자가 아파트 가격급등을 주도했다는 주장의 맹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의 부재, 다주택자를 죄인시하는 정책당국 시각 지적

(기재부) 현 정부 면죄부용,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재정준칙

-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곱셈으로 연결하는 유례없는 한도계산식과 이마저도 장기재정전망에 적용 시, 다음 정권부터는 지속적으로 한도를 벗어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지적

(국세청) 간주배당세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했을 현황 파악 부재 지적

- 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내유보를 어렵게 만드는 간주배당의 문제점과 국세청의 중소기업 세금탈루 적발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무리하게 조세 신설하는 문제 지적

(통계청) 실효성 없이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가계동향조사 지적

-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분기별로 보여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으로 부활한 분기별소득 데이터의 실질적 무용성과 국가기간통계 남용 문제 지적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법개정 추진 비판

- 한국투자공사의 위탁기관 확대 시, 자산운용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문제 발생 우려와 그로 인한 민간 자산운용사 구축 위험성 지적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의원 **조해진** /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관련 문제점

주요 내용

리쇼어링 관련, 세제지원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

- 유턴법이 도입된 2013년 이후 7년간 국내 복귀 기업은 고작 80개이며, 유턴기업 인정 조건은 까다롭고, 세제지원은 턱없이 부족함.
- 반면 美·日·獨 등 세계 주요국들은 리쇼어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쇼어링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
- 현행 유턴기업 지원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편적 정책으로 업종별 차등화가 없음.
- 정부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현실 적합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이 필요함.

대규모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 배제 농어업인 피해 우려

- 이번 세법 개정안이 조합법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사업 축소로 이어져 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19개의 농·축협 조합, 26개소의 수협조합 등이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될 예정)
- 조합법인은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정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매출과 자산규모는 증가하나 이익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설립목적 및 사업성격 등이 달라 세율 적용 역시 달리해야 하며 동일한 세법적용은 '세제 차별'을 발생시키고 조합법인 공익 활동 재원 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 및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혜택 감소로 귀결됨.

文 정부에서 법인세율 급등. 법인세 시급히 인하 필요

-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급증(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 27.5%로 OECD 회원국 중 9위)
- 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도입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과세로 KDI는 법인세율이 최대 3%p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
-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율 부과로 인해 지난해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법인세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
-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는 기업에 의해 달성 가능하므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의원 **추경호** /

文정부 핵심경제정책 맹점 강력 비판
서민 부담정책은 법안으로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뉴(New)’ 없는 한국판 뉴딜 강력 비판

- 160조원을 투입한 ‘신규창출 일자리 190만개’에 대해 산출근거의 불투명성 지적

* “2022~2025년은 여러 전제와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된 예산규모만 검토된 상황으로, 개별 사업별·연도별 일자리 규모는 각 해당연도 예산안 편성과정 등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 계속사업만 70%를 차지, 혁신성장 ‘재탕’하는 한국판 뉴딜의 예산낭비 요소 비판
- 기재부 혁신성장 사업 점검실적 전무(全無), 방만한 사업 관리감독 비판

* “추진단에서 점검한 현신성장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차기정부에 재정부담 떠넘기는 ‘아몰랑’ 재정준칙 질타

- ‘시행시기 2025년’, ‘국가채무비율 60%’ 등 임기 동안 원 없이 쓰고 차기정부 부담은 나몰라라 하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에 대해 비판

※ 정부 예산안 편성시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20.06.04.)

文정부, 장기재정전망의 “차기정부 재량지출 없다”는 거짓 가정 맹점 폭로

- 공공부문 연금 충당, 부채 고려시 2030년 GDP 145.7%, 2060년 228.7%로 급증
- “국가재정위험 제대로 평가해야” 질타

소득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안’ 강력 제지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10억 → 3억)하겠다는 ‘엉터리 시행령’ 비판

※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가족 합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0.21.)

현행 최고이자율 연24% 인하 촉구 및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가운데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촉구

※ 현행 최고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0.29.)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 국회의원 **곽상도** /

정부 실책과 특정 집단에 편중된 특혜로부터 기회와 공정성 바로 세워야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학부모에게

- 집값 상승에 따라 지난해 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 가운데 2만4,600여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거나 지원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지역 학생이 전체의 90.4% 차지
-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도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 달라져,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학생·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됨을 지적
- 또한, 현 정부의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정책 발표가 이어질 때마다, 강남 8학군 집값이 폭등하고 특정 학군으로 쏠림현상이 우려됨을 지적

'민주화 운동 관련 전형' 입시부터 특정 노조 출신 특별채용까지 특정 집단 특혜 의혹

- 연세대 25명, 이화여대 21명 등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입학생이 확인되며, 연세대의 경우 의예과, 치의예과에서도 입학자가 확인되어, 국가유공자와 달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입시 특혜 문제를 지적
- 서울·인천·부산 등 각 시교육청에서 특정 노조 출신 해직자를 특별채용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선거 불법개입으로 해직된 이들을 채용해 공정경쟁 통한 특채가 아닌, 특정 성향 인사를 위한 채용 특혜가 아닌지 지적하며 일반 학생·교원이 느낄 소외감과 불공정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

교육청의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감사원 감사청구 제안

-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교육감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서울교육청의 고가 마스크 매입, ▲충북교육청의 LED교체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경기교육청의 '꿈의학교' 사업 선정 및 예산지원 개입 의혹, ▲전북교육청의 열화상카메라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 교육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제안

교육위원회

/ 국회의원 **김병욱** /

정치편향, 불공정, 특혜, 비리·비위가 판을 치는 文정부 교육 현실

주요 내용

정치편향 교육현장에 대한 지적과 개선 노력!

-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64.7%가 전교조 출신
- 북한 찬양 국가보안법 전과자들이 특별채용으로 다시 교단으로(부산교육청)
- 전교조 해직자, 연봉 1억원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 2019년 개정된 교과서에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운 북한 지도자를 평화의 지도자로 기술하고,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내용을 누락시키는 등 친북적 서술
- 후보자 매수 선거법 위반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모의선거교육기관 선정
- 전교조 출신 교육감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최근 3년간 '김어준 뉴스공장'에 광고비만 각각 5.17억원 · 5억원 지출해 전체 라디오 광고비의 42% · 53.9% 차지

특권과 반칙을 넘어 공정과 정의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 직위해제 조국 교수, 수당·급여 등 4,400만원 수령. 유죄시 환수해야
- 조국 자녀가 부산대학교 위조 서류로 입학한 사실 확인 시 입학 취소 필요
- 금수저 위에 운동권 수저, 민주화 유공자 전형으로 최근 5년간 최소 100명 입학
- 민주화운동 전형 폐지하고 기회균형전형을 소득과 지방 배려 중심 사회통합전형으로 확대 변경 필요
- 학교에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 부착을 이유로 新전대협 소속 대학생을 전과자로 만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며 사법부에 부당 의견 제시 필요
- 대입전형에서 저소득층·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등을 위한 특별전형 확대·신설 필요
- 文정부의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가져오는 폐단 지적

교육현장의 비리와 비위 적발!

- 교육부 뉴딜정책 업무 담당하는 간부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태블릿, 법인카드 지원 받고 제공 기관에 8억원을 수주하여 대가성 뇌물 수수 의혹
- 업추비는 눈먼돈? 서울시교육청·서울대학교·교직원공제회 술집에서 펑펑
- 성비위 징계받은 서울 학교 교원 절반이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고 있음.
- '여성의 잘못된 의식이 성희롱 부른다'는 중앙교육연수원 성교육 교재 문제

지방거점 국공립대학교 경쟁력 강화!

- 지방거점 국공립대 기초과학분야 무상교육(등록금 면제)
- 지방거점 국공립대학교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가연구기관 지방으로 이전 필요

교육위원회

/ 국회의원 **배준영** /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불평등 현실, 불공정과 특혜 문제 질타

주요 내용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후 급여지급 밝혀내고, 조국 자녀 인턴확인서 위조 의혹 지적

- 조국 교수 직위해제 기간 동안(9개월) 총 2천8백여만원의 급여를 받아간 사실 확인. 단 한 번 강의하지 않고, 매일 같이 SNS에 글을 올리며 매달 평균 320만 원의 국민 혈세를 서울대로부터 받아 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조국 교수 자녀가 발급받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 의혹에 관하여 서울대 진상 조사 촉구
- 조국 교수뿐만 아니라, 뇌물 받은 교수가 4년이 넘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총 1억 9천만원을 받아가는데도 아무런 조치조차 없는 서울대 질타

전교조 교육감 부정행위, 좌편향 교육용어 등 교육의 정치화 문제 지적

- 전교조 출신 광주·충북교육감의 가족 금품수수, 인사특혜 등 각종 비리 의혹 지적 및 감사원 감사 요구
- 고교 윤리교과서 3종서 2년간 써왔던 '인민' 단어, 내년부터 '국민' 쓰기로 확인. 문재인 정부 검정(檢定)을 통과해 지난 2년간 사용됐던 '인민' 표현 '윤리와사상' 교과서 문제 지적 이후 '인민' → '국민'으로 올바른 표기 이끌어내
- 북한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자녀, 교육부 차원의 지원 요구, 월북 결론 시 순직 처리가 안되는 문제, 피살 공무원 자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 질의, 대학 등록금, 교육 바우처 지원 등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계획 마련 요구

코로나19 사태로 들쑥날쑥한 등교지침, 원격수업 혼란 문제 지적, 학생을 위한 대안 제시

- 전국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기준이 시도별로 다르고 등교지침 또한 들쑥날쑥한 점에 대하여 질의. 교육부의 행정 편의를 위해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것에 대하여 질타
- 감염병 위기 속, 초·중·고와 대학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합동 연구 강조하며, 학사제도 운영안 마련 요구
- 원격수업이 등교수업 만큼의 '보편적 교육'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지적 및 도서 지역 등의 인프라 구축 문제 등 대안 제시

교육위원회

/ 국회의원 **정경희** /

문재인 정권 좌파교육 실체, 학력저하·역사왜곡·각종 특혜·비리 적발

주요 내용

코로나 위기를 틈탄 방역물품 구매 비리 의혹 등 교육부·산하기관 비리 적발 및 고발

- 서울교육청 60억 '마스크', 전북교육청 10억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 구매 비리 의혹 적발
- 이와 관련, 교육부 실시 1,05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함.
- 2020.10.19.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충북교육청 LED교체사업 관련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허위 답변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근거해 고발조치 예정

교육부 산하기관의 불공정 인사 적발 및 고발

- 2020.10.07. 교육부 산하기관 캠코더인사 지적, 향후 전문성 검증된 인사 촉구
- 2020.10.07.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우용, 김광운 등 자질미달 및 정치적 편향인사 부적절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2020.10.15. 서울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의 아빠찬스(자녀 취업청탁) 채용비리 규탄

文정권 공공의대 설립강행 비판, 공공의대·한전공대 학생선발방식 불공정성 지적

- 코로나19 위기를 공공의대법 통과의 '절호의 기회'라며 악용하는 정부·여당 비판
- 법적 근거 없는 공공의대 설립 강행, 공공의대 및 한전공대 학생선발 방식의 불공정성 지적, 각 국립대병원장에 의사국시 재응시 관련 '찬성' 입장 확인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 역사교육', '중국발 역사왜곡 방관' 규탄 및 시정요구

- 文정권이 역사교과서에서 빼버린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서술을 다시 되돌릴 것을 교육부에 요구
- '공자학원'에서 자행되는 중국발 역사왜곡(6·25전쟁 등), 중국공산당 체제선전 문제 지적,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 초·중·고 및 국립대 내 설치된 공자학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역사 왜곡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좌파 교육으로 인한 '학력 저하' 및 관련 문제 지적

- 2020.10.26. 중1까지 無시험, No학업성취도평가, No입시공정성, 혁신학교 급증(親전교조 교육감 등장 후 2009년도 도입 → 2020년도 1,928개) 으로 학력 폭망 지적
- 교육 선택권, 수월성 교육 전멸,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강남 8학군 부동산값 폭등 지적
- 공교육 붕괴로 2019년도 1인당 사교육비 처음으로 30만 원 돌파 등 사교육비 폭증 지적

교육위원회

/ 국회의원 **정찬민** /

문재인 정부 3년, 흔들리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대한 송곳감사!

주요 내용

전국 교실 66% 무선 공유기도 없어, 이중 절반이 노후화로 내용연수 지나!

- 학교·학생 가장 많은 수도권 학교의 무선 공유기 설치율, 전국에서 가장 낮아!
  - 무선 공유기 설치율은 경기 14.4%, 인천 20.8%, 서울 23.8%에 불과해
- 제주, 경남, 부산지역 학교의 무선 공유기 내용연수 경과 비율은 60% 넘어!

현 정부에서 SKY 캐슬 공고화, 관련 통계 환류해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 文, "무너진 교육 사다리 복원하겠다"더니… 잘 사는 서울대 신입생, 현 정부에서 19.5% 급증해!
- 신입생 고소득층 비율 2017년 43.4% → 2020년 62.9%, 非SKY 대학은 7.7% 증가
- 의과대학 SKY캐슬은 더욱 공고해져, 고소득층 SKY 신입생 4명 중 3명 달해
  - 3년 새 20% 증가, 같은 기간 서울대는 39% 증가해

은행 및 대기업 사원들에 지급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중소기업 직원 대상 장학금이었는데 20%는 대기업 사원에 혜택
- '고졸' 원칙 포기, 전문대졸 223명 지원하고, 4명 중 1명은 청년 아닌 중장년!
- '고졸, 중소기업, 청년' 이라는 3대 원칙이 모두 무너져!

文정부 출범 이후, 사립유치원 폐원 4배 급증!!

- 2016년 56개원 → 2019년 257개소 폐원! 사립유치원 교원 역시 3,000명 이상 감소!
- 기간제 교사는 3년 만에 38% 증가 (2,936명(2016년도) → 4,067명(2019년도))
- 국공립 취원율 올해 29%, 목표치 34%에 한참 밑돌아!(국정과제 40% 달성 요원)

文정부 출범 후, 3년간 기간제 교원 6천명 넘게 증가!!

- 전체 교원의 11%가 기간제 교원! 정규직 교원은 2천 600명 줄어!
- 초 50%, 중 7%, 고 12% 기간제 교원 증가!
- 文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기간제 교원 6천명 넘게 증가

교육위원회

/ 국회의원 **조경태** /

중국 역사왜곡 / 반값등록금 / 장하성 중국대사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주요 내용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 내 한국사 왜곡 문제 심각

-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최신판 '중외역사강요'에서 총 12건의 한국사 관련 내용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
- 특히 6·25전쟁을 미군과 국군의 북침으로 오인하도록 서술하고, 최근에는 총 3,537억원을 들여 미군과 한국군의 침략에 맞서 중국이 승리한 전투라는 내용의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 중에 있음을 지적
- 중국 역사왜곡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실천 촉구

- 2012년 및 2017년 문재인 대선 공약집에서 반값등록금 약속
-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35개국 중 국공립대학 비중이 5번째로 낮은 나라인 반면, 사립대학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으로 OECD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 다음으로 높음을 지적
- 3.5조원의 추가재원(2021년 예산의 0.63%)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실행 촉구

장하성 중국대사, 고려대 교수 재직시절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불법 사용

- 장하성 대사,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남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총 6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쪼개기 결제한 불법행위를 밝혀냄.
- 여성종업원이 동석하여 술접대하는 유흥주점임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대사는 2020년 외통위 국감에서 '음식점'이었다고 위증
-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장하성 중국대사에 대한 해임을 촉구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2020
국정감사
백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의원 **박성중** /

옵티머스게이트, 불법적 탈원전, 조작방송 등 『文적폐』 폭로 국정감사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한 실질적 증거제시

- 한수원의 전력판매단가 기준 축소, 이용률 하양 적용 등 조직적인 경제성 분석 조작 내용 규명
- 한수원 이사회가 적정성분석 검토당시 조기폐쇄결정에 유리하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한 사실 근거 제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와이파이 사업, 사용자도 없는 혈세낭비 사업임을 밝혀

- 문대통령 대선, 민주당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과기부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
- 수천억을 들여 설치하는 공공와이파이는 사용 트레픽이 전체 무선데이터의 0.1%에 불과

KBS의 검언유착 오보는 권력실세의 청부 보도 가능성을 밝혀

- KBS의 해명과 달리 최초 기사 작성 후 5시간의 여유가 있었고 10회 이상 수정까지 하는 등 단순 오보가 아닌 청부 보도 가능성 제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 펀드' 사모 투자와 관련해 수십명의 여당관계자가 연루된 권력형 사기게이트 의혹 제기

- 사기행각의 마중물이 된 KCA의 기금투자 문제점 지적

정치편향적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한 방송사와 유관기관들의 편향 방송 지적

- 수치를 통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널리즘토크쇼J, 스트레이트 등 편파 방송 사례 제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의원 **김영식** /

탈원전, 여론,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의 왜곡과 조작 바로 알리기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역주행

- 탈법적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허가와 2단계 맥스터, 신고리5·6호기 등 원전건설 늑장 허가에서 드러난 탈원전 위주 비대칭적 행정처리 지적
- 원안위 회의록 분석을 통한 탈원전 성향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의 비전문성 증명
- 라돈침대 폐기물 처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쿄올림픽 선수단 방사능 보호 등 국민 안전 대책 부실 지적
  - ☞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 특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 예정

공영방송사의 편향 방송과 네이버 AI 알고리즘 등 여론 조작

- MBC 스트레이트, KBS 저널리즘토크쇼J의 콘텐츠·데이터 분석을 통한 심각한 좌편향 증명, 공정성 상실 지적 및 공영방송 MBC 박성제 사장의 경기도 홍보 MOU 체결 및 이재명 지사 홍보 대행 부적절성 지적
-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개발사(빠띠)의 정치 편향성 문제 및 네이버 AI 알고리즘 공개 검증 요구 등 플랫폼 편향성 문제 지적
  - ☞ 방통위 허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 및 AI의 편향성 방지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법안 제정

문재인 정부 디지털 뉴딜, 5G 부실 추진

- 재정지원일자리사업(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및 DB산업 육성,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및 청년TLO사업 부실
- 5G 지방 소외, 단말기유통법 무성과 등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및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방식 문제 등 통신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구글과 넷플릭스의 조세 회피와 역외 적용에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제기 및 국회(글로벌기업)역차별 방지특위 구성 제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의원 **박대출** /

과기부 소관 협회와 산하 연구기관들의 정치적 논란과 갑질, 편향과 외압의 공영방송, 원전기술 해킹 문제

주요 내용

한국뇌연구원 文정권 코드 강요, "색깔 확실히 내"

- "공공기관에서 색깔을 확실해 내야하는 거라고.." 연구원에게 문재인 정권 코드 맞추라 강요하나

文 정권, MBC 비파업 기자 암 발병 4명, 유산 1명

- 文 정권, MBC 파업 비참가 기자 사지로 내몰고, 험지로 내몰고 있어
- 확인된 암 발병자 4명, 심지어 유산까지. 이 외에도 정신과 치료 중인 파업 비참가 기자 다수
- 부당행위 현장 MBC에 특별근로감독 요청해야

친여 방송들의 편향보도 행태

- KBS 추미애 옹호 방송?
- 여권 인사 막말에는 침묵, 야권 인사 막말에는 공격
- '나훈아' 소신 발언에도 귀 닫은 방송사
- 文 정권 홍위병 자처한 '개천절 집회' 보도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2020년 출연 패널 전수 조사 및 분석

한국은 '탈원전', 중국은 '원전기술 해킹'

- 2019년 국가별 침해시도 1위 중국 69건. 중국 최근 5년간 해킹시도 80건 이 중 80%가 19년에 집중
- 2020년 8월 현재 침해시도 여전히 중국 1위 25건
- 원안위 보안장비 예산 5년 간 2배 늘었지만, 해킹 시도는 오히려 17배 급증

상습 폭언·폭행 논란 항우연 원장, 과기부 감사 않고 쉬쉬… 항우연 원장, 김정숙 여사 숙명여고(62회) 동기 부인 찬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의원 **정희용** /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현장소통형" 국정감사 실시

주요 내용

(장애인 제도개선) 과기부 산하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위반 기관은 46개 중 34개로(7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 기관은 49개 중 39개(80%)로 나타나 제도 준수를 촉구함.

- (후속조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률 제고 촉구

(포털 여론조작)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배열의 가치 중립성 문제점과 인터넷 쇼핑 순위조작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플랫폼 가치 편향성에 관한 사례 제시를 통해 알고리즘 위험성을 증명함.

- (후속조치) 네이버 뉴스 배열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으며, 카카오워크의 알고리즘 가치 편향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끌어냄.

(온라인쇼핑) 네이버, 당근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한 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포털의 대책 마련 촉구

- (후속조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마련 필요 지적

(5G 구축) 5G망 구축이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어 수도권 외 지역의 사용자는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장애인 요금제, 실버 요금제, 한정된 요금제 등으로 사용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을 지적함.

- (후속조치) 과기부와 통신 3사로부터 다양한 요금제 마련 및 장애인 요금제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SNS 마약 노출)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구매가 손쉽게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대한 차단조치 등을 해 줄 것을 촉구함.

- (후속조치) SNS를 통한 마약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차단조치에 대한 검토 진행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의원 **조명희** /

과학기술 전문성 무시·친여성향 편파방송, 文정부 정책 비판

주요 내용

文 정부의 실효성 없는 과학기술정책 지적, 합리적 대안 제시에 부처도 공감

- 문정부의 과학기술계 특성 무시한 일자리정책 비판(정규직 전환 및 블라인드 채용/정부출연연 연구자 300인 대상 한국경제신문-의원실 공동설문조사결과, 연구원 70% '피해봤다') → 과기부 제도개선 준비, '(연구전문성 평가 가능케) 채용공정화법' 등 의원실 개정중
- 재해재난 관측 등에 위성활용 全無데이터 최초공개 → 위성활용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위한 기획연구 추진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 도출
- 노벨상 수상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기부 내 국제연구지원팀 신설 제안 → 과학기술협력대사직 신설 법안발의
- 北中日 등 주변국 원전증가 통계 공개. 한국만의 탈원전정책 무용성 지적. 주변국 원전사고 시 안전망 강화필요성 강조. 위성활용 방사능 모니터링 촉구 및 위성활용협의체 소속기관 확대 제안 → 원안위원장 수긍답변 도출
- 우주전파센터 우주방사능 측정시스템 고장사실 최초발견. 과기부 특정감사 도출

정부주도 팩트체크 사업, 親與성향 편파방송 일방적인 대북저작권료 지불 비판

- 방통위 추진 팩트체크센터 편향성 및 사업 총괄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영평가 낙제·성과급 지적 → 언론사 자율에 맡기고, 개선방안 검토 답변 받아
- 文 정부 출범 후 친여 성향 매체에 정부광고 집중, 언론 길들이기 실태 지적 → 해당 정보공개로 정부 광고 집행의 정치 편향성 견제
- KBS에 '나훈아·BTS' 콘텐츠 등의 해외 불법유통 조치방안 마련 촉구 → 방통위-저작권 소관부처인 문체부와 대책마련 도출
- 對北송금 방송저작권료 문제 최초보도 → KBS양승동사장 허위답변 도출. 상호주의에 반하는 불공정계약(한국만 북한에 저작권료 지급) 이슈제기

'전문성·공정성 결여, 정치적 편향·코드인사, 기강해이'의 원자력·ICT기관 질타

-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로 징계받은 간부에 수천만 원 성과급 지급 사례 밝혀 → 방송발전기금 운용·관리 현황 및 산하기관 투자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주문
- 원전해체 계획서 문서 방치, 독자개발한 우라늄 정제공정 기술을 민변 출신 원안위원이 반대해 기술허가 미승인, 해상풍력 실증단지 블레이드 파손사고(그린뉴딜 지적) 등 → 원안위·과기부 등 상급기관 특정감사 도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의원 **허은아** /

탈원전, 편파방송, 사모펀드 비리 등 문제점 지적

주요 내용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파괴

- 2018년도 6월, 한수원은 정부에 '탈원전에 따른 비용 보전' 요청
- (영업이익) 3조8천억원(2015년)에서 7,800억원(2019년)으로 감소 (*2017년을 기점 급감)
- (당기순이익) 2조4천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
- (부채) 27조원대로 유지되다가 2017년부터 급증, 2019년 기준 34조로 증가
- (전력판매수입) 2015년 10조 3,159억 → 2019년 8조 5,277억으로 급감
- (재고자산) 2015년 6,650억 → 2019년 1조 8,082억으로 급증

'검언유착' 허위사실 보도한 기자에게 '수신료' 들여 변호사 지원하는 KBS

- 한동훈 검사장 "세금 낭비 막기 위해 개개인에게만 손배청구"했으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수임료 반액(*1억원 중 5천여만원) 보전해 변호사 지원(추정)
- KBS 기자,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해 공영방송 신뢰성 훼손 △회사 차원 손배청구 △징계해야하는 상황에 수신료 들여 변호사 지원은 비상식
- KBS 공영성의 완전한 상실,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어용방송, 또 다른 '정권의 주구'

국가기금으로 '펀드사기' 옵티머스에 670억 투자한 전파진흥원 지적

- 진흥원 "투자 구조상 금융사기 알 수 없었고 이자 포함 원금 회수했다"는 입장이었으나, 기금운용본부장-옵티머스 인사 간 로비 진술 확인돼 국면 전환
- A 본부장에 로비한 정영제 대표, 과거 DJ-노무현 정권 급성장한 C&그룹 출신이며, 사모펀드 비리에 여권 인사 연루 의혹 제기
- 전파진흥원은 유착 의혹에 입장 밝히고 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의원 **황보승희** /

1. KBS 검언유착 오보 배후는 권력실세
2. 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주도
3. 김어준 편파방송 대가 하루 200만원

주요 내용

1. KBS 검언유착 오보 해명은 거짓말! 권력실세에 의한 청부 보도 의혹 증폭

- KBS는 지난 7월 18일 9시 뉴스 '검언유착 오보' 사유에 대해 기사가 급하게 작성됐고, 여러 취재원을 통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거짓말로 밝혀짐.
- 〈KBS보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초 기사 작성 후 보도되기까지 5시간 이상 여유가 있었으며 10번 이상 기사를 수정했고, 취재원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기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 KBS가 상시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청부보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 KBS는 즉각 취재원을 공개하고 양승동 사장은 중대 오보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임.

2. 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기획하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 2018년 5월 10일 한수원 사장 주재회의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중립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남.
- 바로 다음날부터 한수원, 산업부, 회계법인 직원들이 3회 이상 모여서 경제성 평가 하락(3,427억→224억)을 모의하고 실제 조작함.
-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물론 경제성 조작을 사실상 지휘하고 주도하였으므로 사장직을 사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임.

3. TBS 좌파선동가 김어준, 편파방송 대가로 하루 200만원 받아

- 단일프로그램 최다 방심위 법정제재(6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파방송을 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자 김어준은 라디오 150만원, 방송TV 50만원씩 하루 총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 국내 최악의 편파방송 진행자 김어준이 1년에 약 5억원을 받는 것은 정권의 특별한 비호 없이는 불가능
- 김어준이 유명사회자로서가 아닌 편향방송 대가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혹이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시사프로그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책임을 지고 김어준과 TBS 사장은 즉시 사퇴해야 할 것임.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의원 **김석기** /

국민 생명과 북한인권 외면한 채 허황된 평화타령만 하는 문재인 정부

주요 내용

허황된 평화타령과 종전선언에 매몰돼 국민 생명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느라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상황을 알고도 방관했음.
- 또한,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신형무기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냄.
- 이에 안일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능력을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함.

북한인권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의 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외교부 또한 초대 북한인권대사의 임기가 만료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도 불참함.
- 이에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설립을 위하여 국회에 이사회 구성에 관한 추천 절차를 즉각 진행하도록 촉구함.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교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지원을 위해 동포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
-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재외동포를 위해 경찰주재관 확충을 요구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의원 **김기현** /

中 · 北 눈치보고 국민 현안은 방기하는 文정부의 실정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북한 눈치만 보는 외교부 · 통일부의 직무유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적

- ▲文정부, 탈북자 인권조사 항목 · 조사대상자 축소, ▲20여년간 인권조사 실시한 민간단체 배제, ▲북한인권센터의 조사 비공개 · 자료 미활용 등 지적
- 北에 의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있었음에도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회의 불참 → 북한인권 및 우리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
- 조성길 前 대사대리 입국에 대한 정보유출은 가족 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문제임에도 불구, 외교부 · 통일부 등 주무부처가 안일하게 대응했음을 지적

文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강제징용자 등 쌓여있는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은 방기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

-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일방적 파기 이후 '일본의 사죄 · 배상' 및 화해치유재단 조성기금 반환 등에 대해 일본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음을 밝힘
- '19년 이낙연 前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할린 강제징용자의 우편저금 반환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및 일본 · 러시아와의 협의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밝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재외공관 성추행 사건, 대북지원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실관리 등 국민적 관심 높은 외교통일 현안의 정부 대응을 면밀하게 감사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우리 외교당국이 소극적임을 지적하고 일-러 사례를 통한 양자합의 및 국제법적 제소 가능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
- LA총영사관 성추행 사건을 단독으로 공개(제보) 및 강도높은 대책 마련 촉구
- 대북지원단체 국조보고금은 부실관리하면서 대북전단살포단체는 핀셋감사하는 통일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

혈세로 운영되는 기금의 '쌈짓돈'화 막고자 구체적으로 문제 지적하고 대안 제시

- 文정부 이후 남북협력기금 비공개비율 급증해 사전확인 · 사후검증 사실상 불가 → 규모 크거나 2년이상 계속사업의 경우 국회 사전보고 및 의결 거칠 것 제안
- 국제교류 · 국제질병퇴치기금, 내부직원이 기금운용해 수익률 저조하고 기금 특성상 감독소홀 우려 有→ 중소형기금인만큼 예산으로 편성할 것 제안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의원 **박 진** /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외교·안보 돌파구 마련 시급

주요 내용

〈외교부〉

국제사회 외교입지 축소, 소극적 외교자세로 한미동맹 위기 초래
- 맹목적인 종전선언 의미 없어,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의 필요성 강조
- 국민 피살된 안보 위기에 장관 회의에도 참석 못 한 장관 질타
- 유가족 국제사회 호소에도 청와대 눈치 보느라 소극적 대응 지적
-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정치적 눈치 보느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외교부 추궁

중국 시진핑 주석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외교부
- 중국의 항미원조 발언, 3불 정책 강요에 대해 강력히 대응 않고 무감각, 무소신, 무기력에 빠져 'BTS' 보다 못한 외교부 태도 지적

한미동맹 현안에서 보이지 않는 주미대사관
- 정부 방침 홍보에만 급급해 동맹 현안에 소홀한 대사관 임무수행 지적

장하성 주중대사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련 대국민 사과 요구
-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카드쪼개기 편법에 대한 논란 질타

한국국제협력단, ODA 비중 강화, 분절화를 통한 효과적 원조목적 달성 요구

재외동포재단,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KF, 사업관리 부실로 민간 공공외교 단체 지원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 지적

〈통일부〉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 종전선언의 한계성 지적
- 통일부가 주장하는 선 종전 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는 점을 강조

중국의 항미원조 발언과 반미적 시각에 답을 회피하는 통일부 장관 질타
- 통일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국내에서도 반미주의적 색채가 짙은 연구용역의 발단 제공
- 개성공단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 외부강연과 유튜브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책임 추궁

민주평통 자문위원-일반 국민의 통일 인식 여론조사 편차에 대한 지적
- 사무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의원 **정진석** /

국내 홈쇼핑에서 팔린 '북한산 옷' 그 뒤엔 정부 지원 있었다

주요 내용

'메이드 인 북한' 점퍼, 국내 홈쇼핑에서 17억원치 팔렸다.
-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제작한 북한산(産) 항공점퍼가 2018년 9월~12월 한 홈쇼핑에서 방송되면서 17억원대 매출을 올렸음.
- 홈쇼핑 측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방속 직전 홈쇼핑 측에서 작성된 평가보고서에서는 "북한 작업자가 소요(작업)하고 있는 중소형 공장으로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었음.
- 통일부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차원의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음.

홈쇼핑서 판 북한산 점퍼, 그 뒤엔 정부 지원 있었다.
- 북한에서 만든 항공점퍼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7년~2019년 사이 북한산 항공점퍼를 제작한 중소기업 A사에 생산 자금 등의 목적으로 '선급금' 17억 8,000만원 지원하고, 이후 북한산 옷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1,400만원 가량 이익까지 챙겼음.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2375호는 북한 노동자가 만든 모든 직물과 의류의 완제품 및 부분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거래가 금지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임.
- 2018년 7월 23일 미국은 유례없이 '북한과 공급망 연계가 있는 사업체의 위험 요소'라는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를 한글 번역본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북한산 옷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판매되었음.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의원 **조태용** /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외교부,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공조 나서야
거짓 평화에 매몰된 통일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펼쳐야

주요 내용

북한 비핵화 실현과 한미동맹 재건 요구

- '종전선언은 반드시 비핵화가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 언론의 주목을 받음.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52차 SCM 분석, 한일관계, 기후변화 등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국익에 기반한 당당한 대중 외교 촉구

- '사드3불 약속한 바 없다'는 정부 입장 확인 및 이념선전 논란에 빠진 '공자학원' 문제와 6·25전쟁 관련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적극 대응 주문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대안 없는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

- '위안부합의, 파기하거나 재협상 요구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기만 비판 및 얼마남지 않은 생존 피해자의 아픔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특임공관장, 캠코더낙하산 현황 공개, 文정권의 제식구 챙기기 실태 폭로

- 文정권 임명 특임공관장의 67%가 캠(프)코(드)더(민주) 낙하산인사임을 지적하고 무능한 인사로 인한 국가 외교역량의 후퇴를 지적, 즉각 시정 요구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및 문재인 정부의 직무 방기 강력 규탄

- 외통위, 당 특위위원으로서 정부의 책임방기 및 월북프레임 시도를 비판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유엔 차원의 문제 제기 등 필요 조치의 이행을 촉구

文정권의 북한 인권 외면 비판 및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 북한인권법 제정 4년 경과 불구, 인권재단조차 출범못한 현실 지적 및 통일부장관의 이사 추천 공문 발송 압박. 유엔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주문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

- 한국인 억류자 6명 관련 정부의 해결 의지 부재 질타 및 송환 노력 촉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견학 재개의 부적절성 질타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및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살해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재개의 부적절성 지적 및 국민 여론 수렴 확대 주문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의원 **지성호** /

북한인권 개선 관련 외교부의 무관심과
UN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통일부의 안일한 인식 문제점 지적

주요 내용

北 거절한 중국 억류 탈북민 220여 명 보호 요청(외교부)

-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게 되어있으나, 동법 시행령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음.
- 지성호 의원이 중국 內 탈북민들의 보호자를 자처해 駐중 대사에게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률에 따라 요청하고 최대한 빨리 파악해 조치 후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부탁함.

UN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으로 전시회 개최 지적(통일부)

-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평화, 바람이 불다' 전시회에서 출품된 북한 미술품 20점이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 받지 않음.
- 그 중 3점이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된 미술품, 제작시기도 2017년 대북제재 이후
- 통일부의 안일한 대북제재 인식 지적 및 통일교육원의 전시회 전면중단과 만수대창작사 미술품 반입 경위 철저한 조사 당부

영사협력원제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외교부)

- '영사협력원제도'의 위촉에 있어 재외국민 거주지와 관할 공관과의 거리, 재외국민의 수, 사건·사고의 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그러나 공관장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운영을 안 하고 있거나, 하고 있어도 명확한 기준 없이 위촉해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다수
- 외교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공관에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통일부의 편향된 북한인권·탈북민단체 사무감사 지적(통일부)

- 통일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中 등록신고 없이 2차례에 걸쳐 북한 수해 지원 명목으로 1억 4천여만원의 기부금 모집한 친여성향의 단체 적발
- 위법사항이 확인된 단체가 있음에도 통일부가 북한인권·탈북민정착지원단체만 사무감사하는 것은 표적감사임을 지적하고 통일부 행정의 정치적 중립 당부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의원 **태영호** /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외교정책 대한 현실적 평가와 대안제시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종전선언
-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는 북한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피격사건
- UN 등 국제사회의 대응 절실, 외교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중 '세습독재' 아제르바이잔만 돕겠다는 문재인 정부
- 우리 정부가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만 내년 34억 상당의 원조 계획
- 일방 당사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하는 것은 국제적 오해 부추길 수 있어

여권 발급비 중 30% 챙겨가고 외교부에 선물 돌린 국제교류재단
- 여권 발급비 5만 3,000원 중 1만 5,000원 국제교류기여금으로 모금
- 발급비에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을 끼워 여권발급비 30%가량 비싸게
- 개인적 선물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어기고 3년간 800만원규모 선물구입

국제교류재단 여권 발급 때 내는 '기여금' 목표보다 더 걷고도 모르쇠
- 세금 성격을 띄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 매년 계획보다 많이 걷고, 계속 목표액 상향
- 기여금이 목표 대비 더 걷혔으나, 더 걷겠다고 계획액 656억 상향

우리 국민 제3국 통한 북한 입국 시 비자 국적란 남조선 표기 문제
-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따라 남북한 상호 제3국 통한 입국시 국적 미표기로

무연고 탈북 아동과 청소년 관리 허술
- 하나원 졸업 후 그룹홈 13곳 중 미신고 단체 6곳
- 탈북청소년정착지원협의회 2016년 이후 회의 49회 중 대면 회의 단 2회

북한 핵실험장 위치한 풍계리 인근 거주 출신 탈북민 피폭검사 지속 시행
- 특히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탈북자 대상 핀셋 피폭검사 필요

정권 성향에 따라 정치화된 민주평통 북한인권사업
- 노무현 정부 이후 북한인권 사업 총 95건 중 보수정권 78건, 진보 17건
- 일관된 북한인권사업 실시 위한 별도 예산, 교육, 세미나 시간 배정 필요

출처불명 북한산 표기 농산물 유통 문제
- 북한산 표기 농산물 유통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및 사후관리 필요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한기호** /

우리 국방, 이래도 되는가!

주요 내용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한 軍 훈련 제한 심각!

- 육군 전방 사격장 2곳, 군사합의 이후 사격훈련 "0"회!
- 전방지역 해상사격 훈련은 군사합의 체결 전 훈련 횟수 대비 36% 불과 해군 1함대의 경우 사격훈련 횟수가 2017년 대비 70%에 그침.
- 한미간의 연합·합동 훈련도 미 실시되는 등 군 대비태세 약화 초래

軍 전투력 손실을 초래하는 헬기 성능개량 사업!

- 육군의 주력 헬기인 블랙호크(UH-60)는 성능개량을 통해 향후 약 20~30년간 사용이 가능함에도 방사청은 소요군도 우려하고 성능도 떨어지고 비용도 더 소요되는 헬기 기종 선정 시도
- 방사청의 특정 헬기 기종 선정에 대한 유착 의혹 제기

문재인 정부의 원칙 없는 무기도입, 공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져!

- 文 대통령 공약인 경항모 도입 계획에 따라 F-35A 대신 F-35B 도입 계획 F-35B는 F-35A에 비해 더 비싸고, 무장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기종임.
- 이로 인해 공군 전투력이 질적·양적으로 저하되는 등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위협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군 전력 증강 계획이 대통령 의지만으로 좌지우지 되는 문제점 제기

北 위협에 대비한 軍 대비태세 약화 우려!

- 한국군 최초의 軍 전용 통신 위성 올해 발사, 하지만 정작 통제 단말기 미구축
- 차세대 무인정찰기 北 GPS 교란에 취약, 대응책 강구 필요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강대식** /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

주요 내용

북한군의 우리나라 공무원 총살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직무유기

- 군은 공무원 A씨를 9월 22일 15:30분에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하고 대통령에게 18:36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1:40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될 때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는 대통령과 국방부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임.
- 또한,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간 북한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며,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 및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백히 기술하고 북한군의 우리나라 공무원 총살 사건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갈등 표면화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이 아니라 시기(문재인 정부 내)에 기초한 코드 맞추기식 전환계획으로 한·미간 갈등만 심화되었음.
- 또한, SCM 공동성명에는 과거 12년간 계속 유지되어 온 '주한미군 규모 유지'관련 표현이 삭제되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로 변경되었음.
- 주한미군은 주둔 자체만으로 전쟁에 대한 억제력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군사대비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한미동맹이 직면한 많은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임.

심각한 보안 기강해이로 인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의 기밀 유출

- 올해 초 국방과학연구소의 퇴직 직원들이 수십만 건에 달하는 기밀 연구자료를 USB에 담아 퇴직하였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외국 연구소에 취업하여 다른 나라 국가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유출경로만 파악했을 뿐 실제 어떤 기밀자료가 얼마만큼 유출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자료의 유출경로 파악뿐만 아니라 유출된 자료의 활용처도 반드시 추적하여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와 자료 회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신원식** /

文 정부의 신뢰는 얻었으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방부

주요 내용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이슈화

- 1·2차 '병가 19일'은 규정을 위반한 재량권/직권남용에 의한 특혜
  → 부대 측, 절차 미이행 / 명령 미발령 사실 확인 및 삼성병원의 "수술 후 부작용 없어 추가입원 사실 없음" 확인
- 1·2차 병가 휴가 명령 누락?
  → 4~5중의 안전장치로 착오로 누락은 불가능('청탁·외압에 따른 직권·재량권 남용에 의한 특혜'가 적발되어 문책될 상황을 우려한 궁여지책일 가능성)
- 외압·청탁 없이 보좌관 전화문의만으로 병가 9일 연장 불가능!
  → 엄마 보좌관 / 국방부 민원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외압 행사 정황 포착
- 3차휴가(정기휴가) 승인 시점 관련, 검찰의 지원장교 측의 '탈영상황'을 방증하는 최종 진술에 대한 증거 미채택
  → 특검 필요성 지적

국방부, 정권 코드 맞추기 위해 군사편찬연구소에 '민군현안 TF' 설치 운영

- 송영무·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군사편찬연구소에 '文 정부 방향성에 맞춰 과거 군의 잘못된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자' 취지로 TF를 구성, 군 역사의 부정적·어두운 측면을 부각시키려 한 전대미문의 정치중립위반 의혹 추궁
- '군 역사에 대한 객관적·가치중립적 연구·편찬'이라는 군사편찬연구소의 존재이유를 철저히 유린, '국방조직'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한 초유의 직권남용 행위임을 지적
  →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文 정부, 위험천만한 '先 병력감축·後 전력화' 합리화를 위해 '전력화' 개념 자체를 왜곡

- 文 정부, 국방개혁 2.0 완수를 위해 '先 무기체계 확보 後 병력감축' 원칙 대신 '先 병력감축·後 전력증강' 방식으로 변경하였음을 지적
- 특히 국방부가 이를 위해 무기체계 전력화의 개념을 '무기체계의 실제 배치 단계'에서 '예산 집행 단계'로 왜곡한 조치의 부당성 지적과 동시에, 국방개혁 시행 이후 감축된 병력 총 12.7만 명 중 7만 명(59.4%)이 文 정부에서 감축되었음을 지적
  → 국방개혁 2.0 전면 재검토 촉구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윤주경** /

도 넘은 軍의 北 눈치보기, 병 복지 및 군 기강 실태 점검

주요 내용

도 넘은 軍의 北 눈치보기 지적

- 北의 공무원 총살 사건·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포괄적 적대행위'이자 9.19남북군사합의 정신은 위배되지만, 합의 위반 및 도발은 아니라는 軍
- 공무원 실종 당시 국방부 장관의 '월선 가능성 염두에 둔 수색' 지시에도 작전은 해군, 수색은 해경이라며 니탓 공방 일삼으로 해경 수색 계획에만 따라서 수색한 군
- 北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해수부 공무원 수색 시 조명탄 사용 '0', 수색 의지 조차 없는 군의 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軍 기강 해이 심각 지적

- 코로나19로 '회식 금지령'에도 음주운전, 나체 난동 사건 등 발생
- 지난 5년간 파면 장교 58%가 '여군 성폭력'이고 전임 정부보다 군 성범죄 연평균 13% 증가, 軍 하극상 연평균 200여건 발생, 군 자살사고도 오히려 증가, 北 미사일 관련 문건 포함 최근 3년간 군사기밀 195건 누출 발생
- 수사도 안하면서 수억 검찰수사활동비 챙긴 軍 법무관 사례 적발

병 복지(의료체계, 급식, 휴가 등) 수준 미흡 지적 및 개선 지시

- 열악한 군 의료체계 지적 및 국방비 대비 의무예산 대폭 확대 필요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추진 및 휴가 제도 전면 개선, 국회 보고 주문
- 추미애 장관 '아들 면제 대상인데 입대' 발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 훼손
-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부실 급식' 제공 및 코로나19 성금 강요 적발

준비없는 정책 시행 및 전력 도입 계획으로 안보위협·내부갈등 조장 지적

-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전력화 지연, 부실생산 및 경영부담 우려, 계약 연장 필요
- 민간 통신사 서버로 군 정보 전송되는데도 보안성 검토 없이 AI스피커 도입
- '병 휴대전화 허용' 전면으로 급증한 불법 사이버 도박, 2차 범죄까지 발생
- 軍 운용중인 무인기 600여대 대부분 北 해킹에 속수무책
- 경항모 도입 관련 탑재 전투기 기종·운용인력 등 해군·공군 의견 상이 확인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 불안정

- '한미관계 불안정' 느끼는 국민 3년새 2.2배 증가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이채익** /

‘북한 눈치’, ‘정권 눈치’보는 軍이 아닌 ‘강하고’, ‘신뢰받는’ 軍이 될 것을 촉구

주요 내용

(국방부)

- 3축 체계, 사라졌나? 北 도발 시 강한 응징보복 필수
  - 北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며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의 명칭 변경 후 北의 계속된 도발에도 우리 軍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현 상황을 지적
  - 평화는 강력한 억제력이 바탕. 도발 시 강력한 보복 응징 필요
- 文 정부, 軍 코드 인사로 할 말 못하는 軍 만들어
  - “적폐청산”의 일환인 “국방개혁”을 빌미로 ‘기수 파괴하는 연어인사’, ‘보은인사’, ‘줄세우기인사’로 일관
- 병사들의 마스크 부족 사태 관련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병사들에게 주 2매(월 8매) 지급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확대 지급 요청
  - 국정감사 지적 후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를 주 2매에서 4매로 확대 지급할 예정
- 병 특수지·위험근무 수당이 5년째 그대로인 것을 지적하며 수당 인상 필요성 제기

(병무청)

- 스티브유, 국내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병무청의 단호한 입장 재확인
- 피의자 신분으로 도피성 입대하는 인원들에 대한 입영 연기 등 제도 개선 요청

(방위사업청)

-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 필요

(합동참모본부)

- 軍이 피격공무원 실종 다음날인 9월 22일 해수에 따른 표류 예측 지점을 담은 해경의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질타
  -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실종공무원을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

(육·해·공군)

- 韓美 연합 훈련, 대폭 축소되거나 시행조차 안 해
  -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폐지되거나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 위주로 진행, 30만명 넘게 참여한 독수리 훈련은 아예 사라졌고 육군의 한미연합 소부대 훈련은 지난해 대비 56% 축소. 또한 해군의 한미연합훈련 상당수가 실시되지 않고 공군은 훈련규모를 축소하거나 코로나를 이유로 취소함. 해병대는 지난해 대비 올해 절반 넘게 훈련 축소가 예상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하태경** /

하태경,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 질타

주요 내용

해수부 공무원 피살,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저버린 文정부의 총체적 실책

- 北도 하는 국제상선망 구조요청, 우리 정부는 시도조차 안 했다
- 국민 줄에 묶어 끌고 가는 걸 北의 구조로 착각한 국방장관의 오판
- 수색 골든타임 4일동안 군 비행기 단 한 대도 안 떴다
- 국제상선통신망 교신, 실종 첫 날부터 이뤄졌는데도 수색 사실은 뭉개
- 청와대가 놓친 골든타임 6시간, 써보지도 않은 3가지 채널(국제상선망, 친서라인, 유엔사 라인)

청년병사의 군복무 공정성 점검 및 대안 제시

- ‘공가’ 대상인 코로나19 자가격리 병사를 개인 ‘연가’로 부당하게 처리한 잘못된 행정 시정요구 → 육해공군 164명의 잘못 처리된 병사 시정조치
- 청년장병에 대한 합리적인 군복무 보상방안 촉구 → 국방부 연구용역 통해 보상방안 연구하기로
- ‘4만3천 장병 수해복구 대민지원갈 때 6천여 간부들은 골프장으로’ 질타
- 병사들 휴가통제 하는데 음주로 거리두기 지침위반한 간부들의 행태 적발
- 개인정보 유출범죄의 99% 차지하는 공무원에 면죄부 주고, 1% 사회복무요원은 무조건 형사고발하겠다는 병무청의 잘못된 방침 질타
- ‘서일병이 누린 군인 기본권’ 모든 병사들에게 보장하라고 촉구
- 예술체육특기자 면제 없애고 병역 연기로 통일해야, ‘특혜 최소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 지켜져야

각군이 추진 중인 지능형 CCTV 실태 점검

- 가짜 국산으로 포장한 중국산 CCTV 사업 전면 감찰해야 → 국방부, 육해공군 지능형 CCTV 사업 실태 감찰하기로
- 침투 다 끝나고 나서 경보 울리는 바보 CCTV → 공군총장, 조사하겠다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2020
국정감사
백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의원 **박완수** /

문재인 정부 추진 주요 정책·사업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마련 촉구

주요 내용

현 정부 추진 주요 정책·사업 문제점 지적

- 공무원 증원으로 241조 추가재정 부담, 신설정부위원회의 부실·방만 운영
- 주민참여사업의 관치화·정치화 전락, 법적근거없는 재정지원 문제점 지적
-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 달리 발행비용만 낭비하는 문제
- 지속 불가능한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무원 사기증진 대책 수립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제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촉구

- 광역자치단체 제각각 정무기능 수행직원 채용, 밀실 운영 문제점 지적
- 코로나 영향 자영업자 줄폐업에도 지자체들의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 문제

경찰청/자치경찰제 도입 정부수정안 관련 문제 지적 및 개선 촉구

-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장기간 공식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칭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의 급선회 배경(청와대 지시 등)의 문제 지적
- 향후 행안위 등 국회 차원에서의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통한 신중한 제도 도입의 기반 마련

경찰청/인천국제공항공사 청원경찰 도입 문제 관련

-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관련 청원경찰 도입 결정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등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지적
- 과거 정부부터 이어온 국가기관의 청원경찰 축소, 특수경비직 확대의 기조에 역행하는 인천공항 사례에 대한 경찰청의 명확한 입장 확인과 신중검토 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률적 검토도 미비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안 없이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가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종합적 재검토 필요성 지적 및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해 지적

소방청

- 특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 절차 중 화재방지시설 설계 등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과 위원 위촉 기준의 부재에 따른 각종 이권 개입 등 문제 지적 및 정부차원의 감사 촉구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의원 **권영세** /

권영세 국정감사 아이템 보고서 [보도량 기준]

주요 내용

공시가격 급등 편승, 서울시 4년간 재산세 약 8천억 초과 과세

- 2017년-2020년, 본세 5,936억 · 도시지역분 1,963억 더 부과
- 2020년에만 약 3천억(본세 2,065억 / 도시지역분 896억)
- 초과 과세액 3천억원 서울시민에게 돌려 드려야

이재명, 채동욱 만나고 옵티머스 사업 '협조 공문' 보내

- 수천명 투자 국민을 속인 옵티머스 5천억 펀드 사기 세력, 골든 코어 멋잇감 된 물류 단지 개발
- 이재명, 채동욱 회동 3일만에 관계 부처 55곳에 협조 공문 발송
-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도 채동욱과 이재명의 만남부터 패스트트랙,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원 등 사업 관련 대목 포착

테슬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확보 시급

- Autopilot, Full Self Driving은 마치 고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능으로 오인식
-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R&D 중간보고서 미제출
- '치터', '헬퍼' 등 오토파일럿의 전방주시 의무 무력화하는 보조장치 단속해야

1조원대 운용되는 경기지역화폐, '안전장치'는 사실상 전무

- 선불충전금 민간대행업체가 지급불능 시, 1조72억원에 대한 손실은 주민과 가맹점이 떠안아야 함.
- 선불충전금의 ① 지급보증을 위한 자금보호 ② 이자, 낙전 등 자금 운용 수익자에 대한 규정 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적 편향성 분석결과 극 좌편향된 방송임을 확인

- 패널 출연 횟수 민주당 238회, 국민의힘 71회 약 3.35배 차이, 시민단체 출연 횟수, 윤미향 및 추미애 사건도 편향적으로 다뤄
- TBS는 시 예산이 연간 400억 가까이 투입되는 공영방송, 김어준 연봉 공개해야

* 추가아이템: 서울시 수돗물 불평등 해소해야, 권영세의 7대 교통안전 정책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의원 **김용판** /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대책 주문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 (태양광)무분별한 태양광 산업에 따른 산림 훼손과 그로 인한 산사태 발생
- (태양광)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현장 방문 및 주민 의견청취
- (특별감찰)행안부의 지자체 특별감찰의 남발·남용 및 형평성 논란

경찰청

- (10·3광화문 차벽설치)경찰의 행동은 '정권의 홍위병'에 불과하다는 지적
- (10·3광화문 차벽설치)'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 비판
- (자치경찰제)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우려

소방청/한국자유총연맹

- (소방청)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및 제도개선(KBS보도)
- (소방청)소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지적(3년간 성비위 62건, 음주운전 224건)
- (한자총)설립목적을 망각한 편향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질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 (중선위)선거보전금액 미반환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촉구 및 대책 마련(SBS보도)
- (중선위)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의 상습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요구
- (인사혁신처)해외연수 기간동안 관리·감독 부재와 연수 후 의무복무위반 지적

경기도/강원도/세종시

- (경기도)이재명식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같음을 지적
- (강원도)레고랜드 관련 허술한 계약행태로 혈세낭비 및 MDA원본 미공개 지적
- (세종시)세종도시교통공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자녀 부정채용 폭로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의원 **김형동** /

국민 안전은 뒤로하고 원칙과 기준 무시하는 정부

주요 내용

임기제공무원 특별시가 돼버린 서울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임기제공무원이 387명 증가
- 전국 임기제공무원 비율은 1.85%인것에 비해 서울은 3.79%
- 1, 2급 고위공무원 2명은 박 전 시장처럼 시민단체 출신
- 임기제공무원은 선거캠프 등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악용돼

경찰위원회 의사 무시하는 경찰청장과 대통령

- 개천절, 한글날 집회금지를 위한 차벽설치는 '원칙적으로 차벽은 집회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찰 내부지침을 위반
- 헌재에서도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결정 내린바 있음.
- 10월 5일 경찰위원회에서는 개천절 집회에 대한 차벽설치 및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표시
- 그럼에도 10월 8일 경찰청장은 국감장에서 차벽설치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었고 대통령도 경찰의 날 행사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다고 치하함.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부족

- 최근 7년간 몰래카메라 등 공중화장실 내 각종범죄가 2.5배 증가
-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장치 설치 비율은 10%대로 매우 저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증가하는데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는 1건도 없어 점검 실효성 의문
- 행안부 소관 법으로는 화장실의 청결, 위생 위주의 점검이 대부분으로 범죄 예방 점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함.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의원 **박수영** /

정쟁 아닌 정책으로 승부한 국정감사

주요 내용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에서 고성과 막말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치르겠다고 결심했고 많은 분들과 언론에서 국감다운 국감을 치른 스타로 선정해 격려해 주셨음.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 / 각 지자체

-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해 1조원이라는 돈을 쓰고서고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상실한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
- 우리나라의 연공형 인사제도의 개혁필요성과 공무원 증원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
- 편향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실태를 지적하고 행안부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아냄.
- 주간, 야간, 새벽시간 구분없이 무차별 발송되는 재난문자 공해의 실태와 국민 불편 사항을 지적하고 행안부로부터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배포 등 선거 중립성 훼손사례를 지적하고 보궐선거를 맞아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촉구
- 지금껏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는 선관위의 업무추진비 실태 공개 한도도 없고, 술집에서도 쓰고, 새벽에도 쓰고, 휴일에도 쓰는 선관위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냄.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 소방청

- 개천절 집회에 전국 경찰중대 192개 중 187개 중대 경찰버스 537대가 동원되 반헌법적 차벽을 쌓은 경찰의 실태를 지적
-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한 경찰청의 부실한 준비실태를 지적하고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특히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찰청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의원 **서범수** /

대통령 측근 회사 아파트사무실에서 수주, 개천절 집회 경찰의 과잉대응 지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지적, 소방특별조사의 내실화 필요

주요 내용

탁현민 설립, 노바운더리 기획사·정부·지자체 행사 30건 수주

- 아파트 사무실에서 정부, 청와대 행사 8건(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행사 포함) 수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행사 16건, 최소 19건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
- 업체 확인도 없이 수의계약 체결. 명백한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 주장

개천절 집회 경찰의 과잉대응 지적

- 경찰이 지난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전국의 경찰 187개 중대와 버스 537대를 동원하고, '재인산성'이라고 불리는 차벽을 설치하여 완전히 봉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침해의 최소원칙을 위반한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적
- 감염병 예방이라는 국민의 건강권과 집회·시위의 자유간 조화가 필요

선심성 해외연수, 전별금 관행, 마스크 수의계약 문제 지적

- 지방자치단체 국감을 통해 마스크 수의계약건의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문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별금 관행과 선심성 해외연수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
- 전국 지자체가 올해 코로나19대비 마스크를 구입한 비용 약 2,520억원 중 약 82%, 2천억원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164억원의 전별금 예산을 집행. 울산시 북구, 울주군, 전남 진도군, 장흥군 등 4개 지자체는 3년에 한번 꼴로 해외연수를 보냄.
-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함.

소방특별조사의 내실화 필요

-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3년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동에 불과
-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선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의원 **이명수**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금권선거 의혹 제기

주요 내용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성, 집행방법 등 선거관련성 판단·제기

- 재원조성 상당부분, 기존 예산보다 「과도한 채무」의존
-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시기·대상 등 문제 지적
  - 광역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중 4.15 총선 이전 지급된 사업 총 18건 〈4월 13일 지급된 사업도 3건 확인〉
  - 선거막판 택시·버스 운전자, 이·미용사 등 여론주도층 최우선 지급
- 정부부처, 추경·예비비 이용 선거 막판 「집중지급」
  -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긴급·특별지원 명목 약 2조원이상 발표·집행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성」 문제 - 재난재해 대비 소홀

- 상당수 지자체, 축적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대부분 소진
  - 재난관리기금 : 인천(94.3%), 경남(75.5%), 대구(72.9%)순 집행
  - 재해구호기금 : 대전(98.4%), 전남(98.0%), 서울(89.8%)순 집행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긴급재난기금으로 적극 사용 권고
  - 긴급재난지원금의 집행금 중 80%(중앙), 20%(지자체) 부담 중 지자체 부담금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활용
- 7~8월 수해피해 및 9월 태풍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용 부족사태 발생
  -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지자체의 재난재해 대비 대책 전무
  - [참고]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용, 약 3조 4,377억원 발생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시 사용처 제한 문제 제기

- 국내 영세 소상동인 중심, 지역경제활성화 목적 → 다국적 매장 이용가능
- 카드사의 「본사 위치」관련, 지역 사용 제한 → 본사 아닌 지역의 카드사용 제한
  - ex) KTX역사 내 매점 이용은 대전시민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스템」그대로 사용, 시민불편 지적에도 진행
  - 금융기관 및 카드사, 2주라는 시간 촉박함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의원 **최춘식** /

‘유명무실’ 법안·규정, 만들기보다 지키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

주요 내용

20년째 유명무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이제는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났으나 실질적인 지원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법정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 등을 협의한 건수는 전무하였음.
- 이에, 행안부 장관에게 유명무실한 법안만 만들어 놓고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접경지역이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경기북도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행안부에 접경지역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미군 장갑차 수리비, 유가족 부담 없다

- 지난 8월 말 포천에서 SUV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 탑승자 4명이 모두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 한미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 대열 앞뒤로 호송차량을 동반해야 했으나, 사고 당시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합의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 또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경기도는 주한미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한미군 측도 SOFA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이달곤** /

– 문체부, 문화예술관광분야 책임 부처로의 소임 다했나?
– 노바운더리 의혹 확대, 감사원 감사로 명명백백 밝혀져야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2016년 정부 전체 재정 대비 1.42% → 2020년 1.26%

- 총예산 늘었지만, 정부 예산 대비 비율 감소 추세 2016년 대비 0.16% 감소
- 현 정부 들어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예산 지속 감소,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 국민 삶과 밀접한 연관있는 문화예술관광분야 예산확보 소홀
- 코로나19 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계, 영화계, 관광·여행업계 회생시킬 수 있는 재정 확보와 특단의 대책 촉구

문체부, 예산 실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 시급

- 문화예술 분야 실집행률 80% 초반, 체육 분야는 실집행률 70% 못 넘기고, 관광분야는 2016년 87.3% → 지난해 81.7% 실집행률 하락 추세
-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4년간 당초 편성된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이·전용, 다음 연도로 이월된 규모는 4조1,700억 원으로 연평균 1조 이상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함
-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당초 취지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
- 이러한 대규모 미집행은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예산이 국가 재정대비 감소·정체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김영준 원장 취임 이후 끊임없는 임직원 비리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노바운더리의 하도급 계약을 직접 승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원계약자와 노바운더리 간의 계약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 → 의혹 증폭
-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 규칙 명시, 2018년의 경우, 현 원장 재임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당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승인절차 및 정당성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 → 현 원장 연임할 자격 없음 증명(감사원 감사요구)

정부, 일본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근대 유산 중 조선인 '강제징용' 현황 파악 소홀

- 문체부와 문화재청, 행안부, 보훈처 등 정부 공동대응팀 구성하여 독립기념관 외부 공간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을 당한 우리 선조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추모비와 추모 공간 조성 시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김승수** /

文정부 문화·체육·관광·문화재·언론 정책, '총체적 난국'

주요 내용

(문화분야)중국 판호 해결 의지부족과 정부의 저자세 굴욕외교 지적

- 文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굴욕외교에도 불구하고 중국 판호 획득 全無 및 저작권 피해는 2배 지적
- 피해조사, 지원방안, 국제사회 공조 등 문화콘텐츠 보호 위한 5가지 정책 건의

(체육분야)특정인맥 중심의 '불통' 체육 정책 비판

- 스포츠혁신위의 편향적 인적 구성 및 '답정너' 식 체육계 의견 묵살 지적
- 체육계 인사 약 7천명 설문조사 통해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불통' 지적
- 특정 인사 중심 민간단체의 학교체육 분야 장악 시도와 해당기관(학교체육진흥회) 설립 및 지원의 위법·편법성 지적

(관광분야)文정부 관광정책의 총체적 부실지적 및 대정부 건의서 제출

- 문 대통령 호텔 재산세 감면 혜택 거짓 발언을 문체부 답변으로 증명함.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에 대한 고민없는 땜질식 정부대책 지적
- 여행, 숙박, 가이드 등 관광업 현장 중심 '관광산업회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 건의

(문화재분야)文정부의 내로남불식 문화재 관리 실태와 왜곡된 역사 인식

- 정부별 일제 수탈유산 문화재 등록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비교로 '일본문화 재생사업' 자처하는 文정부 친일 작태 비판
- 문화유산국민신탁 '부산 정란각' 미승인 수익사업 영위 및 행정·입법 사각지대와 개선 필요성 지적
- '손혜원 前의원 부동산 투기 사건' 관련 엉터리 문화재 조사보고서 등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및 과실 지적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편향성 및 수정주의 사관 입각한 6.25 전시회 비판

(언론분야)네이버 팩트체크 서비스 정치적 편향성 지적

- 네이버-서울대 팩트체크 2,094건 전수조사 발표
- 팩트체크 대상 편향적: 국민의힘 367건, 민주당 114건 (약 3.2배 차이)
- 체크 결과 편파적: 국민의힘 대상 팩트체크 67% 사실 아님, 민주당 48% 사실
- 포털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노력 답변 이끌어 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김예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성과

주요 내용

문화·예술·체육 분야

- 예술의전당이 추석 연휴 기간 노골적인 정치편향 전시회 "말하고 싶다, 그때 그 사람"을 무료로 대관해 주려다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이어지자 전시를 철회한 것을 언급하고, 예술의전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전시회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
- 국민적 공분을 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프로스포츠 구단 인턴십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였고, 관련하여 법률 자문까지 받아 가며 잘못된 자료 제출거부 근거를 마련한 프로스포츠협회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질타했음.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문화예술인, 영화인들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창작준비금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등 문화예술인 지원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했음.
-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채용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한 채용 비리 척결을 강하게 요구했음.

관광·문화재·콘텐츠 분야

- 지난해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하여 관광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대책 마련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음.
- 문화재가 대량 매장된 지역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3기 신도시(교산지구)의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음.
- 문화재보호구역내에 대량으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향후 태양광시설 설치관련 심의 시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부풀려진 자료 제작 실적을 발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하게 요구했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배현진** /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내용

정부 강행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사업으로 태릉의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

-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따라 경관 보존을 위해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점 지적
- 문화재청도 태릉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태릉의 연지 복원계획을 세웠다는 점과 국토부 개발정책과 상충됨에도 공식 협의를 하지 않은 점 지적
- 택지개발사업에 앞서 연지 조사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등 문화재 복원을 최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문화재청장의 답변을 받아냄.

정부의 KOC 분리 정책이 올림픽(IOC) 헌장에 보장된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지적

- 정부의 일방적인 KOC 분리 정책 추진은 체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규정하는 올림픽 헌장 내용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지적
- 한국 정부가 IOC로부터 사실상 경고를 받은 점 지적
- 체육 정책 추진과정에서 KOC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 국감 이후 "KOC 분리 없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바흐 IOC 위원장의 입장 발표

DMZ 평화관광사업이 지뢰 폭발 위험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 지적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DMZ 평화관광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 지뢰 폭발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냄.
- DMZ 지역 38만발의 지뢰를 제거하는데만 '최소 15'년이 걸리고, 현재의 지뢰제거 속도로는 500년이 넘어도 지뢰 제거가 어렵다는 점 지적
- 지뢰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답변을 받아냄.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사 특별전시가 일본 식민사관을 대변하는 점 지적

- 전시물 중 연대표의 대다수가 임나일본부설의 주요 근거인 '일본서기'를 반영한 점 지적
- 일본서기에만 있는 국가 다라를 가야 7국으로 명시하여 임나일본부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기에, 국민들에 잘못된 역사를 전달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이 용** /

文 정권의 문화·체육 분야 '국정농단'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요 내용

정부예산으로 '노바운더리' 및 대통령 측근 회사 일감몰아주기 의혹

- '노바운더리'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주 및 협찬 받은 것이 33건, 최소 20억 6,439.2만원이라는 점을 밝힘.
-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차은택 측근의 '플레이그라운드'와 같은 방식과 과정으로 탁현민 측근의 '노바운더리'가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대행사로 특혜 수주되었다는 점을 밝힘. 또한 쪼개기 계약 의혹을 제기함.
- 또한 '노바운더리'가 대통령 측근의 회사를 위해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일감몰아주기 한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고, 캠코더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노바운더리' 관련 거짓 해명을 한 부분을 밝힘.

학교체육진흥회의 체육계 농단 의혹

- 공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교부금 지원과정과 부실한 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해 학교체육진흥회에 대한 문체부의 특혜와 미흡한 관리를 밝힘.
- 학교체육진흥회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연관성을 밝히고 혁신위 권고안에 학교체육진흥회를 위한 특혜가 있음을 공개하여 혁신위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함.
- 또한 국회를 통한 학교체육진흥회의 입법 로비 정황 등을 밝히며 특정 집단, 인물에 의한 체육계 농단 의혹을 제기함.

그 외 주요 지적사항

- 국가대표 훈련수당 현실화, 체육인 군복무 대책 등 체육인을 위한 정책 질의와 함께 故최숙현 선수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밝히고, 체육계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그 외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문화재청의 안일한 훈민정음 환수 정책, 한국관광공사의 미흡한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등 문체위 소관 기관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최형두** /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및 여성·장애인 고용 실태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장 친여 낙하산 릴레이 취업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사장·감사·이사 등 다수가 카지노·관광 산업과는 무관한 친노·친문인사임.
- 낙하산 기관장 취임 후 해마다 매출은 감소했고,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 카지노 사업 매출액이 전년대비 20~3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문성·경력이 전무한 기관장이 경영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임.

낙하산 기관장 사전 선거운동기구로 전락한 문체부 공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2018년 취임했던 전 원장이 임기 중에 총선에 출마하면서 10개월 이상 기관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 전 원장은 취임 시 직무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도 없이 이력서 한 장으로 원장에 임명되었고, 원장 신분으로 선거 출마 예정이던 충북 청주시와 다수 업무협약을 맺는 등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임.

문화예술·체육계 남녀 불평등, 여성 유리천장(Glass Ceiling) 여전

- 문체부 고위공무원단 여성은 전무하고, 소속기관 고공단 역시 20명 중 여성은 5명에 불과함.
- 공연예술 지원도 남녀차별이 해소되지 않아, 아르코에서 지원하는 공연예술지원금 2천만 원 이상 사업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은 32%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한체육회 여성임원은 16%로 3급이상 26명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음. 또한 시도체육회·종목단체·분과위원회 여성 참여율 역시 국제·정부권고 수준으로 개선을 통해 차별없는 공정사회·균형인사를 이루어야함.

문체부, 장애인 관련 의무 제도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

-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 상품구매율,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법정의무 사항을 조속히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창출 실현에 앞장서기를 바람.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의원 **이만희** /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파고들고 농어업인을 대변했던 2020 국정감사

주요 내용

보험사 손해를 농업인에 전가하는 농정당국

- 기상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지급 기준은 강화하면서 보장 범위는 축소해 농업인의 빈축을 사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만큼 보험 판매사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그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관련 예산을 늘릴 것을 주문함.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으로 몰아가는 문 정권

- 연평도 공무원 피격·소각사건의 연관 부처인 해수부와 해경을 같은 날 동시 진행하여 해경의 표류예측시스템에 대응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등 월북몰이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초동대응의 부실, 여야에 따라 달라지는 해경청장의 답변태도 등을 집중 추궁함.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망치는 해상풍력발전

-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과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의 의견은 배제된 채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조업구역이 대폭 감소될 위기에 처함.
-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조업구역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어업인의 안전과 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시스템을 마련 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함.

NH투자증권은 어떻게 옵티머스의 펀드를 팔게 되었나?

- 농협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김○○(前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옵티머스펀드 판매 청탁을 받아 부하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 부실검증 정황을 포착하는 등 향후 옵티머스 사건의 권력형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으며 상품 검증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사내복지기금을 옵티머스 상품에 투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옵티머스운용사의 지분을 보유하던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던 기관으로 공사가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에 있어서 외압 또는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복지기금 투자에 있어서 투자 상품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의원 **권성동** /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文 정부 도넘은 북한 집착이 부른 파국!

주요 내용

피살 공무원 '월북'으로 모는 짜맞추기 수사 중단해야!

- 해양경찰청이 실종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정황증거로 인위적인 힘이 없이 북한으로 가기 힘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기했음. 그러나 국립해양과학기술원에 직접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해경이 실종 시각으로 추정하는 2시보다 기준 시작 시각이 늦어질수록 인위적인 힘이 없이 해류만으로 피살 공무원이 북한 해변까지 표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북한과 비밀리 접촉하며 퍼주기 준비한 부산항만공사!

- 단독 입수한 부산항만공사 내부문건에 의하면 해수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8월까지 비밀리에 북한 나진항 개발 추진을 위해 중국회사와 의향서 문구를 협상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만행 직후에도 퍼주기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북한 집착 외교를 질타함. 또한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과 협상한 일련의 과정을 정부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 이후 통일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서면 경고 조치를 하였음.

역대급 금융사기 범죄 옵티머스펀드, 아무런 검토없이 팔아치운 NH투자증권

- 5,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펀드는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로 기획된 펀드였음. 옵티머스 측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투자하겠다며 사례로 제시한 공공기관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함은 물론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도 없음. NH투자증권이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애초에 판매되지 않았을 상품이었음을 지적함.

영농과 병행할 것처럼 홍보했으나, 사기에 가까운 文 정부 태양광 정책

- 文정부 들어 설치된 여의도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농지태양광 중 99.8%는 영농과 병행할 수 없는 일반 태양광시설임. 그럼에도 文 대통령이 마치 농사와 전기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만 홍보한 것은 사기에 가까우며, 실제로는 막대한 농지를 잠식하는 결과만 가져왔음을 지적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의원 **김선교** /

국가와 국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내실있는 정책국감 실천!

주요 내용

- **NH투자증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소개로 태국 발전소사업 투자의향 밝혀, 사업최초인지에서 투자의향 표명까지 불과 한달도 안걸려!**
- **1,260억원이 넘는 허위 임대계약을 前대표가 단독으로 체결, 농협 하나로유통 前대표의 사기계약 의혹. 계약서 원본도 행방불명돼!**
- **해수부 산하기관, 최근 3년간 200여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채용은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부적정 적발 사례 적발 시 강력한 처벌 필요!**
- **농림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확인하고도 6개월동안 조사 안해! 의혹대상 필지, 전국 82,316필지. 방치할 경우 직불금 대란 우려돼!**
- **정부 부동산 대출규제 비웃는 공공기관 임직원 대출! 국민은 영끌할 때 공공기관은 낮은 이자에 1억~1억 8천만원 상당 추가 대출!**
- **전국 1,115개 농촌체험마을, 코로나19로 붕괴직전! 손놓고 있는 농림부!**
- **비상사태 시 필요한 '국가필수선박' 중 가장 중요한 유조선은 목표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 **한중어업협정 체결 후 양국 EEZ 어획량 실적, 무려 12배. 개선 시급!**
- **무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수준에도 aT 비축기지에는 1천톤 잠자는 중!**
- **aT, 매취사업 미수채권 127억원 달해. 대책회의 조차 1년 넘어!**
- **농업인 안전보험 여성농업인 가입률, 남성농업인의 절반 수준!**
- **농어업정책자금 관리 엉망! 5년간 부적정 대출 2,332건. 문책 78건 불과!**
- **농협자산관리회사,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4,656건에 달해, 1년만에 개인정보 무단조회 950만건, 무단출력 6천여건!**
- **마사회 의정부지사, 17개월간 운영된 밀실 환급률 103.2%. 마사회 평균 7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 **한국어촌어항공단, 하루 더 일하고 6개월치 퇴직금 받아. 퇴직금 규정 개정해 낭비되는 예산 최소화해야!**
- **최근 5년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안전사고 총 223건에 달해.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해 소중한 생명 보호 필요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의원 **안병길** /

대통령 사저 및 어업지도선 피격 공무원 사건 문제 지적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사저 농지로 드러난 '가짜 농사꾼' 문제 지적**
  - 대통령의 양산시 새 사저 매입과정에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허위사실 의혹
  - 대통령과 영부인이 400여km가 떨어진 양산까지 와서 틈틈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현재의 농지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임.
  -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중앙일보 1면 단독보도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근무 태만과 해수부의 관리 소홀**
  - 2019년 4월 21일 무궁화 11호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동료들과 음주 후 혈중 알콜농도 0.373%의 만취 상태로 해상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고, 시신이 발견될 시점까지 실종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밝혀냄.
  - 이번에 피살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태로 가장 기본적인 복무 규칙도 개정하지 못하고, CCTV 및 장비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합뉴스 단독보도
- **[해양경찰청] 공무원 피살사건, 월북 주장 증거 부실 문제점 지적**
  - 해양경찰청은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정황 증거 및 추측성 자료들을 근거로 일방적 월북 주장
  - 이에 대해 해경이 제시한 사건 당시 조류 분석자료 및 해경의 더미 시험 실패자료 등을 단독으로 입수하여 해경의 주장을 객관적 근거로 반박
  - 이와 같은 내용으로 MBN, MBC,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다수 보도
- **[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2단계 개발 방향 정책제언**
  - 현재 추진 중인 북항 1단계 개발사업과 아울러 추진 예정인 2단계 개발사업의 방향과 관련하여 2030 엑스포 유치, 체계적인 철도 및 도로망 구축, 구도심과 연계한 개발, 해당부지의 민간 택지 공급 제한 등 구체적인 정책제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의원 **이양수** /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민을 속이고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문재인 정부

주요 내용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건, 정부의 섣부른 월북 발표

-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격되고 시신이 소훼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근거만을 제시하며 월북 사건이라 연이어 발표
- 월북의 근거로 내세운 '슬리퍼'는 단 2명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승조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해경의 수사가 짜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음.
- 해경의 표류예측시스템 정확도도 50% 미만에 그치는 등 월북 근거 대부분이 수긍하기 어려워 월북을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청와대 인사가 포함된 대규모 펀드사기 사건, NH투자증권·농어촌공사의 비상식적 의사결정으로 비춰보아 외부세력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 의혹 제기

-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에서 상품판매를 담당한 NH투자증권, 상품을 구입한 농어촌공사의 허술하기 짝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품 등록 및 투자 결정 과정 세세히 지적
- 핵심 주범의 검찰 진술에서 NH투자증권이 로비를 받았다는 내용 등 제시
-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으로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 주장

늑장 수급대책으로 썩은 배추·무 방출하고 가격상승 방지 못해

- 金배추, 金무로 불릴 정도로 올해 하반기 배추, 무 가격이 평년 대비 2배로 상승
- 매년 반복된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처해 집중호우기에 수매하여 비축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방지 실패
- 심지어 시장·김치공장에 물먹어 썩고 무른 배추·무 방출하여 국민 건강 위협 지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한다는데, 부산 앞바다에 버젓히 방류되고 있는 일본 해수

- 현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기 일보직전인 상황
- 이 와중에 일본 활어차가 국내를 활보하며 부산 앞바다에 일본 해수를 무단 방류중
- 정부와 공공기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임을 지적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의원 **정운천** /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홀대

주요 내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상생기금 목표액 대비 실적 저조(목표액 대비 조성액은 26.2%, 민간기업 출연액은 16.7%)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및 기금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기금 운영본부 독립 설치 등 기금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없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지적

- 문재인 정부 들어 40세 청년농업인 2,400농가 감소 (2017년 9,200농가 → 2019년 6,800농가)
- 청년농업인 관련 부실한 정부정책을 지적, 한농대 정원 증원,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후속대책 마련 및 농어촌뉴타운정책 재추진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안 제시

마사회 경마 배팅은 중단되었으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불법사설경마

- 코로나19로 인해 마권발매가 중단된 기간, 일본 경마 등 해외경마정보를 활용하는 불법사설경마 폐쇄건수 증가(2017년 1,282건 → 2020년 3,176건)
- 합법고객의 불법사설경마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마권발매 제시

세계 최초 e-Navgation,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용두사미

- LTE망 구축 관련 행안부·국토부 간 협의 지연으로 단말기 보급사업 지체
- 1,118억 투입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단말기 보급 선박은 전체 선박의 20%
- 3톤 미만 어선 부착 불가

해양환경공단, 해경이 만들어 낸 잔존유 확인 및 제거 작업 속 사건사고

- 입찰시 허위 제출한 선박이 아닌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개조선박을 투입해 잔존유 확인작업 진행하고, 작업 중 기름 유출과 인명사고가 발생
- 선정 업체의 입찰서류 위조, 잘못된 서류제출 등 입찰과정부터 문제투성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의원 **정점식** /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의혹을 파헤치고, 도서지역 교통, 굴패각 문제 등 주민들의 오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실패를 지적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 위한 지원 촉구!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어가·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총체적 농정실패 지적
- 정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것을 촉구

해경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월북으로 결론을 정해놓은 채 기획 수사를 벌인 해경을 규탄
- 월북이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공개한 점을 지적하며 해경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

옵티머스 펀드의 외압 의혹 검증!

-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으로 수많은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옵티머스 펀드의 외압 의혹에 대한 사건경위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헤침.

소외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 개선에 앞장서!

- 전국 465개의 유인도서 중 교통편이 없는 도서지역이 73개소(주민 약 1,800명)에 달하며 소외도서지역 주민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비싼 배삯을 지불하며 낚싯배를 이용해 육지를 오갈 수밖에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해수부장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편인 배편이 끊겨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남해안 굴 양식어민 최대 골칫거리 '굴 패각' 문제 실마리 마련!

- 정점식 의원은 굴 패각 비료화 및 해양배출해역을 남해에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적했고 해수부장관은 조속 진행하겠다고 밝힘.
-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친위생적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의원 **홍문표** /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국가 기본책무 외면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문재인 정부의 농어민, 농어촌 홀대 심각
  역대 정부들어 농업 예산 비중 2.9%로 최하위
- 구제역 백신개발 10년째 허송세월 전량 해외수입 의존
  특히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전파 가능성에도 대응책 전무
- 북한 거부에도 쌀 포대 제작, 운송계약 연장한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9차례 2조 6천억 양특회계에서 불법 전용
-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효과에도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국가 시설 파괴 행위'
  보 해체에 1,752억 들어가, 농식품부 차원 보 해체 반대 해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

- 구멍 뚫린 해상경계, 무능한 정보력, 북한 눈치가 빗어낸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아무도 책임 안져
  군 당국 정보독점으로 해수부·해경 3일간 엉뚱한 곳 수색
- 문재인 정부, 中 눈치보기 급급해 해상공권력 실종
  최근 3년간 불법조업 112% 급증에도 여당의원 수치 왜곡 발표
  3년간 담보금 601억, 전액 국고 귀속, 어민에게 사용 해야
- 천혜의 해양생태환경에도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갈수록 하락
  국내 어가·어민, 연근해 생산량 지속 감소세

산림청

- 대한민국 산림면적 64%, 목재 수출 증가 위한 경제림 육성해야
- 소나무에이즈 '재선충병' 국내 친환경 백신기술 개발 절실
- 민족의 상징 나라꽃 무궁화 홀대 심각, 관련 부서 2곳, 인력 4명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이철규**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폐해

주요 내용

조작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 2018년 6월, 월성1호기 폐쇄결정 이후 정부와 한수원은 줄 곳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를 결정했다고 답변
- 감사원 감사 결과발표가 다가오자 경제성 문제가 아닌 지역수용성과 안전성 문제로 말바꾼 장관과 사장. 하지만, 월성1호기 폐쇄결정 당시 이사회 회의록엔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며, 폐쇄시 지역반발 예상된다고 보고
-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훼손한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결정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원천무효이며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검찰조사 필요

월성1호기 폐쇄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경제성 보고서'의 조건을 그대로 대입한 2019년 SMP(계통한계가격)변동과 전력구매비용 변동을 산출한 결과, 월성1호기가 가동됐다면 SMP는 0.43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옴.
- SMP가 낮아짐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매비용도 낮아져, 지난해 월성1호기를 가동했다면 연간 2,892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
- 당초 계획대로 월성1호기가 4.4년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약 1조 3천억원의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음.

세금으로 메꿔준 한전의 적자

- 2019년 4월, 정부는 세율조정을 통해 kg당 84.242원이던 LNG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15.8원으로 68.442원 인하
- 세율인하로 인해 1년 동안 한전은 7,111억원의 전력구입비용을 절감
- 한전의 적자를 면해주기 위한 '맞춤형 세율인하'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인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조작, 세금으로 한전의 적자를 본전해 준 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구자근** /

산지태양광 시설의 안전성 문제 및 대책 마련 촉구

주요 내용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문제

- 전국의 산사태 위험지역 중 위험등급 1·2등급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922개소에 달하는 것을 밝혀냄.
-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산사태 위험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산사태 고위험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장마철 산사태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실태조사와 안전 강화 조치를 주문함.

경사도 허가기준 초과 태양광시설 절반 넘어

- 산림청은 태양광패널 설치 시설에 대해 환경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 2018년 12월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태양광시설 중 절반(48.6%)이 경사도 허가기준을 초과해 설치되어 있음을 밝혀냄.
- 비탈면안정시설 관리 점검 결과 옹벽 255건 중에서 208건(81%)만 관리가 양호했으며, 나머지 47건(19%)는 균열, 일부 붕괴, 침하, 토사유실 등으로 나타남. 또한 돌쌓기는 421건 중에서 39건(9.3%)이, 부수시설도 848건 중에서 93건(11%)이 관리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고 해당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대책마련을 촉구함.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제도의 불합리성 지적

-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에서는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감점하고 있음.
- 주민 안전성과 미관, 생활평의성 등을 감안하여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책을 촉구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권명호** /

애꿎은 국민들만 고통 받는 現정부의 에너지정책과 홍보에만 치중하는 중기부에 일침을 가하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대통령 말한마디에 졸속으로 조기폐쇄된 월성1호기 지적

- 산업부 직원들의 월성1호기 자료삭제 등 증거 인멸과 꼬리자르기식 행태, 청와대 등 윗선 지시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냄.
- 경제성 평가가 정부에 의해 낮게 평가되는 것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한수원 사장에 대해 사퇴 촉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없고 장관 홍보에만 치중한 중기부의 착한 선결제 캠페인 지적

- 착한 선결제 4월 한달 7,662만원 결제한 게 전부인 중기부, 장관 홍보에는 1억 4,453만원 지출, 방송광고 13회 중 11회를 회당 천만원에 달하는 SA급
- 홍보에 열을 올렸음에도 많은 기관들이 캠페인 인지 못하는 점, 산하기관보다도 결제금액이 적은 점, 실적관리하지 않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

정부의 탈원전 등으로 재무상태 안 좋은 한전, 한수원과 5개 발전사의 신재생 투자금이 향후 10년간 35조원에 달하는 점 최초로 밝힘.

- 한수원과 5대 발전사가 건설할 설비용량은 1000㎿짜리 원전 35기와 맞먹고, 투자비용도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에 27조200억원에 버금갈 정도로 어마한 것이며, 한전도 신재생발전소용 송전선로 건설 등 계통연계에 8조2천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지적
-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일부 이사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의 비현실성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점을 지적

중소기업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 실날하게 지적하고 대안제시

- 수 십억원을 들여 신제품인증을 받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비율 지키지 않는 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안 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자료집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 검토해 개선방안 촉구
- 어려운 조선업 협력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촉구, 실제 국감기간 중 간담회로 이어져 의견청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김정재** /

안일한 문제 의식과 부족한 전문성으로 만들어진 무능한 정책으로 낭비된 예산 집중 질타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실한 정책 및 대응으로 국민 피해 키워

- 국내산업을 지탱해온 철강, 이제는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으로 전락 위기
- '월드클래스 300' 사업 참여기업 절반 이상이 매출, 고용, 수출 감소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 브랜드K, 매출액 급감 등 성과 미흡에도 외연의 확장에만 매달려
- 계획에 없던 '크리스마스마켓' 사업 등 졸속추진으로 예산 낭비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의 조직적 탈원전 계획으로 피해는 국민에게로

- 경제성 조작, 기관 압박 등 위법과 반칙으로 점철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 탈원전, 환경비용 증가 등으로 한전 부담 증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한국가스공사 등 방만한 운영으로 피해 및 문제 발생

- 한국가스공사, 국민 혈세 130억 날려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
-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지시사항을 부서별 직무 1순위로 변경

공영홈쇼핑 등 말로만 소상공인 지원 외쳐

- 아임쇼핑 정책매장, 3곳 중 2곳 폐업. 연매출액 0원인 제품도 수두룩
- 공영홈쇼핑, 소상공인 제품 40개 지원하면서 입점비, 수수료까지 다 챙겨

특허청의 본연의 임무를 잊은 듯한 기관 운영

- 연차등록료로 최근 5년간 1조 2,113억원 수수료 수익, 재산권 침해 소지
- 금융기관 신뢰받지 못하는 IP 가치평가, 제도 개선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양금희** /

파급효과와 사후관리에 뒷전인 정부의 정책 운용

주요 내용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지적 및 신한울 3·4호기 재개 촉구

- 조작된 경제성 평가로 시작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문제점 지적
- 원전 관련 기업 매출액 감소와 인력 이탈로 인한 산업생태계 붕괴 지적
- 수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 에너지원별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 촉구

보급에만 치우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

- 허가대비 사업 개시 실적 저조, 허가 후 생태등급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비용 지적
- 파손된 태양광 폐모듈 처리 시스템 부재로 수년째 방치된 실태 지적
- 국내 기술력과 정부 보급확대 계획이 동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점검
- 신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인한 계통 대기물량과 계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지적

스마트공장 구축 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균형 발전 기반 마련 필요

- 도입기업은 ▲주요 인력에 대한 교육 부재, ▲사후관리 부족, ▲기존 설비(하드웨어) 기준의 지원 부족 등에 고충이 있음을 지적
-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초기 시 하드웨어 수준 점검 등 사업환경을 점검하고 적절한 컨설팅 지원 필요
- 공급기업·도입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 인식을 통한 정보와 교육 지원 필요

중기부, '중국산 제로페이 QR리더기' 36,200대 보급, 국내 제조업 경쟁력 증진 위해 R&D 지원 확대 필요

- 중기부가 제시한 납품 단가는 국내기업이 맞출 수 없는 금액임을 지적
- 중기부는 R&D 지원을 통한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등 국내 중소기업 지원 및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수입제품을 공공구매하는 경우 장관이 이를 검토하도록 절차 마련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엄태영** /

문재인 정부 실정(失政)은 공격하고, 소상공인은 보호하고

주요 내용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총지휘자, 문 대통령

- "언제 폐쇄하냐?" 대통령 한 마디에 경제성 평가 '짜 맞추기'
- 야밤에 444개 문서 파기로 증거인멸, '시정잡배'로 전락한 산업부
- 문재인 정부의 '왜곡, 조작, 뭉개기, 덮기'의 전형적 사례

문재인發 '태양광 쓰나미', 태양광 폐패널로 국토 오염 우려

- 태양광 폐패널 누적배출량 2040년 82만톤, 처리비용만 수천억원 소요
- 현재 재활용 가능 용량은 연간 3,600톤에 불과
- 태양광發 환경오염 우려, 태양광 속도조절 및 재활용 대책 마련 시급

2만원 치킨 팔면 6천원은 배달앱 수수료

- 코로나 지속으로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 83.9% 증가
- 음식값의 27% ~ 33%는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료 등 지출
- 소상공인 등골 빼먹는 배달앱, 상생방안 마련 촉구

한전 등 발전자회사, 故김용균씨 사망에도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 최근 5년 간 발전자회사 안전사고 625명 부상, 42명 사망
-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에도 13명 사망
- 사망자 42명 중 41명 협력업체 소속, '위험의 외주화' 대책 마련 시급

투기와 전면전 선언 문재인 정부 VS 공공기관은 자체 주택자금 대출

- 산업부 산하 15개 공기업 3년간 1,884억 직원 대출
- LTV 등 정부 규제의 안전지대, 본사 지방 소재에도 절반은 수도권 주택
-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이중대출로 불공정 자초

연간 27조원, 220만대 규모 중고차매매업의 대기업 잠식 우려

- 중고차 매매업 종사 5만여 명의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시급
-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 소상공인 보호 위해 5년 간 유예 방안도 고려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윤영석** /

문재인 정부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제성 조작

주요 내용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정부가 협의없이 중단"…산자부 "한수원 의향대로 했다"(TV조선 단독)

-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신한울3·4호기 건설도 백지화됨. 산업부가 사업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측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한수원 측에서 나왔음. 한수원은"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 없다"고 답변 하지만 산업부는"한수원의 의향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한울3·4호기가 제외됐다"고 답변. 양측의 답변이 엇갈림.

월성1호기 '경제성' 낮춘 한수원 회의문건 보니…"이용률 60%전망치 사용"(TV조선 단독Top)

- 한수원이 처음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1,700억원 이상으로 평가했는데, 변수를 조정해서 불과 며칠만에 그 수치를 200억대로 낮췄다는 것임.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정황이 드러난 문건으로, 불과 사흘만에 결론이 뒤집히는 과정임.

오래된 원전3기 수리작업 한수원, 3년간 52건 취소(조선일보 보도)

-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많이 남지 않은 원전3기(한빛1·2호기, 고리2호기)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52건의 설비 개선을 취소했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의 설비 개선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했거나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건수를 말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이주환** /

졸속으로 밀어붙인 文 정부 태양광·풍력 난개발 폐해 집중 부각 脫원전 시기상조 여론 주도!

주요 내용

(안전성 및 산림 훼손) '태양광 난개발', 전국 17개 시도 환경보호지역·생태적 민감지역에 무분별한 설치 실태 최초 공개!

- 전국 17개 시도 전수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최소 272곳 이상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 조성 실태 최초 공개, 설치면적만 최소 60만8천여평으로 축구장 281개 수준
-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지 않고 산지 보존할 경우 연간 2천703억원의 환경적 편익 발생 강조, 文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에너지 전환 정책 부작용 부각

(경제성) '묻지마 풍력사업' 날개 부러지고 경제성 반토막 나는데 53조 쏟아부어

- 文 대통령이 다녀간 서남해 2,4GW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발전기 20기 가운데 4기의 날개가 부러지는가 하면, B/C 0.5가량에 불과한 낮은 경제성 분석에도 불구하고 풍력사업에 53조원이 넘는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실태 지적
-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경제성 검토없이 정권 핵심 정책을 떠안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

(전기료 인상) 文 정부 임기 5년간 태양광·풍력 보조금 2.4배 증가, 2022년에는 3.8조원 넘길 전망…전기료 인상 불가피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文 정부 임기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엔 한 해 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
-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사실 강조

(주민 수용성) 소음, 홍수, 환경 파괴, 문화재 훼손…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민원 2,118건. 주민 반대로 무산된 公기업 사업만 1조5,869억 달해

-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2,118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공기업 사업은 1조5,869억원(8개 사업·278.5MW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신재생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민원업무를 지자체로 떠넘긴 채 부처 차원의 관리를 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최승재** /

골목상권 죽이는 식자재 마트, 강원랜드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기보의 임차주택 불법이중계약, 소상공인 실태조사 최저임금 항목 삭제

주요 내용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죽이는 식자재 마트 규제 필요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는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망을 피한 식자재 마트가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김.
- 식자재 마트는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있고, 납품업체에게 횡포수준의 행위로 인해 유통업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식자재마트의 무분별한 출점과 영업시간을 대형마트에 준한 규제 필요성 제기

강원랜드 마스크 30만장 수의계약 통해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 강원랜드는 지난 2월 마스크 30만장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함. 그런데 구매 업체는 태양광 패널 사업자이며 현재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음.
- 식약처 인증도 없고 부실한 포장 등 문제점 투성이인데도 강원랜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내부감사도 중단시킴.
- 강원랜드가 마스크 30만장을 구매하는 것으로 꾸며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임차주택에 대해 관행적으로 불법 이중계약해온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은 임차주택 50여 곳 가운데 40곳이 이중계약서를 작성
- 시세와 계약금액이 1억이상 10곳, 5천만원 이상 22곳이 차이가 남. 그럼에도 담당자들은 말 바꾸기로 조직적 은폐, 묵인하는 등 도덕불감증 심각
- 중기부 산하기관의 전수조사와 규정 위반자 처벌 및 제도개선 촉구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 묻는 조사항목 삭제

-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의 실태 및 현황파악, 정책의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2019년 공식조사로 확정되면서 '조사항목에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항목' 등이 삭제됨.
-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조사는 상공인의 실태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임. 정부의 정책실패를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한무경** /

환경 훼손, 통계조작 중에도 내 편 챙기는 文 정권!

주요 내용

국민혈세로 조성한 인공조림지에 풍력발전하라는 文 정권

- 인공조림지는 현행법상 육상풍력 설치가 불가능하나,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화해야 하는 산업부, 문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민주당,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확인해야 하는 BH가 합심하여, 산림청을 압박하여 규제를 개선
- 2019.12.16. 산림청,「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해당 규제개선으로 혜택을 보는 풍력사업은 약 20개로 추정(산업부)되며, 이중 육백산 풍력도 포함. 육백산 풍력 사업자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함께 활동하는 에너지전환포럼의 허화도 대표임.
- 인공조림지 규제완화 과정에서 의사결정 절차, 정부 여당의 압박, 청와대의 동의, 그로 인한 사업자 특혜 등 전반에 대한 의혹 제기

산업부가 주장하는 태양광 패널 국산 점유율 78.4%, 통계조작에 불과!

-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 산업부는 국산 태양광 '모듈'의 점유율이 78%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수입된 '셀'을 국내에서 조립한 것에 불과한데 국산으로 둔갑해 있어 이는 통계조작에 불과
-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태양전지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은 무조건 국내산으로 인증하고 있었음. 다시 말해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포장만 하면 국산으로 인증해주고 있는 것임.
- 태양전지(셀)의 해외 수입 양과 금액 모두 급증, 2017년 1억 2000만달러 → 2019년 3억 8,658만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여 무려 3.3GW에 달하고 있음.이에 태양광 모듈 원산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브랜드K 런칭부터 실적까지 엉망진창 졸속 사업

- 대통령 동남아 순방 시기에 맞춰 중기부는 중소기업 공공브랜드사업의 일환인 브랜드K의 태국 런칭 행사 실시하였고 무리하게 K-POP쇼를 추진하여 탁현민 의전비서관 측근 기업과의 수의 계약을 진행, 특혜제공 의혹 제기함.
- 공공브랜드사업 예산 3.7억원이나 행사규모는 10억원 육박, 부족분 타 사업에서 각출하여 대금 지급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
- 브랜드K 1기 제품 39개 중 29개는 선정 후 해외 매출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선정기준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였음. 로고 역시 미완성 상태로 런칭행사를 치루는 등 전반의 졸속추진 문제 지적함.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2020
국정감사
백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의원 **강기윤** /

코로나 위기 보건안전 대책 강구

주요 내용

독감 백신 상온 노출

- 정부는 신성약품 납품 백신 접종자는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조사결과 2,303명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질병청이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가이드라인 수립하였음에도 조사해보니 신성약품에 전달하지 않았음.
- 이에 우리나라도 호주, 대만, 영국처럼 해외 사례 적극 참조하여 정부가 백신을 직접 각 병원에 배송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함.

코로나 항원항체키트 정확도 검증 및 기술개발 R&D 조속히 추진해 연내 정식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 다른 나라 키트의 정확도가 80%대에 머무는데 반해, 우리나라 키트는 민감도 97%, 특이도 100%의 기록으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음.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신속키트의 정확성을 인정하고 승인해줬지만, 우리정부는 코로나 초기 때 개발된 정확도가 낮은 키트를 두고 PCR보다 안 좋다고 하면서 국내 승인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 이번에 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업체들이 제조한 신속키트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동시에 기술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단기 연구과제 사업을 바로 추진해야 함.

독감 백신 사망 사고 관련

-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백신을 만들 때는 청정란 생산량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물량이 부족할 수 있고 청정란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이 또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 균이나 톡신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아예 면역반응(중화반응, 이 과정 쇼크 발생)을 일으켜버리면 검출이 어렵게 되고, 혈액검사 등을 포함한 검사에서도 사인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움.
- 그런데 사망자들에게 접종했던 주사기에 남아있는 백신 내 용액의 톡신이나 균을 검사해보면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음.
- 또한, 출하승인 검사가 전수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 일부 균이 있거나 일부 톡신이 존재하는 백신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식약처의 백신 안정성, 유효성 검사 체계에 TQC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제의 독감 백신을 전량 폐기해야 함.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의원 **김미애**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사회 안전시스템 재정비 필요

주요 내용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한 정책적 배려 절실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방임 형태의 학대 인식 개선 필요
- 무분별한 ADHD 과다처방의 폐해 지적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삼고, 법적 근거도 없는 공적결연위원회의 연구용역 질타
- 입양특례법에서의 '출생등록 의무화' 재검토 및 비밀출산제 법제화 검토 필요

정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코로나방역, 독감백신 관리의 총체적 실패

- 헌법 정신에 반하는 과도한 집회의 자유 제한 및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일관성 없는 방역
- 4차례 유찰, 상온노출, 백색입자, 접종 후 다수 사망자 발생 등 독감백신 관리 총체적 실패
- 국민불안 해소 위한 실질적인 조치 미흡, 사망자 발생 백신(동일제조번호) 전수조사 필요

사회적 갈등 초래한 밀어붙이기식 공공의료정책

-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미정립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치적 의료정책
- 공공전문진료센터, 공중보건장학제도, 권력외상센터, 감염병전문병원 등 기시행되는 공공의료정책 내실화가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기업옥죄기, 지속 불가능한 문재인 케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 스튜어드십 코드 명분으로 국민연금의 기업옥죄기 노골화
-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실현 불가능한 정책 목표, 현실은 비급여항목 매년 증가
- 건강보험료 인상률 전 정권 비교 약 3배 증가, 정부 지원율은 오히려 감소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약 75% 불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검진 확대 및 충분한 의료상담, 검진수가 현실화 등 개선방안 통해 수검률 제고 필요
- 의료분야에서의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산업 안착을 위해 법개정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의원 **백종헌** /

文 정부, 국민건강·생활안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주요 내용

文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 허점 지적

- 코로나 확진자 중 10.66%가 취약계층… 일반인구 대비 약 3배 많아
- 위조문서에 뚫릴 뻔한 K방역… 방역당국 쉬쉬하다 뒤늦게 후속 조치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 코로나19로 전년대비 122% 대폭 증가
- '코로나19 심리상담 51만' 우울증 건강검진 겨우 14.4%, 부실한 복지부 대책…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코로나 블루(우울) 한시적 질병코드 도입시급

文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北에 쌀 지원하겠다며 10억 받아놓고 감감 무소식 민화협… 보관료·인건비로만 5000만원 지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눈먼 돈만 계속… 저출산 예산 2년간 63조 4,000억원, 합계 출산율은 0.918%

보건의료와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점검

- 식약처, '3상 조건부 허가제도' 생산실적 없는 의약품 허가로 인해 주식시장에 악용되고 있음.
- 식약처, 허가 시 조작 및 허위제출에 대해 적발 건수 "0"… 식약처의 엉망진창인 허가 시스템문제 대책 마련해야
- 보건복지부, 의료 뒷광고 관리 허술, 의료광고 전담 모니터링 조직 설치 필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허술한 정책 개선요구

- 심평원,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심평원 책임회피로 환자 10명 중 3명 과다징수 피해
- 대한적십자사,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지난 5년간 145건… 혈액제제 제조 후 무방비 유통
- 건보공단,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 성행, 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최근 5년간 2만 1,432건, 부당청구액 307억원에 달해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의원 **서정숙** /

K방역으로 과대포장된 文 정부 보건정책의 허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주요 내용

코로나19 국내 재확산, 특정집단이 아닌 정부가 자초한 사태

- 중국 눈치보기 늑장대응으로 인한 초기 방역조치 실패와 무책임하고 오락가락하는 대증요법적 방역정책으로 2월 대구·경북 대규모 감염사태 발생을 자초했음을 지적
- 이태원클럽발 감염 발생와 8월 수도권 대규모 감염사태 발생 직전에는 언제나 거리두기 완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해제, 문화관광분야 소비촉진정책 등 정부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방심으로 인하여 무책임하고 잘못된 시그널이 계속되었음을 지적

구멍난 전문의약품 관리 체계로 위협받는 국민건강!
– 온라인 상에서 불법거래되는 스테로이드제와 에페드린염산염

- 인터넷 불법판매자와 거래해 이틀만에 배달된 에페드린, 생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국내제약사 생산품이었음을 확인, 전문의약품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음을 질타
- 밀수된 해외산 스테로이드 주사제들도 함께 불법유통 중임을 확인, 부실한 관리단속 문제 지적

허점투성이 한의약 정책, 국민건강 위협한다

- 일부 원외탕전실이 조제 아닌 제조 형태로 약침을 대량생산하는 정황 포착, 이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
- 에페드린 등 위험성분 포함된 다이어트 한약이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음을 지적, 위험성분 포함된 한약의 1회 처방량 줄이고, 관리감독 강화할 것을 촉구
- 안구에 직접 투여하는 안약이 식약처 관리체계 밖인 한방에서 안전성 검사 절차도 없이 조제되고 있음을 지적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의원 **이종성** /

문재인 정부, 국민에겐 거짓말 친문세력은 배 불리기

주요 내용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불편한 진실(보건복지부)

- 문케어에 6조 8천억원이 투입됐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1.1% 상승에 불과, 국민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 보장률은 오히려 하락, 풍선효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데 재정고갈만 앞당기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부담만 가중
- 3,601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 했지만 실적은 584개(15.8%)로 낙제점
- 표 되는 질환의 급여 확대에만 치중해 정작 중증암환자, 희귀질환자 치료는 방치,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

소중한 국민노후 자금으로 정권 '돈 줄' 역할에만 몰두(국민연금공단)

- 문재인의 그린뉴딜 발표 직전에 재무상황, 실적이 불량해 연금투자 대상이 될 수 없는 유니슨(풍력발전 중소기업)에 500억원의 국민연금 투자가 집행됨.
- 대표 허화도는 친정권 인사(부산상고卒, 前썬앤문 이사(문병욱-이광재 불법정치자금 사건))로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에 있어 정권의 부정특혜 제공이 의심됨.
- 연금공단은 블라인드 펀드를 이유로 비정상적인 투자과정을 모르쇠로 일관
- 유니슨 연금투자에 정권의 부정 특혜, 비리게이트 여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의 실체와 한계(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부분이 민간과 차별 없는 동일한 서비스 제공
- '답정너', '성과 뻥튀기' 등 부실 성과평가 연구용역에 국민 혈세 낭비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견인한다더니 대부분 계약직 채용
- 임원은 지자체장 측근, 정권 관련 인사 임명. 서비스 종사자는 민노총화
- 서비스원 고용 인력,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숫자 늘리기 꼼수로 활용

문 대통령 2018년 청와대 장애인 간담회는 정치쇼에 불과(보건복지부)

- 문재인, '집에 있는 발달장애인 비율, 획기적으로 낮추겠다(26%→2%)' 약속
- 하지만 2년 동안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혀 없으며, 추진 사업(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역시 대상에 비해 수혜자는 매우 낮은 실정
- 특히 뚜렷한 대책 없이 추진한 '탈시설 정책'으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만 확대, 결국 시설 이용 못해 극단적 선택한 장애인과 가족들만 늘어남.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의원 **전봉민** /

독감백신 담합의혹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문제제기

주요 내용

독감백신 담합 의혹 및 입찰과정 공정성 관련

- 독감 백신 유통업체 8곳, 입찰과정에서 백원 단위까지 똑같은 금액 제시 같은 주소지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 등 담합 의혹 곳곳에서 확인됨.
- 거듭된 유찰로 법정 기준일 미만인 3일 만에 서류 심사하는 등 독감백신 입찰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절차상 문제가 확인됨.
- 관련 규칙에 따라, 독감백신 스티로폼 박스로 운반되어야 하나, 사양서에 따르면 포장 방법 간소화시켜 유통 편의 제공하는 등 질병관리청 비롯한 정부에 독감백신 사태에 대한 책임 물어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련

- 제4차 국민연금 개혁안, 재정목표 및 기금운용 장기 목표수익률 미설정, 정부 추계결과에 대한 신뢰성 담보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 확인돼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으로 건강보험 경감하고 법정지원금 지키지 않으면서 건보료는 최근 10년 평균인상률 보다 높은 2.9% 인상해 국민부담 가중시켜
- 문케어 확대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확대 의약품의 등재율 급감하는 등 중증질환 환자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허술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시 이후에도,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 및 불법사용 사례 지속돼
- 식약처, 시스템 실시만 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기준 13%만 마련 가입 의무자의 가입률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부실해
- 의약품 부작용 최근 5년간 33%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민 87.5%가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모를 정도로 인지도 낮아 부작용 피해구제 위해 조성된 178억원 방치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의원 **주호영**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촉구와 보건의료 예산 낭비 실태 지적

주요 내용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대구경북지역 설립 필요성 공감 도출

- 호남권,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부산이 선정되었으나, 영남권은 인구수가 1,280만명으로 호남권 500만명, 충청권 550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므로 감염병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별개로 대구경북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
-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추가지정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대책 수립하겠다고 답변 → 현재 2021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편성 논의 중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사업화 실적 부실과 예산낭비 우려 지적

- 보건산업진흥원의 R&D는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1조 9,258억원을 보건의료기술 R&D사업에 투자하였으나, 1,423건의 종료과제 중 사업화된 건수는 204건으로 6.6%에 불과
- 또한 2015년 이후 연구중단된 과제 25개에 426억 지원 후 20%인 88억원만 회수하는 등 R&D 관리가 느슨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제도 마련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설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3개당 1개 업소 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세종시의 경우 한 곳도 없는 실태를 지적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의원 **임이자** /

깊고 예리한 정책 질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다

주요 내용

무용지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KBS보도)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은 기술지도 시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허위 결과보고서를 K2B(전산시스템)에 올려 이득을 취하고 있었음.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요소수 관리부실로 소비자 피해 가중 우려 (KBS보도)

-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필수인 요소수. 무작위 10개 제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성분분석 의뢰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
- 부적합 요소수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 확대 및 사후관리 철저 촉구

담합 저지른 불법업체의 쌍둥이업체와 계약한 기상청 (SBS보도)

-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 유지관리용역을 특정업체 A와 수의계약했으나, A업체는 2016.12~2020.12까지 입찰참여가 제한된 부정당 업체
- 2020년 새로운 업체 B사가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했지만, 부정당업체 A사와 B사 양사에 겸직자가 다수(약70%) 존재.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기상청 드론 입찰 비행고도 2.5km→1km로 낮추고 사업 표류 (SBS보도)

- 2019 추경 예산을 통해 도입 약속한 기상드론, 하지만 현재까지 도입 난항
- 기상청은 고도 2.5km 스펙을 1km로 낮추는 등 오락가락 규격변경으로 논란을 자초했음.

환경부 인증받은 차량용 방향제, 발암물질 기준 4배 초과 (SBS보도)

- 차량용 방향제 무작위 30개 구매 후 성분검사 의뢰. 이 중 무허가 제품은 6개, 1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기준 4배 초과 제품 1개 발생
- 철저한 안전 인증 관리와 제품 생산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의원 **김성원** /

(청정 환경! 공정 노동!)
생태계 파괴 미세 플라스틱 담배필터 친환경 필터로 둔갑해 판매!

주요 내용

(환경부) 미세플라스틱 주범 담배꽁초, 국민건강 손놓은 환경부!

- 담배꽁초 속 필터에 들어있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물질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음.
- 미국환경보호청(EPA)실험에서 물 1L에 담배꽁초 하나를 96시간 담가놓은 물속에 생선을 넣은 결과 반이상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진국은 사태의 심각성 인지, 담배필터를 생분해성 재료로 교체하는 방안 추진 중임.
- 담배제조업체는 대체재 연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대체 물질이 없다면서, 폐기물부담금 납부한다는 등 환경파괴를 돈으로 떼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인체의 해로운 담배꽁초 문제에 폐기물부담금으로 책임을 면피하는 담배제조업체의 환경부 관리·감독 부실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함.

(고용노동부) 불공정 화신으로 전락시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인사파동은 공정한 경쟁을 원했던 청년 지원자들은 신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갈 곳을 잃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청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등 또다른 불공정을 촉발함.
- 보안요원의 직고용이 경비업법상 난항을 겪자, 청와대가 주도한 회의에서 청원경찰제 도입이 결정됨.
- 청원경찰제도는 문제가 많아 1998년 정부에서도 폐지 수순 밟음. 그런데 노·사·전 합의도 아니고 당사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제외한 청와대 주도 회의에서 청원경찰제 도입이 결정된 것임.
-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변경하면 경찰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통제권한이 강해지고, 현재 국토교통부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지휘체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함.
-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부정하고 청와대와 함께 청원경찰 도입에 앞장선 고용노동부 행태 지적.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의원 **김 웅** /

환경부와 수공(水公)으로부터 수공(水攻)당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당해고사태, 근로자 해고로 이룬 비정규직 제로쇼!

주요 내용

용담댐 수공, 실수가 아닌 의도된 인재?!

- 코스핌 모형 예측 실패가 용담댐 수해 피해 증대시켜
- 피해주민은 철저히 배제하고 친 정부 인사로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근로자 해고로 이룬 비정규직 제로쇼. 고용안정 외면한 총체적 정책난맥상 지적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해고 사태(소방대·야생동물통제) 및 해고 위협(보안검색 1,902명) 유발한 밀어붙이기식 '직고용' 추진의 졸속성 지적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외압 여부 추궁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보험금 지급은 3%, 2천8백억 수익은 민간보험사가…

- 초대 단장 관피아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 화학물질별 계약 말고 사업장별 계약토록 해 공공성 확보해야

KBS 사내 일상화·만연화된 부당노동행위 및 사내 인사차별 실태 공개!

- KBS 인사담당자가 특정 노조원을 상대로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사 불이익 (하위 5% 평가)를 하였다는 정황(녹취) 공개, 뉴스진행자·보직자 특정노조 인사 차별 실태 지적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률 61%, 208개 오리무중…

- 돈벌이 되는 중간업체('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자처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 산업화 센터'와 중복 우려

기상청, 코로나19로 고층기상정보 급감에도 데이터 확보 노력 태만

- 항공관제업무의 안정성 및 정시성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상정보 활용해 국민 재해 예방률 높여야

'플랫폼 특고' 배달노동자 등 산재 적용 확대 위한 방안 마련 촉구 및 대안 제시

- 산재적용제외신청·보험료 전가 만연 등 열악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실태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의원 **박대수** /

인국공 정규직화 사태, 산단 폐기물 축소 등 전방위적 감사

주요 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집단부당해고, 불공정채용을 권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
- 또한 절차상 하자, 비위, 위법 그리고 청와대의 불법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는 고용노동부의 실효성 없는 시스템이 만든 인재

-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의 발주사와 시공사를 증인신문하여 안전공단이 화재사고 경고를 6차례나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을 밝혀 냄.
-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현장 중심의 계획서로 개선하는 등 이천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

예산 5조 4천억원 투입에도 성과 없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중단해야

- 2018~2019년 2년간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원받은 사업체와 지원받지 않은 사업체 간의 성과분석 없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 한시적 사업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

산단 폐기물 발생량 축소 산정으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 만연

- 산단 조성 시, 매립장 설치에 따른 민원 등으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와 짜고 임의로 폐기물 발생량을 축소 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있음.
-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산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체매립장을 선정하거나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하도록 촉구

춘천 의암호 보트 전복 사고, 환경부도 책임 있어

- 의암호 인공수초섬은 한강수계기금 1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한강유역청의 공모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검토가 대단히 미흡했음.
- 현 춘천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한강청이 동원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공모 선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

국립공원, 묫자리로는 최고의 명당? 공원 내 불법 묘지 문제 지적

- 국립공원공단은 무덤 기수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심야 밀장 도주에 속수 무책인 상황임에도 '이장 명령' 등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없음.
- 2007년부터 적발해낸 불법 묘지 설치만 43건, 원상회복 시킨 건 단 7건, 적발해도 벌금 100만원이 전부인데, 이장을 강제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 강조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의원 **홍석준** /

성과없는 고용정책과 안일한 홍수 관리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주요 내용

올 여름 홍수피해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오판에 따른 인재(人災)

-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2015년에 약 2,400억원을 들어 191.5m에서 196.5m로 높인 보조여수로를 올여름 폭우 시 정상 작동시키지 않았음.
- 또한 영산강 홍수 통제소가 기상예보, 댐수위, 선행강우, 하류하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섬진강댐 수문 방류를 7월 23일부터 5번이나 승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초당 50㎥~300㎥만 방류함.
- 그러다 8일 새벽부터 초당 1,868㎥씩 갑작스럽게 대량 방류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마련 적극 대응 촉구

- 낙동강은 대구, 부산 등 1,300만명의 주요 식수원임에도 한강 등 다른 강에 비해 강우량이 적어 수량이 부족. 그러나 상수원 지역의 70% 이상의 주민은 낙동강물에만 의존해야해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은 대구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정부의 중요 정책 목표였음.
- 환경부 수계기금의 활용 등을 통해 구미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중인 용역안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내실있는 직업훈련사업 운영 및 대구지역 재취업률 제고 촉구

- 금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해 ▲내용 부실 ▲성과 저조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부실 운영 등 혹평이 잇따름.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역시 2016년 31.1% → 2019년 25.8%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대구청의 경우 다른 지방청에 비해 현저히 재취업률이 낮음.
- 정부는 단순히 경기 침체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재취업률이 저조한 지역의 취업 지원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현장 목소리와 어긋난 정부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일방적 도입

-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76.7%에 달하는 인원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일괄 의무가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63%가 반대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의 감소를 꼽음.
-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영업력이 약한 사업체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 정부의 일방적인 접근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현실감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 **이헌승** /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낙하산 인사 횡행, 부동산 등 주요정책은 실패!!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대표·주요 임원 낙하산 인사 독식!!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13곳 중 10곳의 대표이사가 문재인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출신) 인사임. 이들은 최대 1억 7천만원 등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현재 맡은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없음.
-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역시 241명 중 40%가 대선 캠프 출신 또는 여당 관련 인사로 확인
- 국토교통부에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자회사 대표의 채용 절차 및 운영상 문제점 전수 조사 및 제도 개선책 마련 촉구

盧·文정부 때 강남아파트 14억 올라, 원인은 반복되는 부동산 규제정책!!

- 문재인 정부의 반복되는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 강남 20억·비강남 10억 시대가 도래
- 특히 역대 정권별로 비교하면 강남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14억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4억 오른 것으로 분석
- 또한 문재인 정부 4년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그래프를 보면,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실제로 비공개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소비자 심리지수를 분석한 결과, 규제 발표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끼쳐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됨.

코레일 철도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코레일 철도물류사업이 코레일 설립 이후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나타냄.
- 코레일이 화차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손잡이와 발받침을 부실 제작하여, 대량 이탈사고 발생으로 화차 177량이 운행 중단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남.
- 경영악화와 운영미숙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닌 철도물류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 **김상훈** /

내 편 챙기는데 바쁜 문재인 정부

주요 내용

文정부의 끊임없는 낙하산인사와 계속되는 내 편 챙기기

-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관련 경력이 전무한 현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이력서 단 한 장으로 선임된 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 불투명한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
- 다른 항공사들과는 달리 親與국회의원이 경영한 항공사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과징금 감경이 이뤄져 왔음을 지적, 이 과정에 국토부의 관여가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
- 특정 공공기관이 코로나 성금과 기부금을 모아 친여 단체 및 친여 국회의원 지역구 소재에 몰아주기 한 것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
-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의 비상임이사, 국토정보공사의 상임감사,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대표이사·임원 등 올해도 국토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대거 포진됐음을 지적. 특히 총선 기간 선거운동에 준하는 활동을 한 자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을 주문

'촛불청구서'를 갚기 위해 민주노총에 힘을 싣는 文정부

- 깊어지는 노노갈등 속에서 민노총의 권한을 높이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도로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와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까지 보장해 주는 단협을 체결한 코레일, 노동이사제를 만들어 민노총 자리를 챙겨주고 세금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대신 홍보해 준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

안일하고 부실한 업무추진의 피해는 국민 몫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빌라의 경우 공시가의 150%까지 대출이 가능해 보증·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곧 갭투자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나 공사는 사후 조치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규모 전세보증사고를 방지할 사전적 대비책 마련을 촉구
- 건설관리공사의 옵티머스 투자가 부실한 규정 속에서 이뤄질 수 있었음을 지적, 공적 자금 활용이 철저한 관리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 **김은혜** /

국민 피눈물 나게 해도 부끄러움 모르는 문재인 정부,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등 돌린 부동산 민심 부각

- 현 정부의 무리한 임대차3법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 전달
  - 홍남기 부총리 사례(계약갱신청구권 피해사례) 적용
  - 부동산(전세 시장 등) 불안 원인이 임대차3법 추진에 따른 것임을 부각
- 3억~6억원(중산층) 주택 과세물건 재산세 비중 현 정부 들어 폭증 지적
  -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서민증세)
- '깜깜이 공시가' 유지에 혈안이 돼 있는 국토부 행태 질타
  - 공시가 개선을 위한 지자체 용역사업마저 무산시키는 국토부 행태 확인

국민 영혼 파괴 중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각종 부실행태 지적

- LH 사장이 속한 특정 학회와의 비양심적 계약행태 문제 제기
  - LH토지주택연구원 자체 연구가 완료된 상황에서 유사용역 밀어주기 정황
  -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민낯 폭로
- 도로공사, 정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 악화 지적
  - 현장지원직 근무시간 무단이탈 등에도 연간 450억 이상의 인건비 지출
- 감정원, 오락가락 공시가 산출로 납세자들 부담 가중시켜도 검증수수료로 큰 수익(5년간 천억원 이상)을 챙기고 있는 실태 지적
- 인국공,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계약연장 대신 혈세 428억 낭비 지적

지자체장(경기도, 부산시) 각종 의혹 규명

- 옵티머스가 경기도 물류단지마저 먹잇감으로 삼으려 한 정황 포착
-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산시 시장대행 '책임 회피' 질타
  - 부산시 허위보고서 및 직원 간 허위작성 논의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지적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 **김희국** /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정책 지적과 함께 합리적 대안도 제시

주요 내용

LH,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 前정부 탓으로만 떠넘기는 정부 질책

- 부동산 폭등 원인을 정책실패에서 찾지 않고 잘못된 통계를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前 정부 탓으로만 떠넘기려고 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을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질책

HUG, 공시가 산정 절차와 기준 등 공개 확대 답변 확인

-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 결정 및 발표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높고, 공시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전부 비공개여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 지적
- 국토교통부는 이 지적에 대해, 공시가 산정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함.

한국시설안전공단, 현실과 동떨어진 시설물 안전 기준

- 타워크레인, 싱크홀 등 건설사고 발생으로 제정된 시설물 안전 관련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고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을 담은 개정안 입법

HUG, (고)분양가 산정 기준 차이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보증료 삭감 요구

-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원가법', HUG는 고분양가 산정 기준을 '비교사례법'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분양가격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피해를 지적하고 대책 촉구
-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율 인하가 실제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감사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특약보증요율을 제로까지 인하할 것을 요구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조성 원가 낮추고 더 넓고 저렴하게 공급 방안 제시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임대주택' 관련 시행자의 과도한 비용 발생과 작은 방 크기, 비싼 임대료 등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 제시
- LH가 서울시에 전용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대한 권한도 지금보다 확대하며, 각종 세제도 정비해 2030이 바라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동의를 이끌어 냄.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 **박성민**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추진을 위한 국토부의 무리한 편법, 불법 추진 의혹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서산시 갯벌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한 잘못된 토지수용)

- 정부 여당이 시장경제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변조해 사유재산권을 침범한 사실을 밝혀냄.
- 국토부가 文대통령 공약,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갯벌생태계 복원 및 정비사업'을 위해 편법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제기
-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반드시 해당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갯벌생태계 복원 및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며, 강제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文 정부 1호 경제기반형 도시사업 실체)

- 문재인 정부 1호 경제기반형 도시사업 중의 하나인 경남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LH는 토지 정화비용을 230억으로 계산해 BC 1을 넘겨 사업을 진행했으나, 정화비용 재산정 결과 1,052억의 정화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 토지 매입비용인 608억보다 더 많아지고,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한국감정원(공동주택 공시가격 부당 산정 케이스 급증)

- 주민들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고 심지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 유무를 따지는데도 쓰임
-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국토부는 이 모든 것을 감정원이 단독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공시가격 산정시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 요구
- 또한 표준주택 22만 가구 + 공동주택 1,300만여호 + 390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국감정원 직원 500명에 불과하고 인원 부족, 전문성 부족 등으로 비판받는 상황에도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업무영역만 늘려가는 상황으로 인원부족의 해결, 감평사 등 업무 이관 등 협업 요구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 **송석준** /

국민 체감 중심의 현장밀착형 국감 펼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촉구

주요 내용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 밝혀내

- 부동산 폭등 : 매매시장 안정세 변명과는 동떨어진 국민 선호도 반영된 지역별 랜드마크 아파트 폭등 실태 지적
- 구도심정비, 주거복지 실적 저조 : 허울뿐인 도시재생 뉴딜 및 주거지원 상향사업의 부진한 실적 적발
- 정책 방향성 전면 수정 촉구 :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부동산 정책 강행으로 국민기만 및 집값폭탄·세금폭탄 야기 질타

각종 통계 조작 및 서민경제 파탄 실태 밝혀내

- 통계 조작용 가짜 일자리 남발 : 전 산하기관 전수조사 후 실상 공개
- 무너진 서민경제 : 지속된 경제난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요 상권 공실률 및 휴게소·역사 입점매장 매출 급감 및 폐업 실태 지적

문제 제기에 이은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초점

- 감정원 통계작성의 독립성 보장과 국민들이 선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의 필요성 역설
- 관계 기관의 공감대 이끌어 내 국토부·감정원의 체감지표 개발 착수 약속

일회성 폭로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 중심의 입법 추진

-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거복지·교통편의·고용정의·서민경제 지원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 특히 국민안전 위한 D~E등급 시설물의 즉각적인 보수·보강 가능토록 시설물안전법 개정 추진
- 이외에도 주요 민생 법안 발의 및 예산심사에 국감 성과 지속 반영 예정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 **송언석** /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식 부동산 대책 실패와 국민생활 맞춤형 정책 국정감사

주요 내용

文정부 출범 이후 감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격차 이명박 정부의 38배

-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하여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가 0.4% 포인트로 차이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112.6) 증가했지만,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증가하여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15.2% 포인트에 달함.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벌어지면서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이에 정부 통계의 표본을 검증하고 조사방식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

HUG의 고무줄 고분양가 심사

- HUG가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한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영업부서장이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하여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춘 사례가 발생
- 특히 고분양가 사업장의 로비를 받고 분양가를 올려준 사례가 적발되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고분양가 심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

구멍숭숭 뚫린 침수자동차 폐차이행 확인제

-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침수차 손실을 보전해 주는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침.
-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함. 이에 침수차 불법 유통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차량 진단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요구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 **이종배** /

국민 인식, 현실과 괴리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판

주요 내용

초법적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강행 부적절

- 동 사업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도로를 잇기 위해 단절구간인 문산에서 남측출입사무소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5,6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남북교류사업 명목으로 예타를 면제받고 졸속 추진 중
-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생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안 노선 검토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무시
- 또한 해당 고속도로 노선은 지뢰지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현황조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지뢰를 제거해야하나, 국방부와 협의한 지뢰제거 추진은 시작조차 못한 상태
- 국토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며 동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이행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

꼼수통계로 '부동산 양극화' 숨긴 국토부

- 국토부는 지난 6월, '국민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결과〉를 발표
- 그러나 〈주거실태조사 최종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文 정권 3년 동안 고소득층의 주택보유율은 대폭 늘고 중산층·저소득층 주택보유율은 줄었음. 또한 동 기간 고시원, 판잣집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비율도 크게 늘었음.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무주택 서민들과 부유층의 빈부격차가 늘어난 것. 꼼수 통계로 현실과 국민을 왜곡하는 행태를 멈추고, 정책 실패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주거수준 실상을 제대로 알릴 것을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 **정동만** /

아마추어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 정책 낙제점

주요 내용

부동산 정책실패를 비롯한 국토부의 평가는 낙제점

- 동남권 신공항, 도시재생, 인국공사태, 이스타항공 사태, 국민공감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귀결
- 특히, 23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고,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행정부 정책수행평가 순위에서 꼴찌와 다름없었음.
-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정책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송구하다" 는 답변을 이끌어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입찰 비리 의혹

-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D업체가 시험성적서 없이 안전성과 관련된 유럽의 GA SIL4 민간단체 인증만으로 '일산선 신호시스템 사업'을 참여하도록 입찰 자격을 완화해 줌.
- 특히, D업체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최근 10년 동안 신호관제사업 34건 중 25건 낙찰받았으며, 금액으로 보면 1,135억 중 93%인 1,056억원의 사업을 낙찰받은 의혹이 있음.
- 해당 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의 비상식적인 계약 진행

- 대법원에서 국가계약법을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했음에도, 공사가 임의로 예정 가격을 요율로 변경해 입찰을 진행함. 또한, 권익위에서도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공사를 지적
- 공사는 심지어 5억원짜리 용역에 담긴 여러 방안 중 손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를 선택해 계약을 진행하는 등 비상식적 계약을 진행함.
- 해당 계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함.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 **하영제** /

국민의 눈으로 지적, 대안 제시 정책개선 요구

주요 내용

공동주택 관리 및 공공택지 개발 관련 제도개선

-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입주민 부담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과 신설요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 임대업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방식 개선요구
-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방안요구
- LH공사 공공택지 '벌떼 입찰' 제도개선책 제시
-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미협의 추진 지적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정책의 문제점 제기

차세대 자율주행 통신 도입 및 동서화합 교통망 확보

- 한국도로공사 부채 대책 및 포트홀 배상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자동차 자율주행 통신방식의 휴대폰 기반 C-V2X 방식 도입검토
- 국민통합을 위한 동서연결 교통망 조기개설 촉구

미사용 철도 유휴부지 이관으로 국민 불편사항 해소

- 국가철도공단 철도 유휴부지 일반재산 이관요구
- 현재 40년인 철도시설물 노후화 내용연수 단축요구
- KTX특송 보안검색 문제점 지적 및 보안시스템 강화 주문
- 코레일네트웍스(주) 청렴도 지적 및 실태파악 요구

항공 MRO사업 추진, 인천공항 설립목적 위배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 MRO사업 추진 문제점 지적
-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수수료 인하 방안 수립요구

제3부 상임위별 국회의원 활동내용

여성가족위원회

2020
국정감사
백서

여성가족위원회

/ 국회의원 **김정재** /

여가부 보조금 지급 문제점 지적 및 박원순·오거돈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심 자세 촉구

주요 내용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의연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 내년부터 여가부에서 정의연 사업 직접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계획 부재
- 검찰, 윤미향·정대협에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6건 불구속 기소
- 국가보조금 불법 수령 기소에도 불구하고 또 정의연에 하반기 보조금을 정의연에 지급하는 문제 지적
- 여가부 국가보조금 불법 수령에 대한 문제점 개선 촉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여성가족부의 모호한 태도가 성추행·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양산

- 박원순·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를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바라봐야 함을 강조
- 박원순·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언급을 꺼리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될 수 있다고 지적
- 박원순·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의 본분 강조

여성가족부 사업 운영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 가출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 퇴소당하는 청소년 3년간 387명, 가출 청소년 선별적 보호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 필요
- 새일 여성 인턴제도, 초기 취업률 96%인데 반해 1년 후 고용유지율은 43%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및 고용 안정성 강화 위한 개선 강조

여성가족위원회

/ 국회의원 **김미애** /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묻다.

주요 내용

권력형 성범죄 근절 노력·의지 없는 여가부

-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이라 지칭, 2차 가해로 피해자 고통 가중되지만 사실상 방치
- 2차 피해 예방메시지 발표, 자치단체장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의 매뉴얼 개정 등 후속 조치 전무
- 박원순 전 시장 성폭행 서울시 현장점검 후 2개월이 훌쩍 지났고, 재발방지대책 미제출에도 대책방안 없는 실정
- 2017년부터 직장내 성폭력 근절 대책, 공공부문 대책, 방지보완대책, 체육분야 대책, 신고시스템 개선방안까지 모든 대책 망라했지만, 보여주기식 면피용에 불과, 제도·정책의 내실화 필요성

정의연(정대협)의 국고 보조금 편취 의혹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

- 정의연(정대협) 회계 부정에 대한 소극적 태도 일관
- 당초 정대협 회계장부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부정 사용으로 기소
- 문제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조치 요구, 하반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상향 필요

-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최대 5년 규정 불변
- 입소자 대부분 어려운 형편, 제대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입소기간 상향 조정 필요(최대 10년)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실태조사 필요

- 2017년 158명 북한이탈여성 상대로 설문조사, 57명(36%) 남한에서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피해 경험, 실태조사 통해 문제점 파악 및 예방책 마련 절실

여성가족위원회

/ 국회의원 **서정숙** /

여가부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 대응 필요·청소년 에이즈 예방 지원 강화해야

주요 내용

정의연과 여가부, 국민의 이름으로 회계 내역 투명성 강화해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인당 간병비 지원 2021년 예산에 증액 반영 확인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19년 회계 비리가 만연한 정의연으로 변경된 경위 지적

우리사회 내 미투운동 확산, 권력형 성범죄 반드시 근절되야

- 최근 성폭력사건은 위계에 의한 권력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사건으로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여가부 질책

청소년활동진흥원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민간분야 활성화을 도모해야

- 공공기관인 활동진흥원에 집중된 정책사업 중 민간이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최근 청소년활동진흥원 비리에 대해 여가부가 5년간 봐주기식 감사를 진행한것에 대한 비판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에 대해 예방책 필요

- 최근 에이즈 감염의 60%가 20~30대 젊은층이고, 특히 10대에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93%에 달함. 청소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감염 예방 정책 시행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인원 저조에 대한 지적, 1년에 한번 시행되는 검진에 대해 수시로 검진받을 수 있는 방안 촉구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촬영물 삭제, 상담 등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여가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법안 마련 촉구,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책 필요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밝힌 촬영범죄, 통신매체이용 음란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판결 피고인의 84%가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 이에 대해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여가위 대응노력 부족 지적

여성가족위원회

/ 국회의원 **양금희** /

여성가족부 존재 이유 상실한 '여당가족부'

주요 내용

끊임없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보다 정권 우선인 여성가족부

- 2018년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당시 여가부 포함,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권력형 성폭력 범죄 방조행위 처벌, 해당기관 조직문화 진단 및 재발방지시스템 마련, 피해자 보호소홀 징계추진 등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여가부 발표와 실제 시행내용 확인 및 실효적 대책 촉구
  - 여가부 내 특별신고센터에 부산시 성범죄 관련 3번의 신고처리, 2018년 서울시, 부산시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했으나, 형식적 처리 종료. 결국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및 박원순 시장 비서실 직원 동일 피해자 성폭행 사건 발생
  - 또한,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 가해자인 성범죄 신고가 16건 있었으나, 사건처리는 물론 결과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질타
-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검사 영전에 대해 여가부 장관의 안일한 인식 지적

국회 국정감사 방해한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사태

-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 감사를 위해 서울시 젠더특보 및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공무원들, 피해자 변호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모두 거부.
- 정대협.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준사기, 여가부 보조금의 부정수령 및 사기가 드러난 바, 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윤미향 당시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족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단 한명도 채택하지 않고 여당은 합의사항도 일방적 철회
-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정감사와 증인에 대한 국회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한 여당의 증인거부 사태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성 성토

조두순 출소 대책 및 성범죄자 관련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대책촉구

- 조두순 출소 대비 여가부의 철저한 준비와 특히, 보호수용과 같은 사회격리 필요성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을 당부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점검 결과, 2018년 163명에 이어 2019년 108명이 몰래 취업하거나 관련 기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등 매년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바, 법원, 경찰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조시스템 구축 및 점검 강화 주문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오류, 공개 사이트의 전산장애 발생 등 관련 제도의 허점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함.

여성가족위원회

/ 국회의원 **이양수** /

과제중심적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행정 펼쳐야

주요 내용

가장이 北에 의해 피살되고 정부의 월북 발표로 인해 명예를 짓밟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정을 철저히 외면

- 北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에 더하여 정부의 섣부른 월북 발표로 인해 명예 실추와 이에 따른 네티즌들의 2차 가해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에 빠져 있음.
- 여가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긴급위기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의원실에서 이 상황을 언급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안함.
- 여가부의 수동적이고 단순 과제중심적 행정을 지적하고 실제 우리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고 당부함.

위안부 할머니 보조금 횡령 의혹받는 정의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열람도 제대로 안시켜주는 여가부

- 정의연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께 지급된 정부 보조금의 집행 편차가 매우 크며, 확인이 어려운 지출항목의 집행률이 급증한 정황 포착
- 그러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은커녕 열람조차 제대로 안시켜주는 여가부
-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여가부의 자료제출·열람 적극 협조 요구

성범죄 근절 주무부처임에도 여가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 속에서 우리 사회 성범죄 증가 추세

- 폭력 예방교육에 디지털 성범죄·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지만 여가부는 해당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파악 안함.
- 몰래카메라 등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급증 추세
-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체육시설 등에서 규정위반 사례 속출
- 따라서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여성가족위원회

/ 국회의원 **전주혜** /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대책 수립 요구에도 이행 사항 全無 정의기억연대 국고보조금 환수 및 사업자 자격 박탈 촉구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권력형 성범죄 대응에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하여 국민 분노

- 오거돈 부산시장·박원순 서울시장 포함 연이은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미온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재발방지 대책 수립안도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국회는 여성가족부에 주무 부처 차원에서 권력형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수립 거듭 촉구해왔으나, 여가부는 지금까지도 방침 마련중이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
- 성범죄 피해자 호소에도 여성가족부는 보호기관측 요청사항 핑계대며 적극 조치 없고, 2차 피해 가중에도 피해자 보호 역할 전혀 못함.

정의기억연대 국고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보조 사업자 자격 박탈 주장

- 검찰 수사 결과 정의연(윤미향 前이사장)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은 6,520만원의 보조금 유용 논란 포함 업무상횡령,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이에, 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의 여성가족부 지원 보조금 전액 즉각 환수 요구
- 정의연의 보조금 사업자 자격 박탈 촉구 및 여가부의 철저한 직접 사업수행 요구
- 수요집회등 위안부 피해자 운동 및 활동 방향 설정시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 검토를 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민우회 후배 채용에 특혜 의혹 논란

-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민우회 후배 부정 채용으로 인사 감사 및 경찰 조사 받은 후, 무혐의 결과로 업무 복귀한 사실 지적하며, 논란 자체의 부적절함 지적
- 주무 감독기관인 여가부가 향후, 공공기관 등 불공정 채용 문제 없도록 시정하고, 적법한 인사시스템 마련 및 재발 방지 위한 인사 규정 개정 촉구

국민의힘